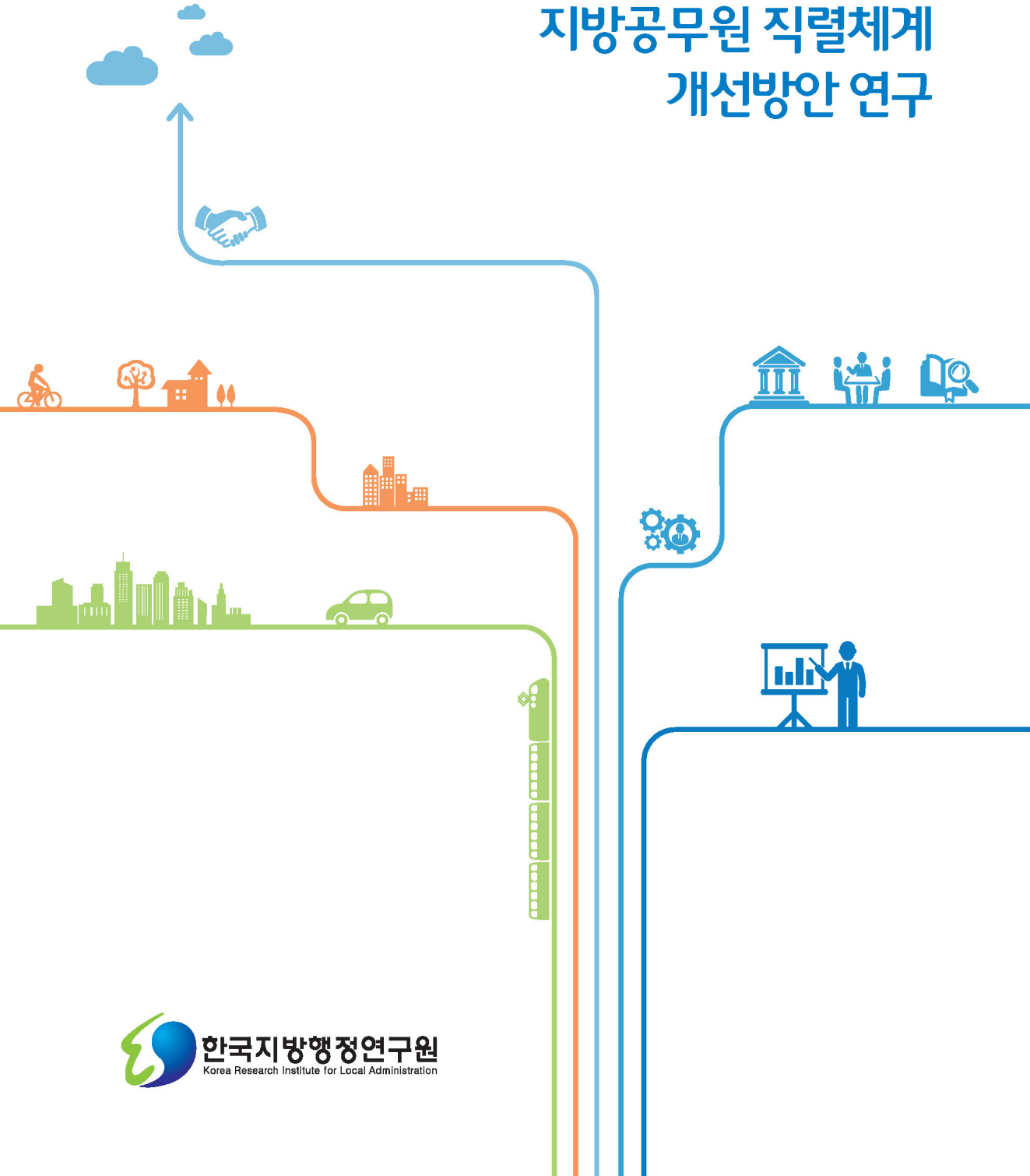


지방공무원 직렬체계 개선방안 연구



연구진

강영주(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금창호(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 요약

1. 연구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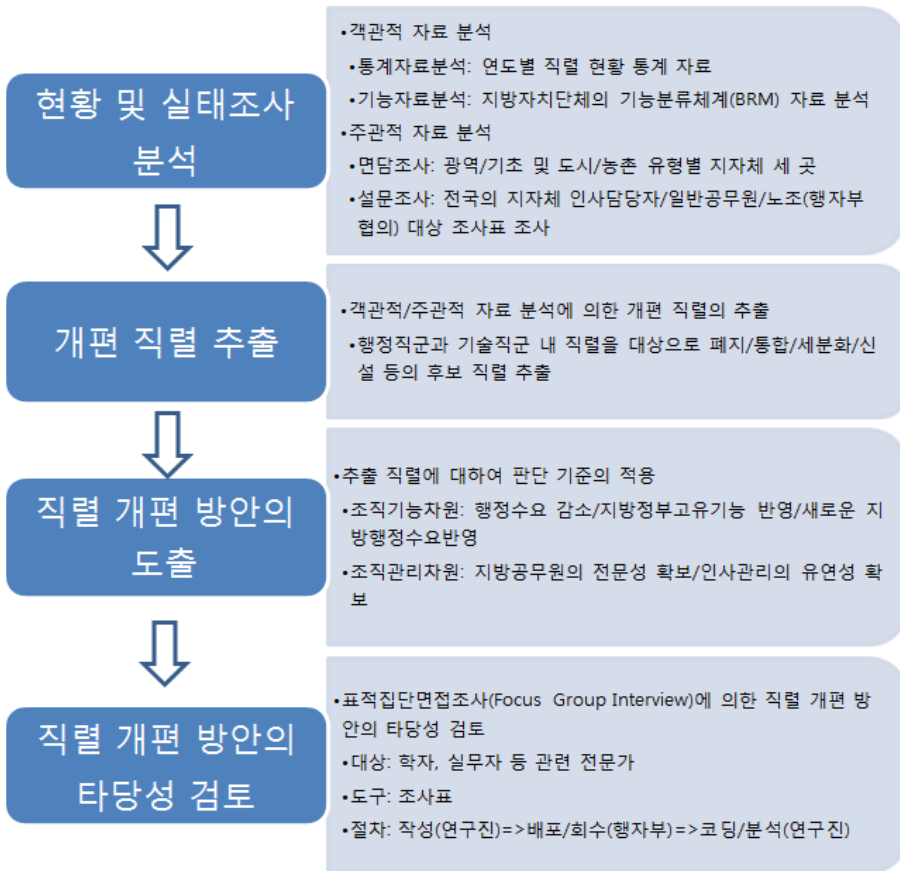
- 본 연구는 최근의 행정환경 변화와 지역 특성에 맞는 직렬체계 개편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임
 - 현행 지방공무원 직렬체계는 국가공무원과 사실상 동일한 직렬로 구성되어 지방정부 고유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부적합함
 - 또한 현재의 직렬체계는 일관적인 기준으로 분류되지 않아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음
 - 전문성 등 직무 특성에 있어 기타 직렬과 명확한 차이를 보이는 직렬의 경우에도 동일한 계급체계를 적용하는 등 경직적 운영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공무원 직렬별 직무 수행의 현황조사 및 인터뷰 등 결과를 반영하고, 외국 지방공무원 공직분류체계 및 주요 민간 기업 직위분류체계를 검토하여 자치역량의 제고와 원활한 지방자치사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직렬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임

2.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제언

- 본 연구에서서 직렬 개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음
 - 이론적 검토를 통해 개편 방안에 대한 판단기준을 도출(제2장)
 - 직렬 운영 현황에 관한 통계자료 등 문헌 자료 분석, 면담조사와 설문조사 분석에 근거하여 개편의 대상이 되는 직렬 추출(제3장)
 - 추출한 직렬들을 대상으로 제2장에서 도출한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직렬 개편 방안을 도출하고 도출된 개편 방안에 대한 타당성을 표적 집단 면

접(Focus Group interview)을 실시하여 검토한 후 최종 개편 방안 확정 (제4장)

<그림 1> 직렬 개편 방안 도출을 위한 분석 모형



○ 본 연구 결과 제시하는 직렬 개편 방안은 다음과 같음

<표 1> 직렬 개편 방안

직렬		개편 근거	개편방안
행정직군	행정	- 일반행정 업무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직류가 세분화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직류가 적으므로 직류통합을 통해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일반 행정(법무, 노동, 문화홍보, 통계)-기업행정(재경, 국제통상, 기업행정)	직류 통합
		- 운수직류는 지자체의 주요 기능이라기 보다는 관리 업무로서 운전직렬과 유사 업무를 담당하므로 운전직렬 또는 시설관리직렬과 통합	직류 통합
		- 문화재 보수 관리의 중요성에 따른 지자체 공무원의 문화재 관리감독 전문성 요구 - 문화재 관리 직류 신설	직류 신설
	세무	-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 강화 요구에 부응 - 회계직류 신설	직류 신설
	사회복지	- 지자체의 다양한 사회복지업무를 반영하여 직류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복지직렬 (아동청소년, 여성가족, 사회복지일반)	직류 세분화
	전산	- 전산 직렬은 전문성이 높은 정보화 업무 담당하므로 전문성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 필요(예, 지식정보관리직렬) - 정보보호에 대한 수요가 크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무이므로 직류 신설	명칭변경 직류신설
	숙기	- 지자체의 주요 기능이라고 보기 어려운 단순 업무로서 행정수요가 크지 않으므로 정보관리 차원에서 유사업무라 볼 수 있는 직렬과 통합 - 전산직과 통합하여 직렬(지식정보관리직렬) 내 직류로 신설	통합
	방호	- 방호 업무는 행정직군에 분류되기에 적합하지 않으며 주된 업무가 청사관리로 시설관리직렬의 업무와 유사함 - 시설관리직렬내 직류로 통합	통합
기술직군	위생	- 위생 직렬이 담당하는 주된 업무는 청사관리 업무로 지자체의 주요 기능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관리상의 수요가 있으므로 유사 직렬인 시설관리 내 직류로 통합	통합

<표 1> 직렬 개편 방안(표계속)

직렬		개편 근거	개편방안
기술직군	조리	- 소수직렬로서 담당 업무가 지자체의 주요 기능이라고 볼 수 없으며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업무분야이므로 폐지	폐지
	공업	- 더 이상 행정 수요가 없는 직류들을 폐지하고 유사 직류들을 통폐합 - 야금직류 폐지, - 기계(농업기계, 기계운전, 조선)-전자(일반전기, 전자)-화공(원자력, 금속, 섬유, 가스, 자원)	직류 통합
	항공	- 지방공무원 항공직렬이 운용되는 조직이 거의 없음. 즉 행정수요가 거의 없음	폐지
	해양수산	- 직렬 내 유사 직류 간 통폐합 필요 - 일반해양-수산(일반수산, 수산제조, 수산증식, 어로, 수산물검사)-선박(선박항해, 일반선박)	직류 통합
	보건진료	- 보건진료 직렬은 근무장소(보건진료원)의 차이점만 있을 뿐 직무 내용 및 전문성의 수준이 간호직렬과 유사하므로 간호직렬과 통합 - 다만 일반 보건소에서의 간호직렬의 업무보다는 보건진료소에서 특수 업무가 요구되므로 직렬내 직류로 신설	통합
	의료기술	- 보건소 내에 다양한 과 설치 경향 등 다양한 전문 업무 분야를 반영한 직류 설치 - 의료기술(물리치료, 방사선, 임상병리, 치과위생)	세분화
	간호조무	- 간호조무 직렬이 담당하는 업무는 간호직렬과 업무의 유사성은 높으나 난이도상 차이가 있으므로 간호직렬 내 직류로 통폐합	통합
	운전	- 운전 직렬의 업무는 지자체의 주요 기능이 아니나 관리 차원의 수요가 있으므로 시설관리내 직류로 통폐합	통합
신설직렬	감사	- 지자체 감사 업무는 내외부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문성이 요구됨	신설

<표 2> 방안별 직렬 개편 방안

개편방안	해당직렬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리직렬 • 항공직렬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호직렬+간호조무직렬+보건진료직렬 • 위생+시설관리 • 방호+시설관리 • 운전+시설관리 • 운수(직류)+시설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직렬: 일반 행정(법무, 노동, 문화홍보, 통계)-기업행정(재경, 국제통상, 기업행정) • 공업직렬: 기계(농업기계, 기계운전, 조선)-전자(일반전기, 전자)-화학(원자력, 금속, 섬유, 가스, 자원) • 해양수산직렬: 일반해양-수산(일반수산, 수산제조, 수산증식, 어로, 수산물검사)-선박(선박항해, 일반선박)
세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직렬(문화재관리직류 신설) • 세무직렬(회계직류 신설), • 의료기술직렬(방사선직류, 임상병리직류, 물리치료직류 신설) • 사회복지직렬(아동청소년, 여성가족, 사회복지일반) • 전산직렬 내 정보보호직류 속기 직류 신설 • 간호직렬 내 간호조무직류, 보건진료직류 신설 • 시설관리 직렬 내 운전직류, 위생직류 신설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직렬
명칭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산직렬 --> 지식정보관리직렬

차 례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1. 연구의 범위	4
2. 연구의 방법	5
제3절 연구의 체계	5
제2장 지방공무원 직렬체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	7
제1절 지방공무원 직렬체계의 의의	9
1. 직렬체계의 개념	9
2. 우리나라 지방공무원 직렬체계	11
제2절 우리나라 직렬체계 개편에 관한 선행 연구 ..	15
1. 우리나라 공직분류체계의 문제점과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15
2. 우리나라 직렬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16
3. 소결	21
제3절 외국 지방공무원 직렬체계 사례	23
1. 미국의 공직분류체계	23
2. 영국의 공직분류체계	26
3. 일본의 공직분류체계	27
4. 시사점	28
제4절 지방공무원 직렬체계 개편 방안의 판단 기준	29
1. 개편방안에 대한 판단 기준	29

2. 판단기준의 적용과 개편 방향	30
제3장 지방공무원 직렬체계 운영 현황과 실태조사결과 분석	31
제1절 분석모형 설계	33
제2절 지방공무원 직렬체계 운영 현황	34
1. 일반직 지방공무원 직렬별 현황	34
2. 일반직 지방공무원 직렬별 직무 내용	45
3.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분석	49
4. 소결	59
제3절 실태조사분석	60
1. 면담조사	60
2. 설문조사	65
3. 소결	84
제4절 개편 대상 직렬의 추출	87
제4장 지방공무원 직렬체계 개선방안 도출	89
제1절 개요	91
제2절 직렬 개편 방안의 도출	92
1. 판단기준의 적용	92
2. 개편 방안별 정리	95
제3절 개편 방안의 타당성 검토	96
1. 개요	96
2. 개편 방안의 타당성 검토	96



제5장 결론 101

제1절 요약 103

- 1. 연구 목적 103
- 2. 연구 방법 103
- 3. 연구 결과 105

제2절 연구의 한계 108

- 1. 연구 방법상의 한계 108
- 2. 연구 내용상의 한계 108

참고문헌 109

부록

- 1.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1) · 112
- 2. 설문조사표 116

표 차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표 2-1>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상대적 특성비교 10
- <표 2-2> 2012년 국가·지방 공무원법 전면 개편의
내용 13
- <표 2-3> 일반직 직군·직렬 구분 14
- <표 2-4> 우리나라 공무원 직렬체계 개편에 관한
선행 연구 19
- <표 2-5> 뉴저지 주정부의 행정분석 업무 담당
공무원들 직급 구분 사례 24
- <표 2-6> 외국 지방공무원 직렬체계 27
- <표 2-7> 지방공무원 직렬체계 개편의 기준과
직렬개편 방안 30
- <표 3-1> 2013년 말 기준 지방공무원 직군별 인원수
현황 34
- <표 3-2> 연도별 지방공무원 직군별 인원수 현황 35
- <표 3-3> 2013년 말 기준 지방공무원 직렬별 인원수
현황 36
- <표 3-4> 지방공무원 인원(현원)수별 직렬 분포 38
- <표 3-5> 연도별 지방공무원 직렬별 인원수 현황 40
- <표 3-6> 행정직군 직렬 변동 현황 42
- <표 3-7> 기술직군 직렬 변동 현황 42
- <표 3-8> 직렬별 직무 내용 48
- <표 3-9> 2013년 기능분류체계(BRM)자료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 50
- <표 3-10> 지방자치단체 기능분류체계(BRM) 52
- <표 3-11> 지방자치단체 기능과 해당직렬 58
- <표 3-12> 문헌자료분석을 토대로 한 개편 대상
직렬의 추출 60
- <표 3-13> 면담 조사 개요 61





<표 3-14> 면담 조사 내용	63
<표 3-15> 설문조사의 개요	66
<표 3-16> 응답자 특성	67
<표 3-17> 직급(직렬)체계 개선의 필요성	69
<표 3-18> 현 직급(직렬)체계의 문제점(중복응답)	71
<표 3-19> 폐지 대상 직렬(중복응답)	72
<표 3-20> 직렬 폐지 이유	74
<표 3-21> 직렬 폐지 없음 선택 이유	75
<표 3-22> 통합 대상 직렬(중복응답)	76
<표 3-23> 직렬 통합 이유	78
<표 3-24> 통합 직렬 없음 선택 이유	78
<표 3-25> 통합 대상 직류가 포함된 직렬(중복응답)	79
<표 3-26> 직렬 내 직류 재분류(중복응답)	80
<표 3-27> 세분화 대상 직렬(중복응답)	81
<표 3-28> 직렬 세분화 이유	82
<표 3-29> 신설 직렬과 신설 이유	83
<표 3-30> 명칭 변경 직렬과 변경 이유	84
<표 3-31> 실태조사를 근거로 한 개편 대상 직렬의 추출	86
<표 3-32> 개편 대상 직렬의 추출	87
<표 4-1> 직렬 개편안 검토	92
<표 4-2> 직렬 개편 방안	95
<표 4-3> 표적집단면접(FGI) 조사의 개요	96
<표 4-4> 표적집단면접(FGI) 조사의 결과	97
<표 5-1> 직렬별 직렬 개편 방안	105
<표 5-2> 방안별 직렬 개편 방안	107
<표 A-1>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제3조제1항 관련)	112

그림 차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그림 1-1> 직렬 개편 방안 도출을 위한 분석 모형	6
<그림 2-1> 지방공무원 직급체계 개편의 기준	29
<그림 3-1> 직렬 조정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분석 모형	33
<그림 3-2> 행정직군 직렬별 분포	37
<그림 3-3> 기술직군 직렬별 분포	37
<그림 3-4> 행정직군 직렬별 변동 현황	44
<그림 3-5> 기술직군 직렬별 변동 현황	44
<그림 3-6> 행정직군과 기술직군의 최적 직렬수 판단에 대한 비대칭성	64
<그림 3-7> 직급(직렬)체계 개선의 필요성	69
<그림 3-8> 폐지 대상 직렬(중복응답)	73
<그림 3-9> 통합 대상 직렬(중복응답)	77
<그림 4-1> 직렬 조정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분석 모형	91
<그림 5-1> 직렬 개편 방안 도출을 위한 분석 모형	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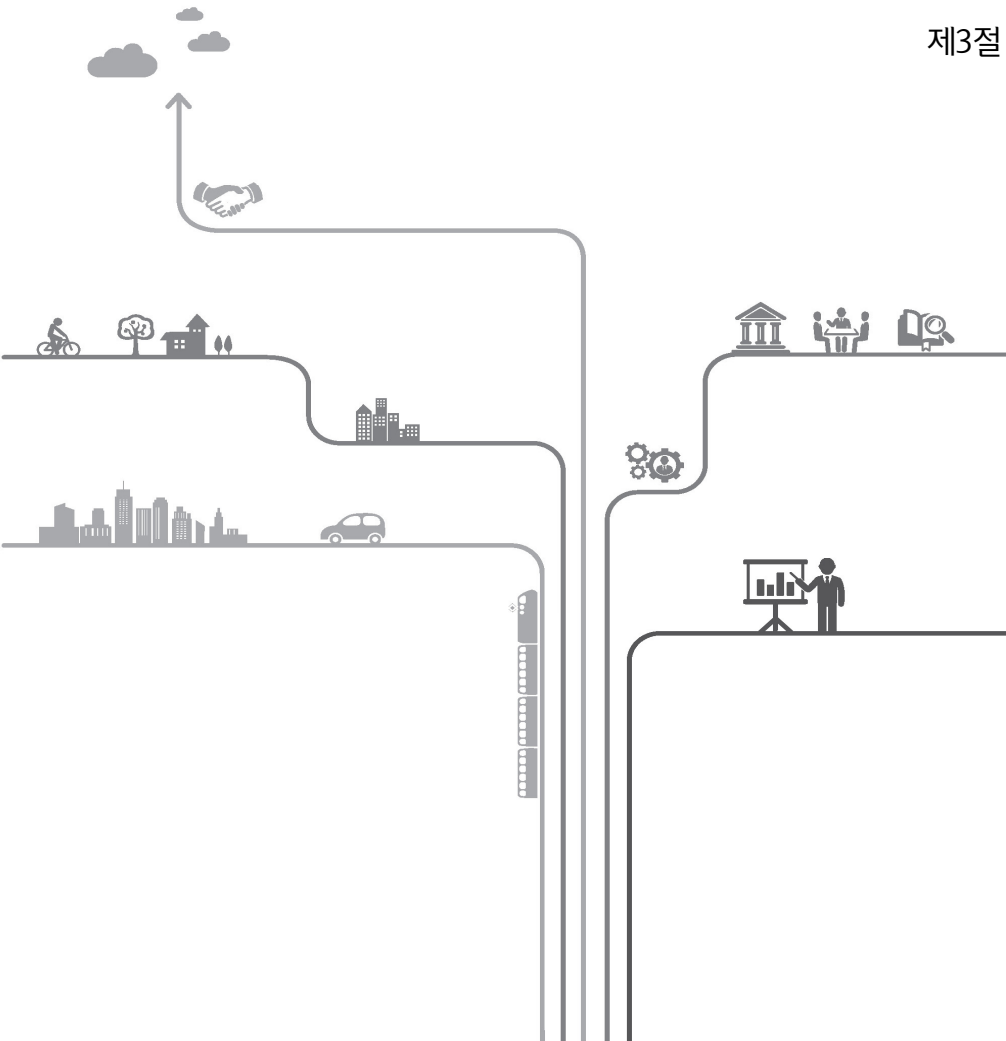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3절 연구의 체계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최근의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 변화와 지역 특성에 맞는 직렬체계 개편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임
 - 복잡성, 다원성, 가변성 및 개방성을 특징으로 하는 최근의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탄력적인 인력관리와 합리적인 공직 분류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함
 - 정보기술과 과학기술의 발전은 지식사회로의 전환과 정책환경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와 정부의 정책문제는 점차 복잡·다양화되고 있음
- 지방분권화의 진전으로 말미암은 지방정부에 대한 행정수요의 증가는 집행 기능 수행에 필요한 능력 이상의 공직경쟁력과 전문성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지방공무원 직급체계는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국가공무원과 사실상 동일한 직렬로 구성되어 지방정부 고유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부적합함
 - 또한 현재의 직렬체계는 일관적인 기준으로 분류되지 않아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음
 - 전문성 등 직무 특성에 있어 기타 직렬과 명확한 차이를 보이는 직렬의 경우에도 동일한 계급체계를 적용하는 등 경직적 운영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각도의 근거 자료를 토대로 지방행정의 특성에 부합하는 직렬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임

- 지방공무원 직렬별 통계 분석, 직무 수행의 현황조사 및 지방자치단체 기능분류체계(BRM) 조사 등 객관적 자료 조사와 면담조사 및 설문조사 등 주관적 자료 조사 등을 토대로 자치역량의 제고와 원활한 지방자치 사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직렬체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1) 분석 대상

- 지방공무원 일반직 직렬(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1-부록 참고)
 - 본연구는 1~9급 계급으로 구분되는 일반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관리운영직군은 행정·기술직군내 유사업무를 담당하는 직렬로 전직 중에 있어 향후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본 연구에서 제외

2) 분석 내용

- 직렬 현황 및 실태 조사
 - 각 직렬별 구체적인 업무 내용, 난이도·책임도 등 업무 성격, 채용자격 등 조사
 - 그 외 보직경로, 인사 운영상의 특징 업무 또는 환경상의 최근 변화 유무, 기타 인사고충 사항 등 조사
- 직렬 신설 및 통합 등 타당성 분석에 의한 직렬체계 개편 방안 마련
 - 직렬의 분리 및 신설이 필요한 직무분야 발굴
 - 유사한 직렬 간 직무 내용 분석 및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근거로 직렬 통합 타당성 분석

2. 연구의 방법

- 문헌조사
 - 공직분류체계에 대한 보고서, 논문, 외국 문헌의 조사 등 이론적 논의 검토
 - 선진 외국 사례에 대한 조사 및 분석
 - 직렬별 현원 등 연도별 추이에 관한 통계자료 분석
 - 직렬별 담당 직무 내용 조사 및 기능분류체계(BRM) 자료를 토대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분석
- 면담조사
 - 광역 및 기초/ 도시지역 및 농촌지역 각 유형을 대표하는 지자체를 선정하여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직렬 운영 현황 및 개편 방안에 관한 심층 면담조사
- 설문조사
 - 전국 지자체 인사담당자 및 일반공무원(노조 포함)을 대상으로 현행 직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 표적 집단 면접법(Focus Group Interview)
 - 관련전문가 및 담당공무원 대상으로 연구결과 제시되는 대안들에 대한 Focus Group Interview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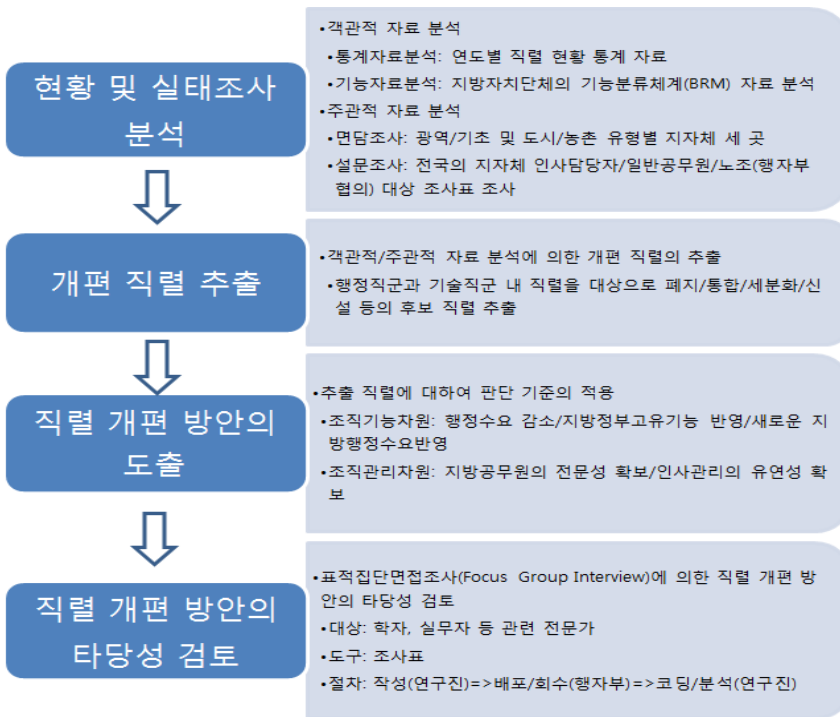
제3절 연구의 체계

- 지방공무원 직렬체계 개선방안 제시를 위한 연구의 논리적 구조는 다음과 같음
 - 이론적 검토를 통해 개편 방안에 대한 판단기준을 도출(제2장)
 - 직렬 운영 현황에 관한 통계자료 등 문헌 자료 분석(객관적 자료 분석),

면담조사와 설문조사 등 실태조사분석(주관적 자료 분석)에 근거하여 개편의 대상이 되는 직렬 추출(제3장)

- 추출한 직렬들을 대상으로 제2장에서 도출한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직렬 개편 방안을 도출하고 도출된 개편 방안에 대한 타당성을 표적 집단 면접(Focus Group interview)을 실시하여 검토한 후 최종 개편 방안 확정 (제4장)

<그림 1-1> 직렬 개편 방안 도출을 위한 분석 모형



제2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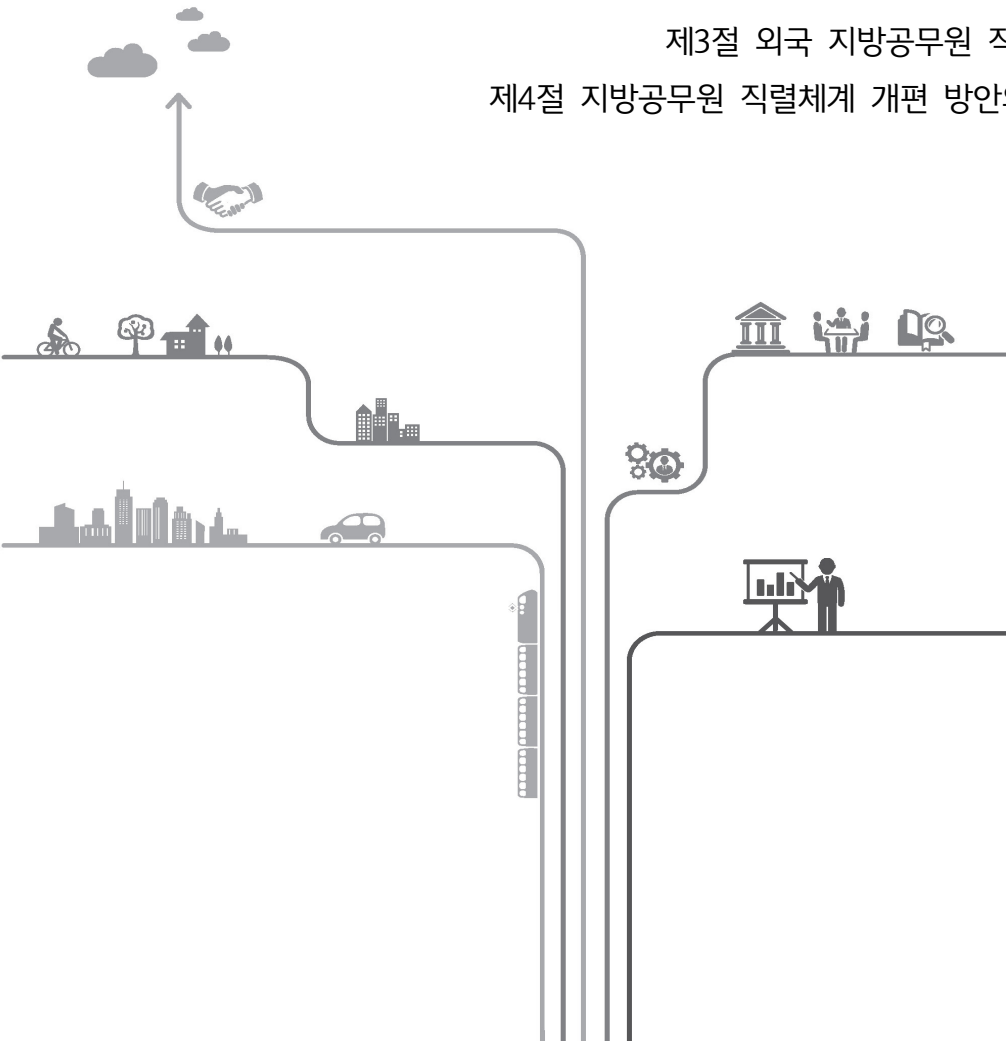
지방공무원 직렬체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지방공무원 직렬체계의 의의

제2절 우리나라 직렬체계 개편에 관한 선행 연구

제3절 외국 지방공무원 직렬체계 사례

제4절 지방공무원 직렬체계 개편 방안의 판단 기준



제2장

지방공무원 직렬체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지방공무원 직렬체계의 의의

1. 직렬체계의 개념

1) 공직분류의 개념

- 정부 조직 및 지자체 내 직위의 관리를 위하여 일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질서 있게 분류하고 배열하는 공직의 분류는 공직의 구조화 내지 공직의 배열이라고 할 수 있음
- 전형적인 공직분류모형은 사람을 중심으로, 책임을 중심으로 분류하는 수직적 분류모형으로서의 ‘계급제’와 직무를 중심으로 분류하는 수평적 분류모형으로서의 ‘직위분류제’가 있음
- ‘직위분류제(position classification)’의 경우 공직을 분류함에 있어 ‘직무’ 또는 ‘직위(job or position)’에 기초를 두어 직무의 종류, 곤란도, 책임도 및 자격요건의 차이에 따라 일정한 분류원칙과 방법에 의하여 공직을 분류, 정리하는 방식임
- ‘계급제(rank-in-person)’의 경우 ‘사람’에 기초를 두고 사람들의 상대적인(비교적인) 지위, 자격, 학력 및 능력을 기준으로 계급을 구분하는 방식임
- 우리나라의 경우 계급분류제를 기본으로 하며, 직위분류제는 보완적 지위에 있음
 - 1960년대에 급격히 고조되었던 직위분류제의 도입은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사정에 의해 크게 후퇴하였으며,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24조에서는 ‘일반직을 대상으로 하는 직위분류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기 쉬운 것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하여 제도의 점진적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표 2-1>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상대적 특성비교

구분	특성	
	계급제	직위분류제
분류단위	계급	직위
채용기준	잠재적·일반적 능력	전문 능력
경력발전	일반행정가 (generalist)	전문행정가 (professionalist)
임용체계	폐쇄형	개방형
신분보장	강함	약함
인사이동	광범위하고 신축적임	제한적이고 경직적임
직업공무원제 확립	유리함	불리함
공무원의 시각	종합적이고 광범위함	부분적이고 협소함
행정의 전문화	장애	기여
직무수행의 형평성	낮음	높음
보수	동일계급 동일보수	동일직무 동일보수
인사관리 (교육훈련, 승진, 평가, 보상 등)	연공서열 중심, 상관의 자의성 개입 용이	능력·실적 중심, 객관적 기준 제공

자료 : 강성철 외(2001); 유민봉(1997); 김신복(2003)에서 재인용

2) 직렬체계의 개념

○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5조에 따른 각 직제의 정의

- 직위(職位)란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함
- 직급(職級)이란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群)을 말하며, 같은 직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임용자격·시험, 그 밖의 인사행정에서 동일하게 취급함
- 직군(職群)이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말함
- 직렬(職列)이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함

- 직류(職類)란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을 말함
- 수평적 공직분류체계에 해당하는 직군·직렬·직류의 구분은 직무의 유사성의 정도에 따라 분류되며 각각을 구분하는 확립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다만 실무적으로 인사관리의 적용 범위가 달라지는 단위가 되기도 함
 -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4급 이상 고위직의 승진은 직군 내의 모든 직렬에서 경쟁하게 됨
 - 그러나 채용은 직류별로 이루어지며, 보직관리, 근평의 단위는 실무적으로 직렬 또는 직류별로 운영하고 있음

2. 우리나라 지방공무원 직렬체계

1) 연혁

- 우리나라의 직위분류제는 광복 후 미군정 기간에 처음으로 도입·실시되었다가 1948년 정부수립과 함께 계급제로 환원됨
- 1963년의 박정희 정부에서 다시 직위분류제의 실시를 규정하고 이의 실시를 위한 작업까지 마쳤으나 계급제의 토양에 접목시키기가 힘들었고 직무분석이 미비했던 등의 이유로 1973년에 법적 근거였던 직위분류법이 폐지되었음(유민봉, 2002)
 - 1963년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공무원법 제3장에 직위분류제와 관련된 조항들을 신설하였고, 1973년 폐지되었지만 1963년 11월 직위분류제법을 제정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현행 국가공무원법 전문에는 아직도 직위분류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동법 25조는 직위분류제의 기본 용어의 정의를 내리고 있음
- 하지만 우리나라는 직위분류제의 구체적인 규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을 뿐 실제로 직위분류가 적용되는 경우는 드물
 - 현재 법제도상으로는 직렬이 시험의 과목과 응시자격, 전보·승진의 경로,

교육훈련의 단위, 그리고 정원관리의 기준이 되고, 직류는 시험과목과 응시자격의 기준이 되나, 운영상으로는 채용, 근평, 보직관리, 승진 등의 인사관리가 직류 단위로 운영되고 있음

- 특히 이들 직위분류제의 기본 용어들은 직무조사와 분석 및 평가를 거쳐 도입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공직을 분류하고 구분하기 위한 도구들에 불과하여, 아직도 기본적으로 계급제가 우선되는 체제를 고수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우리나라 공무원 인사제도의 근간인 직업공무원제는 공무원들의 성실한 직무수행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와 원칙들을 토대로 수립되며, 그 대표적인 것이 계급제, 폐쇄형 충원체제, 일반능력자 중심의 임용, 신분보장 등임
- 직업공무원제는 폐쇄형 임용체계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직위분류제는 개방형 임용체계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직업공무원제와 계급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직위를 대상으로 개방형 임용(개방형 직위, 직위공모제 등)을 실시하고 있음
- 2006년부터 우리나라도 고위공무원의 계급을 폐지하고 직무등급제를 적용한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음
 - 직무등급이 적용되고 있는 고위공무원단은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강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2) 현황

- 한국은 1981년 국가 공무원법의 개정이 있기 이전에는 실적의 적용과 신분보장 여부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으로 분류함
- 그러나 1981년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대폭 개정하여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경력직 공무원으로, 그리고 실적의 적용 여부가 일률적이 아

니면서,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공무원을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하여 분류하고 있음

- 또한 2012년에도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전면 개편하였는데 이때, 경력직 내 일반직과 기능직의 구분을 없애고 통합하였음)
 - 2012년 당시 안전행정부는 공무원 인사관리의 효율성, 직종 간 칸막이 해소, 소수 직원 공무원의 사기 제고 등을 위해 50년 만에 공직사회의 직종 통합, 간소화를 이뤄냄
 - 이번 직종개편은 공무원 직종의 전면 개편에 따라 향후 인사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그간 일반직과 유사한 업무를 하면서 직종이 다른 소수직종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하였음

<표 2-2> 2012년 국가·지방 공무원법 전면 개편의 내용

직종	개편 내용
기능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직은 1963년 전화교환·수리, 인쇄, 타자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신설, 이후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직렬이나 계급체계 등이 조정되어 왔음 - 최근에는 과거에 필요했던 기능적 업무영역이 축소·변경되어 사실상 일반직과 유사한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기능직 직종이 폐지되고 일반직에 통합됨 - 종전 기능직 중 방호·운전 등 고유한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는 새로 신설된 직렬로 전환되고, 사무·기계 등 종전 일반직에 유사한 업무를 하는 직렬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평가를 거쳐 단계적으로 해당 직렬로 통합될 예정임
별정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부터 규정된 직종으로, 당시 국무위원·비서 등 특정 직위가 해당되었고, 이후 직종 체계가 변화하면서도 본질적으로는 특정 자격요건에 따라 임용되어 실적주의나 신분보장이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을 의미했음 - 이후 점차 일반직과 유사하게 채용되고 홍보·외국어 등 전문분야나 시설 관리·사무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별정직이 많아져서 직종 간 경계가 모호해진 문제가 있었음 - 직종개편에 따라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비서·비서관은 별정직으로 존치되고, 그 외의 직원들은 업무성격에 따라 일반직 내에 신설되는 ‘전문경력관’ 또는 종전 일반직 유사직렬로 전환됨

1) 정책브리핑(2013.12.11.), 문화체육관광부

<표 2-2> 2012년 국가·지방 공무원법 전면 개편의 내용(표계속)

직종	개편 내용
별정직	- ‘전문경력관’은 특정 전문성이나 경험이 필요해 순환전보가 곤란한 직위에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로서 계급이나 직렬 구분이 없이 재직기간에 따라 보수가 상승하도록 설계된 공무원으로, 종전 일반직 공무원 중에도 해당 직위에서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고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전문경력관으로 전환할 수 있음
계약직	- 1973년 1년 이내로 근무하는 계약직원이 제도의 시발이며, 1981년 공무원 직종 중 ‘전문직’으로 편입되었다가 1998년 계약직으로 명칭이 변경됨 - ‘계약’은 기간을 정해 근무하게 하는 임용의 형태로 직종 구분에 맞지 않아 폐지되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일정 기간 근무하는 공무원 제도는 계속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직 내에 ‘임기제’ 제도를 신설해 전환됨 - 기존 계약직은 보수 등급(예 : 연봉등급 1~9호)으로 구분되어서 명확한 호칭이 없었으며 계약기간 중 신분보장이 되지 않아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언제라도 계약이 해지될 수 있었으나, 임기제 공무원이 되면 사무관·주사 등 일반직과 동일한 직급명칭을 쓰게 되고 임기 동안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면직이 불가능해지는 등 신분보장이 강화됨

○ 이와 같은 개혁의 결과로 현행 지방공무원의 경력직·일반직종 공무원의 직군별 직렬 분류체계는 아래와 같음

- 일반직종 내 직군은 행정직군, 기술직군, 관리운영직군으로 3개가 있으며 행정직군에는 8개의 직렬이 포함되어 있고, 기술직군에는 22개의 직렬이, 관리운영직군에는 16개의 직렬이 포함되어 있음

<표 2-3> 일반직 직군·직렬 구분

직군	직렬(직류)
행정	행정(일반행정, 법무행정, 재경, 국제통상, 노동, 문화홍보, 감사, 통계, 기업행정, 운수), 세무(지방세), 전산(전산), 교육행정(교육행정), 사회복지(사회복지), 사서(사서), 속기(속기), 방호(방호, 경비)
기술	공업(일반기계, 농업기계, 기계운전, 조선, 일반전기, 전자, 원자력, 금속, 야금, 섬유, 일반화학, 가스, 자원), 농업(일반농업, 잠업, 식물검역, 농화학, 축산, 생명유전), 녹지(산림자원, 산림보호, 산림이용, 조경), 수의(수의), 해양수산(일반해양, 일반수산, 수산제조, 수산증식, 어로, 수산물검사, 일반선박, 선박항해, 선박기관, 해

<표 2-3> 일반직 직군·직렬 구분(표계속)

직군	직렬(직류)
기술	양교통시설, 보건(보건), 식품위생(식품위생), 의료기술(의료기술), 의무(일반의무, 치무), 약무(약무, 약제), 간호(간호), 보건진료(보건진료), 환경(일반환경, 수질, 대기, 폐기물), 항공(일반항공, 조종, 경비), 시설(도시계획, 일반토목, 농업토목 수도토목, 건축, 지적, 측지, 교통시설, 도시교통설계, 디자인), 방재안전(방재안전), 방송통신(통신사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기술), 위생(위생, 사역), 조리(조리), 간호조무(간호조무), 시설관리(시설관리), 운전(운전)
관리운영	토목운영(토목운영), 건축운영(건축운영, 배관운영), 통신운영(통신운영), 전화상담운영(전화상담운영), 전기운영(전기운영), 기계운영(기계운영, 영사운영), 열관리운영(열관리운영), 화공운영(화공운영), 가스운영(가스운영), 기후환경운영(기후환경운영), 선박항해운영(선박항해운영), 선박기관운영(선박기관운영), 농림운영(영림운영, 원예운영), 사육운영(사육운영), 보건운영(보건운영), 사무운영(위드운영, 필기운영, 계리운영, 사서운영, 전산운영)

제2절 우리나라 직렬체계 개편에 관한 선행 연구

1. 우리나라 공직분류체계의 문제점과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 주삼식(1999)은 우리나라 공직 분류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개선점이 무엇인지를 인사 행정 차원에서 연구하였음
 - 우리나라 인사행정의 기초인 계급제를 직위분류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몇 차례의 시도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계급제의 요소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함
- 김명식(2003)은 공직분류체계 중 계급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직무 중심 인사 구조로 전환을 모색하기 위해 해외 사례인 호주의 정책과 우리나라의 상황을 비교함
 - 공직 분류의 무원칙성, 불균형, 다원화하고 복잡한 행정 수요를 모두 반영하지 못한 점, 인적 자본 관리의 효율성 및 탄력성을 제고하지 못하는

이유 등 경력직 공무원의 경우에 각각의 채용 시험에 합격하고 들어오지 않는 한 직종 및 직렬 간의 이동이 거의 불가능한 점 등을 지적함

- 조성대(2003)는 인사 행정에 내포되어 있는 제도적 모순과 문제들을 개선 및 보완하는 목적으로 이론적인 분석을 하였음
 - 우리나라 공직분류제도는 계급제의 근간 위에 직위분류제를 가미한 절충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직위분류제의 핵심인 직무의 책임성과 곤란성에 따른 합리적 보수 제도를 더 강화하기 위해, 동시에 성과급제를 함께 도입해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등의 제안을 함

2. 우리나라 직렬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1) 국가직 공무원의 공직분류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 하미승 외(2007)는 직무 중심의 합리적 직급 체계로 재설계 할 수 있도록 직종 및 계급체계 개편방안을 제시함
 - 우리나라의 경력직, 특수경력직의 구별 기준이 모순하는 중간형태의 직종을 찾아내, 직종 간 구분 기준에 결여된 일관성, 잦은 순환보직에 따른 전문성과 책임성의 저하 현상을 지적하며, 공무원 인식을 조사해서 공직분류체계(직종, 직군, 직류)를 행정환경변화와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다양화하고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 김영우(2005)는 공직분류체계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공무원제도의 성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음
 - 전반적으로 계급제적 특성이 강하지만 일부 직위 중심의 인사관행도 존재하고, 특히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이 오히려 계급제적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보직 관행의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음
 - 이에 계급제적 인사관행에서 비롯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직무호봉제 도입, 공무원법 적용 범위의 축소 등 새로운 직위 분류제적 요소의

도입을 제안했고, 반계급제적 인사관행에서 발생하는 빈번한 순환보직과 인사관리의 탄력성 부족의 대안으로 직급과 직위의 분리운영과 직급 위주의 인사관리를 제시함

- 조경호 외(2005)는 지식정보화, 다원화, 개방화, 전문화로 상징되고 있는 행정 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직 전문성과 인사관리의 탄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직종, 직렬체계 재설계 방안을 연구하였음
 - 인사담당자와 공무원 직장협의회 임원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행 공직 분류체계에 대한 실증조사를 실시해 분석한 결과, 몇몇 직종의 통폐합 필요성이 나타났으며, 직렬도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렬들을 통합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또 행정변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새로운 행정 수요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새로운 직렬을 신설할 필요성을 제시함

2) 지방직 공무원의 직렬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 최병대 외(1999)는 서울시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 보직경로제 도입 및 직렬, 직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시 4급 이상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를 분석하고, 전 현직 서울시 공무원과 전문가들에 대한 설문,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음
 - 직렬 직류의 개선방안은 단기적인 대안으로 미배정된 정원, 저조한 미활용 직렬 직류에 대해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였고, 중장기적으로는 행정직렬과 토목직렬의 직렬의 세분화를 대안으로 제안했음
 - 또 희소직렬들에 대해서는 인력관리의 효율성과 함께 업무의 전문성과 업무생산성 제고 방안으로 전문직화를 제시함
 - 그러나 인력관리 변화가 공무원 개인의 승진기회 같은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개혁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확인 수 있었음
- 한영수, 김필두(2004)는 공무원의 실질적인 능력을 반영시킬 수 있는 새로

은 지방공무원 계급 체계 및 보수체계를 제안하고자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음

- 직렬과 관련해서는 각 계급과 그에 따른 직무를 명확히 제시하여 목표 관리제와 연봉제 실시를 위한 기반을 구축해야 계급과 보직의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다고 함
- 보수등급제를 통해 보수와 직무를 일치시켜서 업무의 난이도와 책임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같은 계급이기 때문에 동일한 보수를 받는 불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직렬 간 승진 기회의 불균형 문제도 해결하도록 제안함

○ 임승빈(1996)은 지방공무원의 전문성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외국사례조사, 설문조사 실시한 내용을 토대로 지방공무원의 직렬 재조정 방안을 제시하였음

- 향후 행정수요가 예측되는 사회복지, 환경, 자원, 방재, 정보통신, 교통분야의 직렬을 늘려 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단순노무직에 가까운 기능직 직렬은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여성아동복지, 사회복지, 장애아동복지, 노인복지의 직류신설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희소직렬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근무평점을 절대평가제로 실시하는 방안과 광역자치단체에서 희소직렬에 대한 공통관리를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하였음
- 또한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및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제한된 범위내나마 실적제에 바탕을 둔 차등급여제 혹은 계약제공무원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한데, 기술직의 직렬과 일반행정직의 직렬에 대한 급여를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지방공무원의 전문성과 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렬의 신설 및 폐지에 관한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에게는 위임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음

- 김필두·금창호(1999)는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기능 그리고 행정수요변화의 전망을 토대로 공직분류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광역시·시·군 1개씩을 선정하여 사례조사를 실시하였음
- 수직적 분류체계의 개편방안으로 현행의 9계급제 조직구조와 직무구조에 부합하도록 실무계급, 관리계급 및 기획계급의 3계급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수평적 분류구조의 개편대안으로는 직렬의 축소조정방안, 직렬의 통합 또는 분리방안, 직렬의 신설방안 등 3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는데, 직렬구조의 개편원칙으로 전문성의 강화원칙과 정부기능의 부합원칙을 제시하였음
 - 지방공무원의 직렬 중에서 행정수요도 없고 공무원도 배치되지 않은 직렬들은 폐지(섬유직렬, 항공기직렬, 운수직렬, 통신사, 통신기술 등) 또는 통합(운수직렬, 교통직렬, 전산직렬, 통신직렬 등), 행정수요가 증가되거나 새로운 행정수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직렬은 신설(행정직군에서 의사, 외국어, 문화관광, 국제통상직렬 등을, 광공업직군에서 신소재, 식품가공, 특수기계직렬 등을, 보건의무직군에서 영양검진직렬 등을, 환경직군에서 자연환경, 지하수관리, 해양환경, 육지환경직렬 등을, 교통직군에서 지하철직렬 등을, 시설직군에서 공공시설관리, 도시디자인, 조경, 설계, 공원·녹지, 상하수도직렬 등)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표 2-4> 우리나라 공무원 직렬체계 개편에 관한 선행 연구

우리나라 공직분류체계의 문제점과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자	연구내용	연구방법
주삼식(1999), 우리나라 공무원의 공직분류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공직분류의 현황을 살펴, 그 기초인 계급제를 직위분류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몇차례 시도와 근거를 소개했으나, 계급제의 요소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어려운 실정을 소개함	질적 연구

<표 2-4> 우리나라 공무원 직렬체계 개편에 관한 선행 연구(표계속)

김명식(2003), 우리나라 공직분류 체계의 개편방안	계급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호주와 우리나라 공무원 제를 비교함. 우리나라 공직 분류의 무원직성, 불균형, 다원화 복잡 행정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점, 인적 자원 관리의 효율성 및 탄력성을 제고하지 못하는 이유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함	질적 연구
조성대(2003), 국가 발전을 위한 인사행정의 개혁방안	우리나라 공직 분류제도는 계급제의 근간 위에 직위 분류제를 가미한 절충적인 제도라고 분석하고, 이는 직위분류제의 핵심인 직무 책임성, 곤란성에 따른 합리적 보수 제도를 기대할 수 없어, 직위분류제의 핵심 요인을 강화하기 위해 성과급제를 도입해 경쟁력을 강화하자고 제시함	질적 연구
국가공무원 직렬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연구자	연구내용	연구방법
하미승 외(2007), 공무원 직종 직급 체계의 합리적 개편방안 연구	행정 환경 변화와 새로운 수요 맞게 공무원 인식을 면접 및 설문으로 조사해 공직 분류 체계(직종, 직군, 직류)를 직무 중심으로 다양하고, 전문화, 합리적으로 직종·직급 체계로 재설계 할 수 있는 개편방안을 제시함	면담, 설문 조사
김영우(2005), 한국 공직 분류체계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안	전반적으로 계급제적 특성이 강하지만 일부 직위 중심의 인사관행이 존재하며, 특히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이 보직 관행의 주된 원인으로 나타남. 이에 직무 호봉제 및 새로운 직위 분류제적 요소를 도입, 직급과 직위의 분리 운영 방안 등을 제시함	질적 연구
조경호 외(2005), 공직구조 재설계 방안 연구	직렬 체계를 재설계하기 위해, 인사담당자와 공무원 직장협의회 임원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행 공직 분류체계에 대한 실증 조사를 실시해 분석 결과, 일부 직종의 통폐합, 유사 직렬 통합, 그리고 새로운 직렬 신설의 필요성을 제시함	면담, 설문 조사
지방공무원의 직렬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연구자	연구내용	연구방법
최병대 외(1999), 서울시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방안	서울시 지방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 하기 위해 직렬, 직류 개선 방안을 4급 공무원 이상의 인사기록카드를 자료로 하고, 현직 공무원과 면담 및 설문 조사를 통해 미배정 정원, 저조한 미활용 직렬 직류에 대한 개선, 행정직렬과 토목직렬의 세분화, 희소직렬에 대해선 전문직화를 제시함	면담, 설문 조사

<표 2-4> 우리나라 공무원 직렬체계 개편에 관한 선행 연구(표계속)

한영수·김필두 (2004), 지방공무원 계급 체계 개선 방안	현행 9계급 체제에 대해 직렬은 각 계급과 그에 따른 직무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목표관리제와 연봉제 실시를 위한 기반 구축해서 계급과 보직의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다고 제시함	질적 연구
임승빈(1996), 지방 공무원 직렬재조정 방안에 관한 연구	지방공무원의 전문성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외국사례조사, 설문조사 실시한 내용을 토대로 지방공무원의 직렬 재조정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직렬의 신설 및 폐지에 관한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에게는 위임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음	설문 조사, 외국사례조사
김필두·금창호 (1999), 지방자치단체의 공직분류체계 개선방안	수직적 분류체계의 개편방안으로 현행의 9계급제 조직구조와 직무구조에 부합하도록 실무계급, 관리계급 및 기획계급의 3계급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직렬의 축소조정방안, 직렬의 통합 또는 분리방안, 직렬의 신설방안 등 3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는데, 직렬 구조의 개편원칙으로 전문성의 강화원칙과 정부기능의 부합원칙을 제시하였음	설문조사

3. 소결

1) 우리나라 직렬체계의 문제점

가. 직렬 구분의 일관성 부족의 문제

- 현행 직렬체제는 엄격한 직무분석과 직무평가를 통하여 직군·직렬·직류로 분류된 것이 아니라 인사관리상 편의에 의해 편성되어 분류의 원칙과 기준이 미비함

나. 직군 직렬간 형평성의 문제

- 직군, 직렬간 규모의 형평성 부족은 거의 모든 선행연구에서 지적하는 바임
 - 직렬간 상대적 규모에 있어서 형평성이 부족한데 이것이 직무의 유사성에 입각하여 합리적으로 묶여진 것이 아니기에 문제가 될 수 있음
 - 이는 특정 직렬의 공무원들이 우월적 위치를 이용해 영역을 방어하고 확장시킨 결과일 수 있음(오석홍, 1993)

다. 비전문성의 문제

- 일반 행정이 위주의 분류구조로 인해 행정의 전문성과 인력관리의 신축성을 제고하지 못하고 있음
 - 우리나라 공무원의 대부분이 인문사회계열 전공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의 67.9%가 인문, 법정, 상경계 출신임
 - 이러한 공무원들의 비전문성은 새로운 행정수요와 전문분야에 신속히 대응하는데 경직성이 있음
 - 아울러 관련 직렬들이 상위직급에서 하나의 직렬로 통합되어 있어 전문화를 위협하고 있으며, 특히 행정직렬이 넓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권자의 자의적 재량의 영역을 넓혀주게 되어 정실과 독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음(김중양, 1997; 진재구, 1993; 중앙인사위원회, 1999 재인용)

2) 우리나라 직렬체계의 개선방안

-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 행정 분야 직렬을 세분화하는 방안이 필요함(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4)
 - 현재의 직류를 직렬로 전환(일반행정직렬, 재경직렬, 법무직렬 등)하고, 국제통상직류는 외무통상직군의 한 직렬로 포함함
 - 최근 정부 수요가 급증하는 새로운 전문행정분야를 대상으로 직렬을 세분화하기 위해 정책분석평가, 특허 등을 신설해야 함
 - 지식정보를 창출하고 관리하는 전산직렬, 통계직렬, 사서직렬, 특허직렬, 문화직렬 등을 지식정보관리직군으로 개편하고, 정보통신직군은 통신직군으로 전환해야 함
- 행정직군에 최근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새로운 전문행정분야를 대상으로 직렬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추세가 평가와 감사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고, 이는 업무

성과에 대한 공정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감사직렬을 폐지하는 대신 정책분석평가직렬을 신설하는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즉, 정책의 진단, 분석, 평가 기능은 각각이 모두 중요하며, 서로 독립적이기 보다는 연계되어 있는 기능이라는 점과 각각의 기능들이 정책품질 관리의 핵심수단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기능들이 모두 포함될 수 있는 직렬의 신설이 필요함(조경호, 2004)
 - 또한 기타 직군(특수직군)을 신설하여 대상인원이 적은 특수직(예: 우표도안직, 문화재 감정직, 통역직 등)분류체계에 흡수하는 것이 요구됨(조경호, 2004)
- 직렬체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직의 세분화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음(예: 행정직렬을 조직인사직렬, 예산관리직렬, 법무직렬, 국제통상직렬, 금융직렬 등으로 세분화하여 사람과 직무와의 적합도를 증진시키자는 안, 조경호, 2004)

제3절 외국 지방공무원 직렬체계 사례

1. 미국의 공직분류체계

- 미국의 직위분류는 미합중국 법전 제5편에 있는 분류기준(classification standard)에 따라 이루어짐
 - 임무, 직무환경, 업무기준, 기술능력, 자격요건 등을 포함하는 직무명세서(job description)에 따라 분류가 이루어짐
- 미국 연방 정부의 분류 시스템에 따르면 일반직 계열(GS : General Schedule)과 기능직계열(FS: Federal Wage System)로 분류됨

- 직렬의 대부분은 전문직, 행정직, 기술직, 사서직, 기타의 5개 범주로 나누어져 관리되며, 직종구분은 임용에 있어서 경쟁절차가 있는지 여부, 근무시간, 직위의 법적 성격, 직급 등에 따라 이루어짐
- 미국 지방공무원의 인사제도에 대해서는 주법으로 비교적 세부적인 부분까지 규정하고 있으나 각 지방정부의 내정자치 원칙에 따라 운영면에서는 모두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으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음
 - 미국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과장급(Division Director 또는 Manager) 이상은 대부분 지사, 시장 등에 의하여 임명되는 정무직 공무원임
 - 미국 지방정부 공무원의 직급 체제는 우리나라 공무원 개념의 1~9급과 같은 체계가 아니라 업무 추진을 위하여 국, 과 단위 유사 직렬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직책명에 따라 직급이 결정됨

<표 2-5> 뉴저지 주정부의 행정분석 업무 담당 공무원들 직급 구분 사례

구분	직책명(Title)	Code No.
계장	Supervising Administrative Analyst	Code No. 50108
차석	Administrative Analyst 1st Class	Code No. 50076
3석	Administrative Analyst 2nd Class	Code No. 50075
4석	Administrative Analyst 3rd Class	Code No. 50073
5석	Administrative Analyst 4th Class	Code No. 50072

-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정부 사례2)
 -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제도적 측면에서는 실적주의제와 직위분류제를 근본으로 하고 있고 인사담당기관으로는 주지사 직속의 인사국과 독립합의제 형태의 인사위원회가 있음
 - 직위분류제는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공통된 공직분류제도로써 노스캐롤라이나의 경우 지나친 세분화가 주정부 평가에서 부정적으로 지적됨

2) 유민봉(2005),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정부의 인사제도와 운영의 특성. 「한국행정연구 제14권 4호」, pp.243-264.

- 주립대학을 포함한 것이라서 행정부만의 직위분류 특성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은 있지만 그 직무명칭이 약 3,000개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보고서는 직무분류의 통합을 권고하기도 함
- 노스캐롤라이나주를 포함한 미국 주정부 인사관리는 연방정부와의 분권적 관계에서 다양성을 보여줌
- 즉, 50개 주 정부에서 독자적인 충원, 교육, 보상, 근무성적평정, 공직분류의 방식을 개발하고 적용함으로써 제도와 운영의 장단점을 상호 학습할 수 있음³⁾

○ 미국 로스앤젤레스(市)의 사례⁴⁾

- 캘리포니아 주의 로스앤젤레스는 직위의 신설은 시 현장에 의해 보장되어 시 자체가 결정할 수 있음
- 미국 로스앤젤레스시의 직위분류는 1300종류에 이룸
- 미국 자치 단체의 급여는 기술직 우대로 실시하며 철저하게 직무분석을 한 후 그에 따른 성과급여를 적용함
- 재정 상태나 경기변동에 따라 직위의 존폐가 결정되므로 지방공무원의 숫자도 일정하지 않고 임용과 해고가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음
- 임용단계부터 직렬에 따라 급여수준이 다른 상태로 시 공무원을 모집하고 있어, 예를 들면 정보통신분야가 부동산 관리직보다 월 1000달러 더 많게 책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시가 우수한 기술 인력을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하여 차등급여제를 실시하고 있음
- 직렬에 따라 차등급여제를 실시하는 것은 임용 후에도 변함이 없으며 실적제와 함께 지방공무원의 급여기준이 됨

3) 원문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자율성이 제한된 상황에서는 자발적인 인사 관리의 혁신 사례가 나오기 힘들고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변화를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일 수 밖에 없다”고 함

4) 임승빈(1997), 「지방공무원 직렬 재조정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 영국의 공직분류체계⁵⁾

- 전통적으로 계급제 국가인 영국 공무원의 직급체계는 Grade 1~Grade 5를 고위공무원단(SCS)으로, Grade 6~7을 Pay Band A, SEO와 HEO, EO를 Pat Band B로, AO는 Pay Band C2, AA는 Pay Band C1으로 전환하여 5단계로 운영하고 있음
 - 실제 영국의 인사 관련 법령이나 통계에서는 직군, 직종에 따른 분류체계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현실적인 인사운용을 위해 직군을 행정직군, 경제직군, 정보직군, 사서직군, 법률직군 등으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음
- 임용기간, 근무시간, 직무성격 등으로 공무원을 분류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충원은 1단계 지원, 2단계 표준화된 시험, 3단계 평가센터 평가, 4단계 패널 인터뷰로 진행됨
- 영국에는 지방공무원의 급여, 근무시간, 조건 등은 지방자치단체와 개인간의 고용계약에 의해 결정됨
 - 이 고용계약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근무조건을 정하는 기준으로, 지방공무원은 전국노사의 단체교섭에 의해 결정된 전국 기준에 따라 각 지방의 지방공무원의 최저 근무조건을 각 직군별로 정함
 - 영국의 공무원의 직렬을 직군별로 분류를 하면 행정직, 과학직, 전문 기술직, 법률직, 비서직, 사회보장직, 경찰직, 연구직, 박물관 미술관, 경비보장직 11개 직군 하에 다시 직렬로 나뉨
 - 영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분야와 교육행정분야임
 - 이는 자치단체의 역할은 사회복지분야와 교육행정분야라는 것을 말함
 - 특히 영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인원감축은 공공업무에서 민간회사와의 공개경쟁입찰제도의 정착, 작은 정부의 추구 같은 맥락에서 이뤄지고 있음

5) 임승빈(1997), 상계서.

3. 일본의 공직분류체계

- 공무원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 기준으로서 첫 번째 기준인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일반직과 특별직으로 구분하며 두 번째로 업무에 따라 현업공무원과 비현업공무원으로 구분하며, 세 번째로 일반직 공무원을 정규근무시간에 따른 근무를 하는지에 따라 상근공무원과 비상근공무원으로 구분함
- 공무원의 봉급표를 볼 때 크게 행정직, 전문행정직, 세무직, 공안직, 해사직, 교육직, 연구직, 의료직, 지정직으로 9가지의 직군이 나누어지고 있으며, 임용방식은 시험, 경쟁시험, 전형, 배치전환 등으로 진행됨
 - 일본의 자치단체의 직종 신설 권한은 각 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에 있음
 - 각 자치단체별로 필요한 행정 수요에 따라 직렬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나 자치단체별로 현격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지는 않아 어느 정도 통일성은 보임⁶⁾
 - 직렬제도 운영에 있어 지방공무원의 직렬에 따라 개정 전의 우리나라와 같이 상위직급에 제한이 있는가 하는 문제는 규정상에는 제한이 없음
 - 직급체계 대신 급여체계에 따라 직위에 맞는 급여를 지불하고 있음

<표 2-6> 외국 지방공무원 직렬체계

국가	시사점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에 의한 임무, 직무환경, 업무기준, 기술능력, 자격요건을 포함하는 직무명세서에 따라 공무원이 일반직, 기능직 계열로 분류됨 • 지방공무원은 각 주의 법으로 세부적인 기준까지 규정하고 있음, 지방정부 내정 자치 원칙에 따라 운영 집행함 • 특정 주는 주지사 직속의 인사국과 독립합의제 형태인 인사위원회가 있음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문법 성향으로 법률에 의해 분류체계가 나타나지 않음 - 현실적인 인사운용을 위해 직군을 행정직, 경제직, 정보직, 사서직, 법률직 등으로 나누어 공무원을 인사함 •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의 고용계약 형태로 결정됨, 직군별로는 행정직,

6) 임승빈(1997). 상계서.

<표 2-6> 외국 지방공무원 직렬체계(표계속)

국가	시사점
	과학직, 전문 기술직, 법률직, 비서직, 사회보장직, 경찰직, 연구직, 박물관, 경비보장직 등 11개 직군하에 다시 직렬로 나눔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은 행정직, 전문행정직, 세무직, 공안직, 해사직, 교육직, 연구직, 의료직, 지정직으로 9가지 직군이 나누어짐 지방공무원은 자치단체의 직종 신설 권한이 각 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에 있어 필요 행정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직렬제도를 운용할 수 있으나, 전국적으로 보면 각 현격한 차이점을 보이지 않아 통일성을 보임

4.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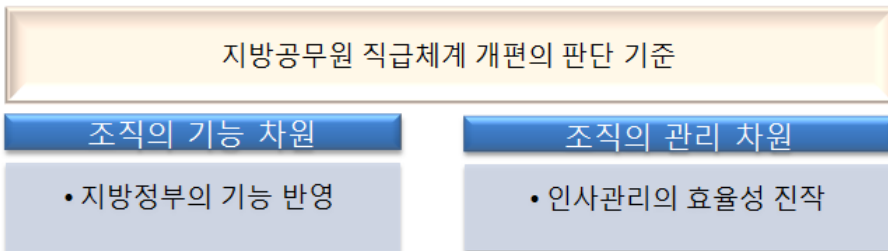
- 공직분류체계에서 직위분류제와 계급제의 수렴 추세
 - 미국과 영국,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미국의 공직분류제도는 직위분류제를 약화시키고 계급제적 특성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으며, 영국과 일본은 계급제를 약화시키고 직위분류제적 특성을 강화하고 있음
 - 특히, 영국의 공직 분류제도에서도 나타났듯이, 직위분류제와 계급제를 절충하는 형태의 분류제도의 개발과 도입이 필요함
- 인사행정 전반에 계급제적 요소를 강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직위분류제의 실질적 도입을 통한 계급제적 요소의 완화가 절실한 형편에 있음
- 다만, 지나치게 세분화된 직위의 분류방식을 택할 것이 아니라 인사권자들이 조직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인재를 적시에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식 직위분류제보다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형태의 직위분류제 도입이 필요함
- 과학적 근거 자료를 토대로 한 직렬 체계 정립이 필요함
 -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직무 분석과 직무평가를 실시하여 분류의 세분화 수준과 분류방식을 채택함

제4절 지방공무원 직렬체계 개편 방안의 판단 기준

1. 개편방안에 대한 판단 기준

- 선행연구들에서 지적하는 바 직렬체계의 구분의 일관된 기준 미비가 문제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직렬체계 개편방안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자 직렬체계 구분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함
- 지방공무원 직렬체계를 궁극적으로 지방정부 조직의 기능 수행 양상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직렬체계의 개편은 기본적으로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기능의 변화 양상을 반영하여야 하고, 또한 직렬체계를 채용·보직관리·근평·승진 등 인사관리의 기본 단위가 되므로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진작시킬 수 있어야 함
- 따라서 지방공무원 직급체계개편을 위한 판단기준은 조직 기능 차원, 과 조직 관리 차원에서 제시할 수 있음
 - 조직 기능 차원에서 직렬 개편은 지방정부의 기능 변화를 반영함
 - 조직 관리 차원에서 직렬 개편은 인사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함

<그림 2-1> 지방공무원 직급체계 개편의 기준



2. 판단기준의 적용과 개편 방향

1) 조직의 기능 차원

- 지방정부의 기능 반영
 - 행정수요 감소를 반영한 직렬의 폐지
 - 지방정부 고유의 기능이 반영한 직렬의 폐지 또는 신설
 - 새로운 지방행정수요 반영한 직렬의 신설

2) 조직의 관리 차원

-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공무원의 전문성의 제고
 - 서비스제공지원, 정부자원관리 등 정부 활동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직렬 세분·신설
- 조직 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인사관리의 유연성(합리성)의 확보
 - 유사 직무의 직렬인 경우 인사관리 유연성 확보를 위해 직렬 통폐합
 - 전문성이 뚜렷한 차별화된 직무인 경우 직렬 세분

<표 2-7> 지방공무원 직렬체계 개편의 기준과 직렬개편 방안

판단기준		적용내용	개편방안
구분			
조직기능차원	지방정부의 기능을 반영하는가?	- 행정수요 감소	폐지
		- 지방정부 고유 기능 반영	통폐합·세분화·신설
		- 새로운 지방행정수요 반영	신설
조직관리차원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진작시키는가?	-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확보	세분화·신설
		- 인사관리의 유연성 확보	통폐합

제3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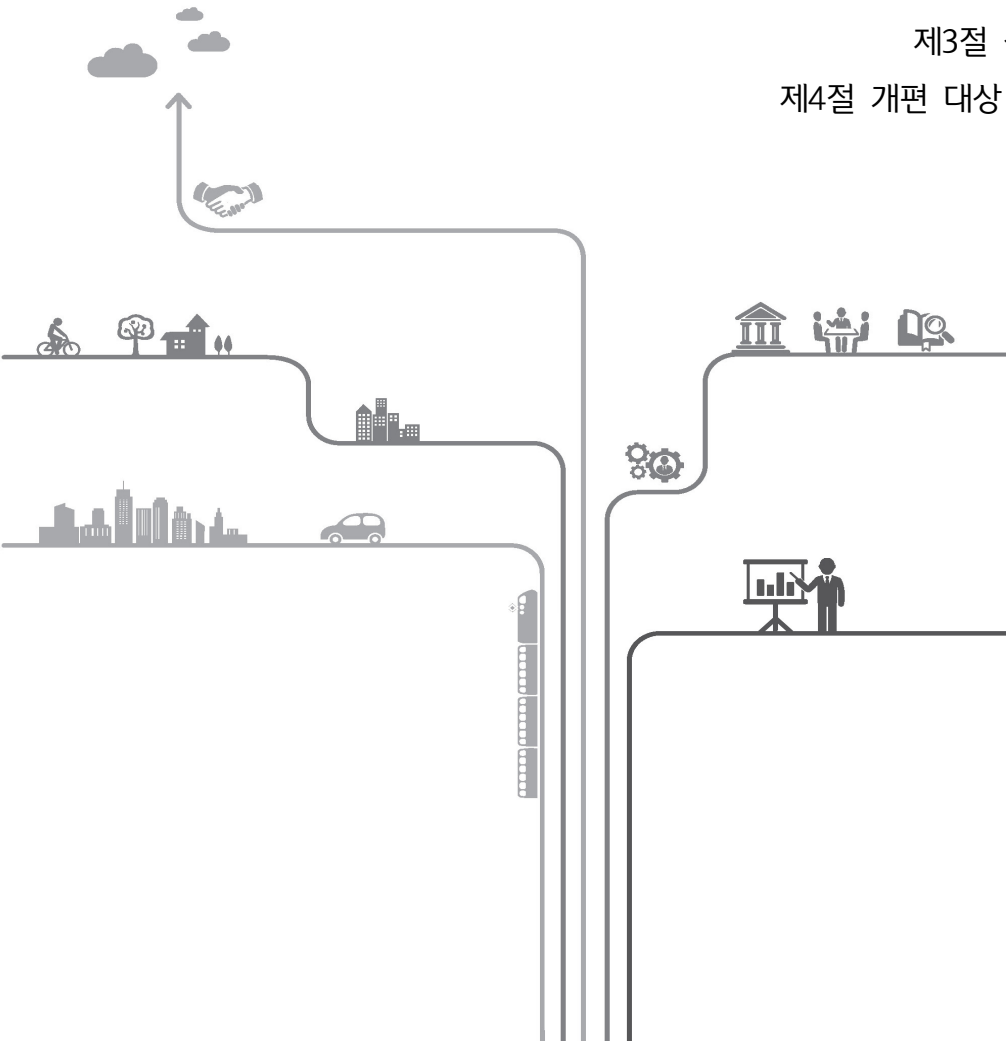
지방공무원 직렬체계 운영 현황과 실태조사결과 분석

제1절 분석모형 설계

제2절 지방공무원 직렬체계 운영 현황

제3절 실태조사분석

제4절 개편 대상 직렬의 추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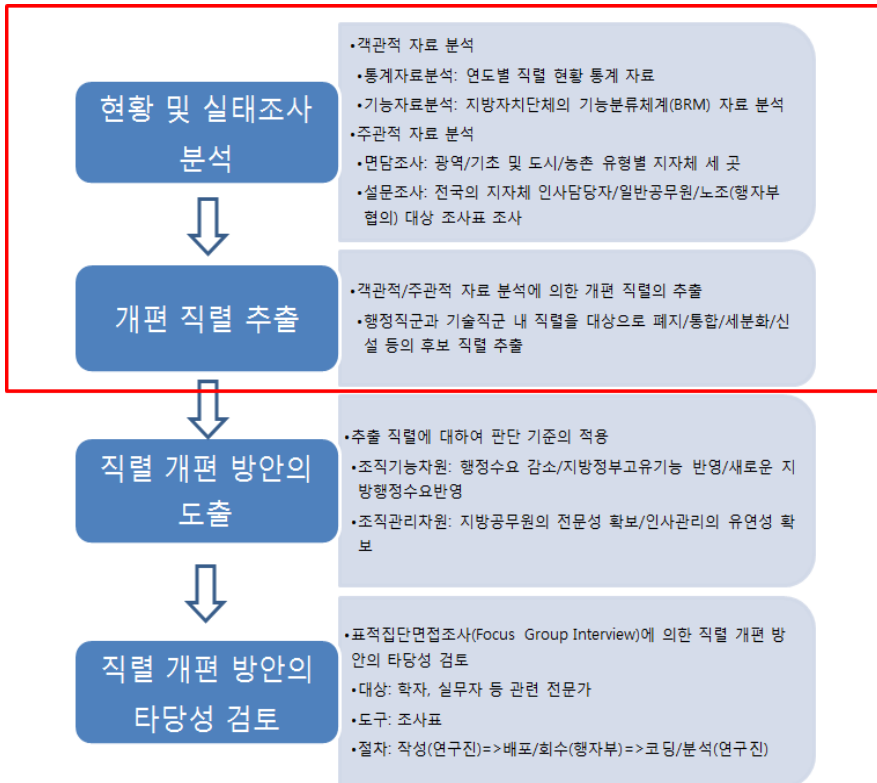


제3장 지방공무원 직렬체계 운영 현황과 실태조사결과 분석

제1절 분석모형 설계

○ 본 장에서는 직렬체계 운영현황 자료와 면담조사 및 설문조사 등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방공무원 개편 대상 직렬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임(아래 분석모형에서 상위 두 단계에 해당)

<그림 3-1> 직렬 조정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분석 모형



- 본 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자료와 기능분류체계(Business Reference Model: 이하 BRM) 자료 등을 토대로 한 ‘문헌 자료’ 분석(제2절)과 면담조사 및 설문조사 등을 근거로 한 ‘실태조사자료’ 분석(제3절)에 기반하여 개편 대상 직렬을 추출하고자 함

제2절 지방공무원 직렬체계 운영 현황

1. 일반직 지방공무원 직렬별 현황

1) 직군별 현황

가. 2013년 말 기준 현황

- 2013년 말 기준 지방공무원 직군별 현황은 다음과 같음
 - 행정직군은 전체의 54.2%, 기술직군은 34.4%, 관리운영직군은 8%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 행정직군에는 5급 이상 공무원의 비율이 전체의 10% 정도인데 반해 기술직군은 7% 정도임

<표 3-1> 2013년 말 기준 지방공무원 직군별 인원수 현황

(단위: 명)

직군	총계	일반 고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213,707	34	6	63	322	2,620	15,715	63,171	86,889	44,042	20,892
행정	130,689	34	6	63	322	1,795	10,764	36,484	43,637	23,721	13,863
기술	83,018					825	4,951	24,167	32,484	15,489	5,923

자료 : 행정자치부(2013),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주: 관리운영직군은 제외

나. 연도별 추이

- 지방공무원 직군별 인원수의 연도별 현황은 다음과 같음
 - 행정직군은 2007년에 비해 약 11.5% 정도 인원수가 증가하였으며, 기술직군은 24% 정도 증가하였음
 - 기술직군의 증가는 기능직종이 폐지되고 일반직종에 포함된 것에서 기인한 것임

<표 3-2> 연도별 지방공무원 직군별 인원수 현황

(단위: 명)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행정	130,689	123,798	117,082	117,379	117,526	117,071	117,165
기술	83,018	68,770	66,976	67,530	67,210	66,586	66,942

자료 : 행정자치부(2007~2013),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주: 관리운영직군은 제외

2) 직렬별 현황

가. 2013년 말 기준 현황

- 2013년 말 기준 지방공무원 직렬별 현황은 다음 <표 3-3>과 같음

<표 3-3> 2013년 말 기준 지방공무원 직렬별 인원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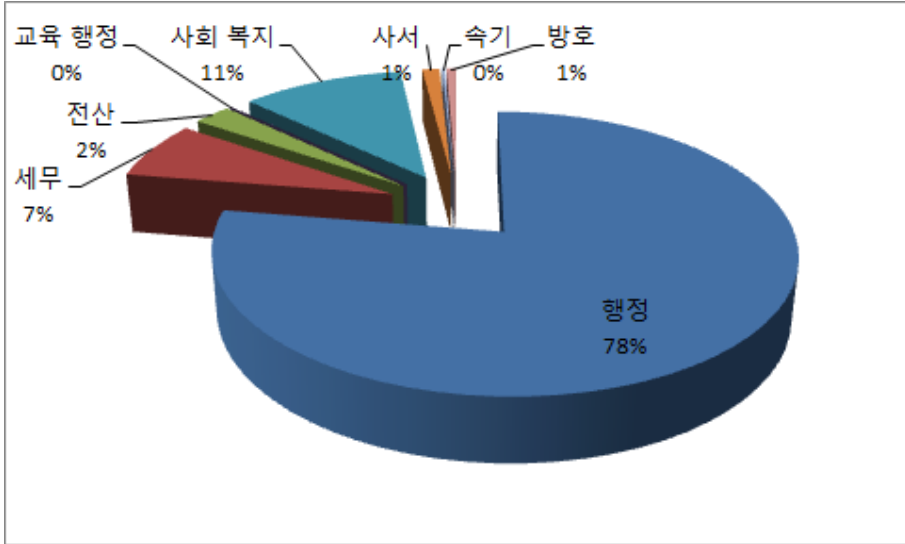
(단위: 명)

구 분	총계	일반직 고 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233,754	34	6	63	322	2,620	15,715	63,171	86,889	44,042	20,892		
행정	행정	101,341	6	63	322	1,795	10,623	31,127	31,100	17,617	8,654		
	세무	9,092					2,213	5,226	1,195	458			
	전산	3,309					893	1,489	705	222			
	교육	2					2						
	사회 복지	14,338					110	1,952	4,734	3,391	4,151		
	사서	1,518					31	245	478	468	296		
	속기	268								20	169	64	15
	방호	821									32	441	281
기술	공업	6,893				기술 서기관 825	413	2,258	2,929	874	419		
	농업	7,100					574	3,191	1,914	898	523		
	녹지	3,787					312	1,088	1,181	768	438		
	수역	881					89	361	430	1			
	해양 수산	1,403					154	632	371	149	97		
	보건	7,239					362	2,128	3,527	715	507		
	식품 위생	265						30	151	55	29		
	의료 기술	2,912					17	805	1,603	313	174		
	의무	94					93						
	약무	207					24	115	68				
	간호	4,029					131	1,369	1,675	854			
	보건 진료	1,727						1,499	167	61			
	환경	3,764					259	1,175	1,361	611	358		
	항공												
	시설	27,723					2,425	8,252	9,872	4,960	2,211		
	방재 안전												
	방송 통신	1,648					98	521	583	326	120		
	위생	988						30	507	393	58		
	조리	3									1	2	
	간호 조무	93									3	37	42
시설 관리	2,756					78	1,092	1,448	138				
운전	9,506						632	5,016	3,020	8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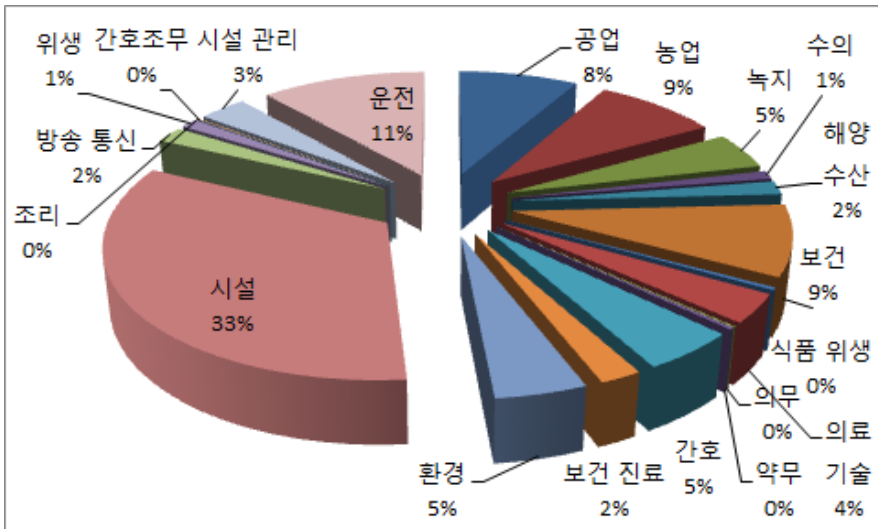
자료 : 행정자치부(2013),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주: 관리운영직군은 제외

<그림 3-2> 행정직군 직렬별 분포



<그림 3-3> 기술직군 직렬별 분포



<표 3-4> 지방공무원 인원(현원)수별 직렬 분포

(단위: 개)

구분	10명 이하	10명~500명	500명~5000명	5000명~1만명	1만명 이상
직렬수	3	5	14	4	3
해당직렬	교육행정, 항공, 조리	숙기, 식품위생, 의무, 약무, 간호조무	전산, 사서, 방호, 녹지, 수의, 해양수산, 보건, 의료기술, 간호, 보건진료, 환경, 방송통신, 위생, 시설관리	세무, 공업, 농업, 운전	행정, 사회복지, 시설

주: 2013년 신설된 방재안전직렬은 제외됨

나. 연도별 추이

○ 지방공무원 직렬별 인원수의 연도별 현황과 변동 추이는 다음과 같음

-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지난 7년 동안 행정 직군 내 직렬 인원수의 규모와 변동을 살펴보면 행정 직렬은 2007년 대비 8.5% 증가(7,925명 증가)하였고, 사회복지 직렬은 2007년 대비 2013년에 42.7% 증가(4,288명 증가)하여 증가율이 가장 높음
- 사서 직렬도 2007년 대비 34% 증가하여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증가분은 385명으로 행정직렬이나 사회복지직렬에 비해 절대 증가분은 작음
- 세무 직렬과 전산 직렬은 각각 1%, 0.5% 감소하여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교육행정직렬은 55명에서 2명으로 감소하여 96.4% 감소하였음⁷⁾
- 기술 직군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직렬은 식품위생직렬로 2007년 대비 33.8% 증가(67명 증가)하였으며, 해양수산직렬, 수의직렬, 간호 직렬 등이 각각 11.1%, 9.3%, 8.1%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7) 교육행정직렬의 감소는 인천시립대학교가 국립으로 전환되면서 소속 공무원들이 지방직 공무원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임

- 가장 많이 감소한 직렬은 의무 직렬로 2007년 대비 57.1% 감소(125명 감소)하였으며, 보건직렬, 농업직렬, 약무직렬이 각각 7.5%, 5.4%, 4.2% 감소하였음
- 이와 같은 변동 추이는 최근 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 수요의 변화와 관련이 있음
- 사회복지 직렬의 인원 증가는 최근 고령화 추세로 인하여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음
 - 사서 직렬의 증가는 최근 여가 문화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공공도서관 이용에 대한 수요의 증가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음⁸⁾
 - 또한 의무·약무 직렬의 인원수의 감소와 식품위생·의료기술 직렬의 인원수의 증가는 최근 민간 병원·의원의 증가로 인한 보건소의 진료 기능의 감소와(임도빈, 2004) 건강증진 기능과 위생·방역 기능의 증가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음

8) ‘제 1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르면 도서관 접근성 향상과 서비스 환경 개선을 위해 2013년 까지 900개관 확충, 봉사대상 인구 1관 당 5만 명 수준으로 개선을 목표로 하였으며, 전국 공공 도서관(지자체+교육청)수에 대해 살펴보자면, 2012년 12월 31일 기준 808개로 2011년 12월 31일 기준 766개 보다 42개의 증가추이를 보였음(정보공개센터, <http://www.opengirok.or.kr/3547>)

<표 3-5> 연도별 지방공무원 직렬별 인원수 현황

(단위: 명)

2013		2012		2011		2010		
행정	행정	101,341	행정	97,402	행정	92,795	행정	93,240
	세무	9,092	세무	9,085	세무	9,076	세무	9,179
	전산	3,309	전산	3,272	전산	3,229	전산	3,234
	교육행정	2	교육행정	48	교육행정	59	교육행정	52
	사회복지	14,338	사회복지	12,566	사회복지	10,581	사회복지	10,393
	사서	1,518	사서	1,425	사서	1,342	사서	1,281
	속기	268						
	방호	821						
기술	공업	6,893	공업	6,839	공업	6,834	공업	6,824
	농업	7,100	농업	7,099	농업	7,094	농업	7,225
	녹지	3,787	녹지	3,700	녹지	3,636	녹지	3,636
	수의	881	수의	868	수의	844	수의	827
	해양수산	1,403	해양수산	1,406	해양수산	1,415	해양수산	1,453
	보건	7,239	보건	7,282	보건	7,359	보건	7,493
	식품위생	265	식품위생	253	식품위생	233	식품위생	224
	의료기술	2,912	의료기술	2,883	의료기술	2,859	의료기술	2,842
	의무	94	의무	95	의무	94	의무	189
	약무	207	약무	211	약무	213	약무	203
	간호	4,029	간호	3,961	간호	3,953	간호	3,881
	보건진료	1,727	보건진료	1,385	보건진료			
	환경	3,764	환경	3,666	환경	3,634	환경	3,616
	항공		항공		항공	15	항공	
	시설	27,723	시설	27,492	시설	27,178	시설	27,516
	방재안전		방송통신	1,630	방송통신	1,615	방송통신	1,601
	방송통신	1,648						
	위생	988						
	조리	3						
	간호조무	93						
	시설관리	2,756						
	운전	9,506						

<표 3-5> 연도별 지방공무원 직렬별 인원수 현황(표계속)

(단위: 명)

	2009		2008		2007	
행정	행정	93,567	행정	93,193	행정	93,416
	세무	9,229	세무	9,168	세무	9,186
	전산	3,245	전산	3,341	전산	3,325
	교육행정	53	교육행정	55	교육행정	55
	사회복지	10,189	사회복지	10,114	사회복지	10,050
	사서	1,243	사서	1,200	사서	1,133
기술	공업	6,810	공업	6,752	공업	6,744
	농업	7,294	농업	7,305	농업	7,507
	녹지	3,575	녹지	3,547	녹지	3,532
	수의	815	수의	806	수의	806
	해양수산	1,447	해양수산	1,237	해양수산	1,263
	보건	7,604	보건	7,599	보건	7,829
	식품위생	212	식품위생	204	식품위생	198
	의료기술	2,827	의료기술	2,821	의료기술	2,820
	의무	197	의무	204	의무	219
	약무	204	약무	206	약무	216
	간호	3,854	간호	3,745	간호	3,727
	환경	3,574	환경	3,549	환경	3,550
	항공		항공		항공	
	시설	27,214	시설	27,060	시설	26,994
	통신	1,583	통신	1,551	통신	1,537

자료 : 행정자치부(2007~2013),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주: 관리운영직군은 제외

<표 3-6> 행정직군 직렬 변동 현황

(단위: 명, %)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평균 (표준 편차)	증가분 (2007년 대비 2013년)	증감률 (2007년 대비 2013년)
행정	101,341	97,402	92,795	93,240	93,567	93,193	93,416	94,993 (3,208)	7,925	8.5%
세무	9,092	9,085	9,076	9,179	9,229	9,168	9,186	9,145 (60)	-94	-1.0%
전산	3,309	3,272	3,229	3,234	3,245	3,341	3,325	3,279 (46)	-16	-0.5%
교육 행정	2	48	59	52	53	55	55	46 (20)	-53	-96.4%
사회 복지	14,338	12,566	10,581	10,393	10,189	10,114	10,050	11,176 (1,647)	4,288	42.7%
사서	1,518	1,425	1,342	1,281	1,243	1,200	1,133	1,306 (133)	385	34.0%

자료 : 행정자치부(2007~2013),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주: 속기, 방호 직렬은 1개년도 자료만 있거나 신생 직렬이라 제외함

<표 3-7> 기술직군 직렬 변동 현황

(단위: 명, %)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평균 (표준 편차)	증가분 (2007년 대비 2013년)	증감률 (2007년 대비 2013년)
공업	6,893	6,839	6,834	6,824	6,810	6,752	6,744	6,814 (52)	149	2.2%
농업	7,100	7,099	7,094	7,225	7,294	7,305	7,507	7,232 (152)	-407	-5.4%
녹지	3,787	3,700	3,636	3,636	3,575	3,547	3,532	3,630 (90)	255	7.2%
수의	881	868	844	827	815	806	806	835 (30)	75	9.3%
해양수산	1,403	1,406	1,415	1,453	1,447	1,237	1,263	1,375 (88)	140	11.1%
보건	7,239	7,282	7,359	7,493	7,604	7,599	7,829	7,486 (209)	-590	-7.5%
식품위생	265	253	233	224	212	204	198	227 (25)	67	33.8%
의료기술	2,912	2,883	2,859	2,842	2,827	2,821	2,820	2,852 (35)	92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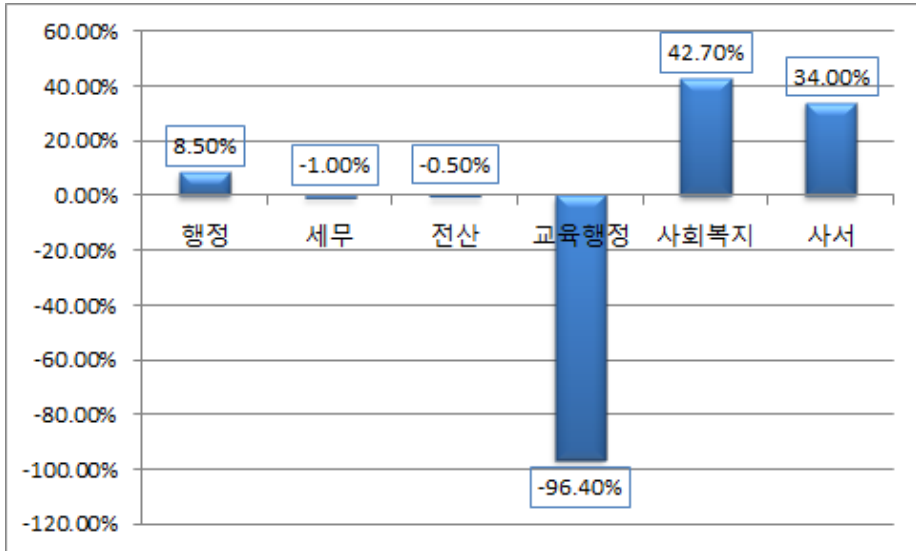
<표 3-7> 기술직군 직렬 변동 현황(표계속)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평균 (표준 편차)	증가분 (2007년 대비 2013년)	증감률 (2007년 대비 2013년)
의무	94	95	94	189	197	204	219	156 (58)	-125	-57.1%
약무	207	211	213	203	204	206	216	209 (5)	-9	-4.2%
간호	4,029	3,961	3,953	3,881	3,854	3,745	3,727	3,879 (113)	302	8.1%
환경	3,764	3,666	3,634	3,616	3,574	3,549	3,550	3,622 (76)	214	6.0%
시설	27,723	27,492	27,178	27,516	27,214	27,060	26,994	27,311 (269)	729	2.7%
방송통신	1,648	1,630	1,615	1,601	1,583	1,551	1,537	1,595 (41)	111	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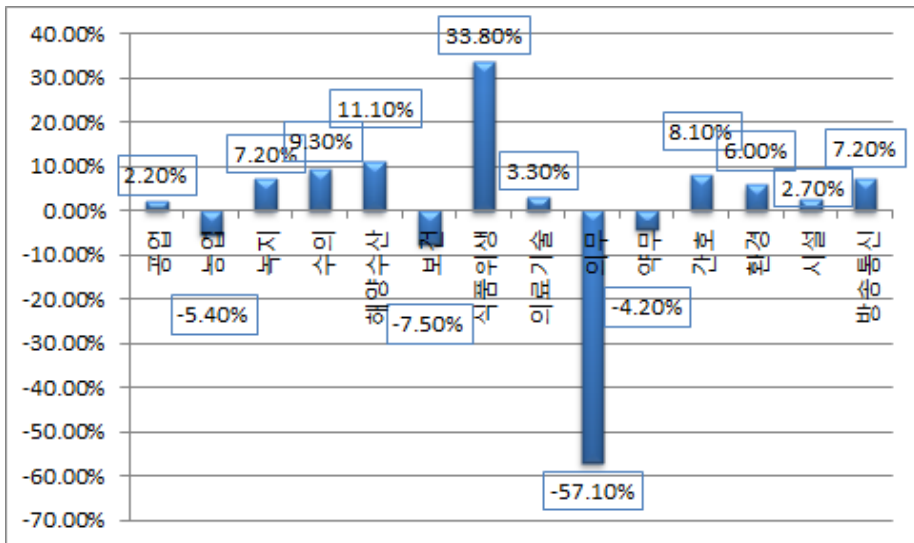
자료 : 행정자치부(2007~2013),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주: 보건진료, 항공, 방재안전, 위생, 조리, 간호조무, 시설관리, 운전 직렬은 1개년도 자료만 있거나 신생 직렬이라 제외함

<그림 3-4> 행정직군 직렬별 변동 현황



<그림 3-5> 기술직군 직렬별 변동 현황



2. 일반직 지방공무원 직렬별 직무 내용

-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직무 내용과 자격 조건 등을 개략적으로 파악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음
 - 이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 관련보고서, 공무원 임용시험 사이트, 관련 기사 인터뷰 내용 등을 참고하였음
- 행정 직군
 - 행정 : 지방 공공 기관에서 일반 행정, 사회, 문화, 홍보 정책 등 지방 행정 전반의 업무 등
 - 세무 :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수 관련 세법에 따라 개인 또는 상업체가 납부해야할 세액을 결정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판매영수증, 신고서 등 서류를 검토 조사해 세금 부과 및 승인을 결정하는 지방세수 징수 업무 등
 - 전산 : 행정업무 전산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조정, 전자계산 및 조직에 의한 자료 처리 및 보관, 전산화 업무 분석 설계 프로그램 작성 및 유지 업무 등
 - 교육행정 : 각 시도교육청과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서무과에서 총무 및 교육행정 지원 업무 등
 - 사회복지 : 관할 구역 내 사회복지 혜택 수급자를 선정, 사회복지기관과 자원봉사 등을 연결, 교육 복지 관련 협회 지원 업무 등
 - 사서 : 지자체 산하 도서관 등에서 도서관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제도 조사 및 개선, 도서관 열람에 제공하는 자료 및 참고자료의 수집, 선택, 분류, 목록 편성, 보관, 열람 지원 업무 등
 - 속기 : 속기 문자나 속기 타자 기계류를 사용해 회의나 좌담회 등 의사에 관한 발언을 기록하는 업무 등
 - 방호 : 청사 출입자 통제, 순찰 및 방호 및 청사 환경 관리 업무 등

○ 기술 직군

- 공업 : 무기 및 유기화학, 생화학, 분석화학 분야 및 전자계산기 반도체 산업 전기기기 전자용품 전자계산 조직 및 농업기계와 냉난방 수도 위생설비 계량기 등 각종 기계 기구 설비에 관한 관리 업무 등
- 농업 : 농지 개량 확대를 위한 조사, 계획, 설계, 측량과 공사 시공 업무 등
- 녹지 : 지자체 공원, 광장, 도로, 운동, 휴식 공간 설계와 지역 산림, 조경 등 녹화 관련 업무 등
- 수의 : 동물 병리 및 약리, 가축 가금의 진료, 방역 및 검역 및 수의 분야 전반에 관련한 업무 등
- 해양수산 : 수산 자원의 조성, 보호 관리, 증식 및 양식 산업 개발, 연근해 어업 및 내수면 어업 등 어업 육성 장려, 어업 분쟁의 조정 및 해상 사고 관한 조사 업무 등
- 보건 : 보건소, 시군구청, 병원 및 의료원 등에서 행정업무와 함께 보건 위생 검열 등의 업무 및 보건 의료행정의 계획수립, 조정 집행의 업무, 예방접종, 검사시험에 관한 병역업무, 전염병균에 관한 검역업무 등
- 식품위생 : 식품·식품첨가물·기구 또는 용기·포장 등 음식에 관한 위생상의 위해 방지업무 및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지도 및 행정처분 업무 등
- 의료기술 : 보건소에서 임상병리, 물리치료, 방사선, 치과위생, 의무기록 등의 업무 등
- 의무 : 의무행정에 관한 계획의 수립, 의료기관에서 진료 업무 등 의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등
- 약무 : 약무행정에 관한 계획의 수립, 의약품의 제조허가 의약품의 수급 조절 및 각종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의 조제 등에 관한 업무 등 약무분야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등
- 간호 : 병원, 의원 및 요양원 등에서 환자의 안정회복과 치료에 관련된 간호업무 및 지역사회 및 각종 단위기관에서 질병의 예방과 보건위생

관리에 관한 예방간호업무 등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등

- 보건진료 : 보건소 및 병원 등에서 보건 행정과 보건 위생 검열 등의 업무 및 보건, 의료행정 등의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조정 및 집행을 하며 전염병 예방 등 검역 업무 등
- 환경 :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수립 및 대기오염, 토양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인한 보건 위생상의 위해방지 및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등
- 항공 : 항공기의 운항, 항공시설의 보수 정비 운용 및 항공관제 각종 시설의 점검 업무 등 *현재 국가공무원만 현원이 있음
- 시설 : 지역계획, 도시계획 및 산업입지조성의 입안·연구·총괄 조정 및 도로, 교량, 철도, 상·하수도, 항만, 하천, 댐 등의 건설공사 및 농지 개량 및 농지확대를 위한 조사, 계획, 설계, 측량 제도와 공사시공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등
- 방재안전 : 각종 재난 대응 및 총괄 기획, 지역안전관리계획 및 지역재난대응계획 수립, 안전교육 및 훈련, 안전점검 장비운영·관리, 각종 재난상황의 관리와 초동 대응 업무 등
- 방송통신 : 통신장비를 이용해 통신 장비의 불법적인 사용 감시 및 전송 기기의 유지, 보수 업무 등
- 위생 : 취사 및 배식관리, 청사관리 및 구내식당 위생관리, 어업지도선 승선 및 조리업무, 시험조사선 취사업무, 식당운영 및 관리, 직원급식제공, 청사 내 위생 관리, 환경미화 업무 등
- 조리 : 어업지도선 승선 및 조리업무, 선박 내 조리기구 위생관리, 지도선 내 조리업무, 구내식당 조리, 급식조리 업무 등
- 간호조무 : 생활관 학생위생 및 양호, 위생지도 및 건강점검,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보조, 건강검사, 민원상담 업무 등
- 시설관리 : 시설물 유지·보수, 수목관리, 환경미화 업무 등
- 운전 : 운전 업무와 차량 점검, 유지 관리, 불법 주정차 단속 현장 근무, 특수차량 및 버스 운행 업무 등

<표 3-8> 직렬별 직무 내용

직군	직렬	직무 내용
행정	행정	지방 공공 기관 일선 일반 행정, 사회, 문화, 홍보 정책 등 지방 행정 전반
	세무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수 관련 세법에 따라 납부 세액 결정, 조사, 세금 부과, 승인 등 지방세수 징수
	전산	행정업무 전산화를 위한 전자계산, 계획수립, 조정 및 조직의 자료 처리 및 보관, 전산화 업무 분석 설계 프로그램 작성 및 유지
	교육 행정	각 시도교육청과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서무과에서 총무 및 교육행정 지원
	사회 복지	관할 구역 내 사회복지 혜택 수급자 선정, 사회복지기관과 자원봉사 연결, 교육 복지 관련 협회 지원
	사서	지자체 산하 도서관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제도 조사, 개선, 도서관 열람에 제공하는 자료 및 참고 자료의 수집, 선택, 분류, 목록 편성, 보관, 열람 지원
	속기	속기 문자나 속기 타자 기계류를 사용해 회의나 좌담회 등 의사에 관한 발언을 기록
	방호	청사 출입자 통제, 순찰 및 방호 및 청사 환경 관리
기술	공업	무기 및 유기화학, 생화학, 분석화학 분야 및 전자계산기 반도체산업 전기기기 전자용품 전자계산 조직 및 농업기계와 냉난방 수도 위생설비 계량기 등 각종 기계 기구 설비 관리
	농업	농지 개량 확대를 위한 조사, 계획, 설계, 측량과 공사 시공
	녹지	지자체 공원, 광장, 도로, 운동, 휴식 공간 설계와 지역 산림, 조경 등 녹화 관련 업무
	수의	동물 병리 및 약리, 가축 가금의 진료, 방역 및 검역 및 수의 분야 전반의 관련 업무
	해양 수산	수산 자원의 조성, 보호 관리, 증식 및 양식 산업 개발, 연근해 어업 및 내수면 어업 등 어업 육성 장려, 어업 분쟁의 조정 및 해상사고 관한 조사
	보건	보건소, 시군구청, 병원 및 의료원 등에서 행정업무와 함께 보건위생 검열 등의 업무 및 보건 의료행정의 계획 수립, 조정 집행의 업무, 예방접종, 검사시험에 관한 병역 의무, 전염병균에 관한 검역
	식품 위생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 등 음식에 관한 위생상의 위해 방지 업무 및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지도 및 행정처분
	의료 기술	보건소에서 임상병리, 물리치료, 방사선, 치과위생, 의무기록

<표 3-8> 직렬별 직무 내용(표계속)

직군	직렬	직무 내용
기술	의무	의무행정에 관한 계획의 수립, 의료기관에서 진료 업무 등 의무분야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등
	약무	약무행정에 관한 계획의 수립, 의약품의 제조허가 의약품의 수급조절 및 각종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의 조제 등에 관한 업무
	간호	병원, 의원 및 요양원 등에서 환자의 안정회복과 치료에 관련된 간호업무 및 지역사회 및 각종 단위기관에서 질병의 예방과 보건위생관리에 관한 예방간호 업무
	보건 진료	보건소 및 병원 등에서 보건 행정과 보건 위생 검열 등의 업무 및 보건, 의료행정 등의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조정 및 집행을 하며 전염병 예방 등 검역 의무
	환경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수립 및 대기오염, 토양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인한 보건 위생상의 위해 방지 및 기타 환경보전
	항공	항공기의 운항, 항공시설의 보수 정비 운용 및 항공관제 각종 시설의 점검
	시설	지역계획, 도시계획 및 산업입지조성의 입안 연구 총괄 조정 및 도로 교량 철도 상하수도 항만 하천 댐 등 건설공사 및 농지개량확대를 위한 조사 계획 설계 측량과 공사시공
	방재 안전	각종 재난 대응 및 총괄 기획, 지역안전관리계획 및 지역재난대응계획 수립, 안전교육 및 훈련, 안전점검 장비운영 관리, 각종 재난 상황의 관리와 초동 대응
	방송 통신	통신장비를 이용해 통신 장비의 불법적인 사용 감시 및 전송 기기의 유지 보수
	위생	취사 및 배식관리, 청사관리 및 구내식당 위생관리, 어업지도선 승선 및 조리 업무, 시협조사선 취사업무, 식당운영 및 관리, 직원급식 제공, 청사내 위생 관리, 환경 미화
	조리	어업지도선 승선 및 조리업무, 선박 내 조리기구 위생관리, 지도선 내 조리업무, 구내식당 조리, 급식조리
	간호 조무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등에서 진료보조, 건강검사, 민원상담
	시설 관리	시설물 유지·보수, 수목관리, 환경미화 등
	운전	운전 업무, 차량 점검, 유지 관리, 불법 주정차 단속 현장 근무, 특수차량 및 버스 운행

3.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분석

-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은 지방자치단체 기능분류체계(BRM) 자료를 통해 파악할 수 있음
 - 2013년 지방자치단체 기능분류체계 자료는 95개의 지방자치단체 기능분류 자료를 포함하고 있었음(<표3-9> 참고)
 - 본 자료에는 중기능 수준까지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었는데 중기능은 팀 또는 과 수준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나타내는 것임
 - 12개 정책영역, 57개 정책분야에 다수의 대기능과 중기능을 포함하고 있음⁹⁾

9) 원래는 15개 정책영역, 65개 정책분야가 있으나 지자체의 주요 기능이라고 볼 수 없는 교육, 국방, 통일외교 분야와 공공질서안전 분야의 경찰 영역을 제외하였음

<표 3-9> 2013년 기능분류체계(BRM)자료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

유형	해당시군구
1유형: 광역시 (6)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서울, 세종)
2유형: 도 (8)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라, 전남, 경북, 경남
3유형: 50만 이상시 (7)	경기수원시, 경기성남시, 경기안양시, 경기부천시, 경기안산시, 경기용인시, 경기화성시
4유형: 50만 미만시 (20)	경기광명시, 경기동두천, 경기구리시, 경기군포시, 경기성남시, 경기안양시, 경기용인시, 경기화성시, 경기의왕시, 경기하남시, 경기파주시, 경기이천시, 경기광주시, 경기포천시, 경기여주시, 강원동해시, 강원태백시, 충남논산시, 충남당진시, 충북청주시
5유형: 도농 복합시 (10)	경기평택시, 충북충주시, 충남아산시, 충남서산시, 전북익산시, 전남여수시, 전남광양시, 경북문경시, 경남진주시, 경남사천시
6유형: 5만 이상군 (10)	대구달성군, 경기양평군, 충북영동군, 충남홍성군, 전남고흥군, 경북칠곡군, 경남합안군, 경남창녕군, 경남하동군, 경남합천군
7유형: 5만 미만군 (13)	경기연천군, 강원횡성군, 강원영월군, 강원평창군, 강원고성군, 충남청양군, 전남장흥군, 전남장성군, 경북영양군, 경북예천군, 경북봉화군, 경남의령군, 경남함양군
8유형: 특별시 자치구 (5)	서울강남구, 서울금천구, 서울서대문구, 서울성북구, 서울중구
9유형: 광역시 자치구 (14)	대전동구, 대전유성구, 부산금정구, 부산남구, 부산부산진구, 부산북구, 부산서구, 부산수영구, 부산중구, 울산북구, 울산중구, 인천남동구, 인천부평구, 인천서구

<표 3-10> 지방자치단체 기능분류체계(BRM)

정책 영역	정책분야	대기능	중기능
산업 중소 기업	산업중소 기업일반	소비자보호	공산품지도감독 소비자관련지원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의운영및관리
		지역경제	물가안정 시장지원 지역경제분석 지역경제지원
		공정거래	공정거래지도감독 공정거래지원
	산업진흥 고도화	기업지원	공장지원 기업관련지원 중소기업지원 공장관련사무 공 장관련지도감독 일반산업기술지원
		산업진흥	유통업지도감독 유통업지원 유통업관련업무수행 계량업 관련지도감독 계량업관련사무
		지역산업	지역산업관련기획 지역산업지원
	산업금융 지원	산업및중소기업금 융지원	산업및중소기업금융관련지원
	무역및투자 유치	무역	수출관련분석 수출관련지원
		통상협력	전시회운영 투자유치기획 투자유치지원 신성장동력·고 부가서비스산업 국제협력기획 국제교류정책수행
산업기술 지원	산업기술개발육성	일반산업기술지원	
일반 공공 행정	재정금융	지방세외기획	예산기획
		지방세외운용	지방재정운영
		지방세운용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지방 세제도운영
		지방세정책기획	세정기획 지방세과세기준
	일반행정	선거관리	선거및투표
		일반행정지원	감사 공보 과공통일반사무 기록물관리 기획 민원 법무 의회 인사 지역혁신 지적 청사관리 총무 회계 통계 자치 계약심사 창조행정 지방분권지원, 관인관리 세계박람회개최준비(경기도, 대 전광역시, 전라남도, 전남 여수시, 충청북도) 자치단체자 율통합(전남여수시, 서울특별시..충청북도, 청주시) 민주 정신선양(광주광역시, 서울 금천구, 서울 서대문구)
		주소정책	주소행정
농림 해양 수산	산림자원관리	산림보호및산지이용관리 영림계획및사업시행관리 임산 물관리	

<표 3-10> 지방자치단체 기능분류체계(BRM)(표계속)

정책 영역	정책분야	대기능	중기능
농림 해양 수산	농업농촌	산림정책	산림보호인력임업직공무원교육지도 산림정책기획 산림정책수행
		농림진흥	농림수산물부소관사업관리 농업경영육성사업 농외소득사업의육성및지도 농업관련단체관리 복합영농의운영및지도 추곡수매관리 농업기술보급 농촌지도조성 농업인지원사업 도시농업육성 친환경농업
		농산물	농산물가공산업관리 농산물안정성관리 농산물유통관리 농산물특화사업 식량관리 원예과수농업관리 종자관리
		농업기반시설	농업관계시설관리 농약비료관리 농업기반시설확충 농업인력관리 농업자재관리 농지관리
		농업기술연구개발	농업기술력제고
		농업재해	농업재해관리 병충해방제
		농촌생활환경	농업인자녀지원 농촌관광사업 농촌환경개선
		축산기반시설	사료관리 축산분뇨처리관리 초지관리
		축산물	축산물보관운반판매업관리 축산물가공업관리 축산물위생 축산물유통구조관리
		축산업진흥	우수가축진흥사업 원유진흥사업 축산법인단체관리 축산업진흥사업관리 축산업행정
	축산재해질병관리	가축질병관리 축산재해관리	
	해양수산 어촌	수산자원관리및 조성	공유수면점사용 근해어업관리육성 내수면어업관리육성 수면자원관리 양식업관리육성 어장이용및어항관리 해양생물관리
		수산정책	수산물유통관리 수산정책기획 수산정책수행
	사회 복지	노인 청소년	노인생활안정
청소년정책			청소년관련시설지원 청소년관련위원회운영지원 청소년 관련재정지원 청소년관련정책수립 청소년관련행사지원 청소년교육지원 청소년단체지원 청소년활동지원
청소년주변환경 관련정책			청소년선도보호및상담 청소년유해환경단속및개선
주택		임대주택정책	영구임대주택관리 임대주택운영및관리
보육가족및 여성		가족기능강화	가정지원시설운영 가족관련정책및사업 모자보호시설관리
	보육복지 여성	보육복지	보육시설관리 보육정책및행정업무
아동보호		결식아동지원 아동보호관리 아동복지시설관리 아동복지 정책	

<표 3-10> 지방자치단체 기능분류체계(BRM)(표계속)

정책 영역	정책분야	대기능	중기능	
		여성권익증진	양성평등업무 여성권익증진지원	
		여성복지	여성능력개발 여성단체관리 여성복지시설관리 여성정책 및활동지원	
		요보호여성보호	요보호여성복지시설관리 요보호여성지원	
	사회복지 일반	사회복지기반조성	사회복지시설및단체관리 사회복지정책지원	성금모금
		의료지원	의료급여업무	
		자원봉사관리	자원봉사시설관리 자원봉사연구개발 자원봉사자단체관리 자원봉사정책지원	
		장묘	장묘문화계획수립 장묘시설관리	
		사회복지행정일반	사회복지행정지원	
		기초생활 보장	생활보호대상자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대상자지원 인권보호대상자지원 차상위계층지원
	취약계층 지원	자활서비스	자활정책및운영	
		부랑인의사상자지원	부랑인및행려자지원 의사상자지원	
		장애인생활안정지원	장애인단체지원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장애인복지시설 관리 장애인의료및재정지원	
		장애인직업재활지원	장애인고용촉진 장애인직업재활지원업무	
		사례관리	사례관리	
		다문화지원	다문화지원사업	
	과학 기술	과학기술 연구지원	과학기술진흥지원	과학기술진흥정책기획 과학기술진흥정책수행
			과학기술테마단지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조성사업 테크노파크조성사업 광고테크노밸리조성사업(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경기도) 과천지식정보타운사업(경기도)
	문화 체육 관광	문화재	문화재보존정책	문화재보존정책기획 문화재보존정책수행 전통사찰관리 박물관운영
관광		관광산업	관광문화단지개발 관광사업수행 관광사업지원 관광사업체관리 관광상품개발 관광안내및홍보 관광지관리	
		관광정책	관광정책기획 관광정책수행	
문화예술		문화사업관리	문화관련사업자(장)등록 문화관련사업자(장)지도관리 문화사업수행 문화예술회관운영 미술관운영(서울특별시) 동식물공원운영관리(서울특별시) 방송제작(서울특별시)	
		문화산업정책	문화원문화재단운영지원 문화산업정책기획 문화산업정책수행	
		문화예술정책	시사편찬발굴보존 문화예술사업 문화예술정책수행 예술단체육성지원및관리	

<표 3-10> 지방자치단체 기능분류체계(BRM)(표계속)

정책 영역	정책분야	대기능	중기능
	체육	지역문화예술진흥	예술단체활동지원 문화예술활동지원 지역문화행사지원
		국제체육대회유치	각종국제체육대회
공공 질서 안전	재난방재및 민방위	체육정책	생활체육및체육행사지원 체육시설관리 체육정책기획 체육정책수행 스포츠산업
		구조구급	구급업운영지원 구급업무정책 구조구급대원관리 응급의료기관관련업무
		민방위	민방위계획수립 민방위치안관리 민방위훈련운영관리 을지충무훈련관리 인력물자동원관리
		복구지원관리	재난복구정책수립및수행 재해구호지원
		소방시설및장비관리	소방관서설치및관리 소방시설관리감독 소방장비지원 소방정보통신관리 위성영상사업관리
		소방인력관리	소방공무원관리 소방공익근무요원관리 소방교육훈련 소방력확충및동원 소방학교운영관리 의용의무소방대운영관리
		소방일반관리	건설공사관리 본부및소방서지도감독 소방방재지도감독 소방방재행정관리 소방법관리 소방상황종합관리업무 소방예산관리 화재조사및분석 화재진압관리
		재난상황관리	재난방재교육및지도 재난상황대응및지원 재난재해대처업무 재난재해종합관리업무
		재난예방관리	산림보호관리 안전관리총괄업무 위험물관리 인적재난관리 자연재난예방관리 재난재해대비업무 재난재해연구조사및분석 재난재해예방업무 재난재해예방지원 재난재해예방홍보및교육 풍수해관련대책수립및수행 사회적재난관리
		재난재해시설및장비관리	재난방재정보화관리 재난예방관련시스템구축및운영 재난재해시설물점검및지도 재해위험지구관리
		재난재해인력관리	재난재해인력운영
재난안전	재난재해종합관리업무		
통신	정보통신	정보통신망	무선통신망운영 정보통신망구축및운영 정보통신보안 통신시설구축관리 통신장비관리
		정보통신사업	정보통신민원정보화사업
		정보통신정책	정보통신관련업관리 정보통신정책일반 지역정보화정책 행정전산화정책 행정정보화정책 홈페이지웹관리
		정보화지원	정보화관련교육 지역정보화지원 행정정보화지원

<표 3-10> 지방자치단체 기능분류체계(BRM)(표계속)

정책 영역	정책분야	대기능	증기능
수송 및 교통		방송통신	방송통신시설운영관리
		정보자원관리	소프트웨어관리 시스템개발운영 전산장비및전산실관리 정보보안
		전산관리	전산장비및전산실관리
		지리정보	지리정보시스템관리 지리정보종합계획수립및시행
	물류등 기타	교통관리	교통기획관리 교통단속및처분 교통소통관리 교통시설물관리 교통안전관리 교통행정 자동차관리사업 주정차관리
		대중교통	대중교통기획 대중교통시설관리 대중교통행정
		물류정책	물류시설확충 물류운송사업관리 유통단지조성 물류행정
		육상및광역교통정책	광역버스운송체계관리 교통재정관리 육상및광역교통정책기타 지능형교통체계구축사업(태백시)
	항공공항	항공공항정책	항공공항시설관리 항공공항행정
	도로	도로건설	도로건설공사시행 도로건설공사지도감독 도로건설행정 도로공사용역관리
		도로관리	국공유재산관리 도로유지정비 인도관리 자전거도로관리 접도구역관리
		도로시설물관리	도로시설물설치 도로시설물유지보수
		도로정책	도로굴착관련정책 도로관련세부계획수립 도로망관련정책 도로교통정책 도로노선관리 도로방재정책 도로보상 도로점용사용관련정책 도로행정 민자유치
	도시철도	도시철도건설(용인시 서울특별시 외)	도시철도건설사업(건축관리) 도시철도건설사업(계획지원) 도시철도건설사업(공사지원) 도시철도건설사업(설계지원) 도시철도건설사업(일반지원) 도시철도건설사업(전기신호관리) 도시철도건설사업(정보통신관리) 도시철도건설사업(차량설비관리) 도시철도건설사업지원
	해운항만	항만운영및해상운송정책	항만물류정책 해운항만정책및지원
		해운항만관련하천 정비관리	연안관리정비사업및점검 연안관리정책
철도	철도 정책(동두천시, 연천군)	철도건설(화성시) 철도행정	
	광역철도	광역철도건설(부천시, 성남시, 의왕시)	

<표 3-10> 지방자치단체 기능분류체계(BRM)(표계속)

정책 영역	정책분야	대기능	중기능
보건	식품의약품안전	식품안전	식품안전검사및교육 식품위생정책및운영 식품위생지도감독 음식문화개선및개발육성
		의약품안전	부정의료의약품지도감독 의약품의약품관리
	보건의료	공중위생	공중위생정책및운영 공중위생지도감독
		지역보건	건강증진관리 법정전염병관리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보건행정 의료인및의료기관관리 지역보건관련업소 지역보건발전사업 지역보건지도감독 질병연구및관리 법정감염병관리
환경보호	환경보호일반	도시환경	공단환경 비산먼지 생활환경 소음진동 악취관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휘발성유기화합물
		환경보전	자연환경보호 환경보전지역관리 환경보호관련관리일반 환경보호관련기반시설및인력 환경보호관련제도 환경재난
	대기	대기보전	대기배출업소및관련사업자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대기보전관련제도 대기오염기반시설및인력 자동차대기오염
	상하수도및수질	상수도	상수도관련관리일반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상수도관련사업자 상수도관련제도
		일반수질	상수원지하수 수질보전관련제도 수질보전관리일반 수질보전기반시설및인력 수질오염배출업소 하천수질관리
		중하수도	중수도 하수도
	자연	생태계	생태계보전 생태계복원
		야생동식물	야생동식물
		토양	토양오염
	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사업장폐기물관리관리일반 사업장폐기물관리기반시설및인력 사업장폐기물관리사업자 사업장폐기물관리제도 사업장폐기물배출업소관리 유독물질관리
		생활폐기물	공중화장실관리 생활폐기물관리관리일반 생활폐기물관리기반시설및인력 생활폐기물관리사업자 생활폐기물관리제도 생활폐기물소각매립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재활용관련관리일반 재활용관련기반시설및인력 재활용관련사업자 재활용관련제도
		청소	청소관련사업자 청소관련관리일반 청소관련기반시설및인력
		폐기물관리일반	폐기물매립시설운영
	해양	해양보전	해양보전관련관리일반 해양자원

<표 3-10> 지방자치단체 기능분류체계(BRM)(표계속)

정책영역	정책분야	대기능	중기능
지역개발	지역및도시	건설건축	건설건축기획및수행 건설및건축지도감독 건설및건축지원 건설장비자재관리
		공원녹화	공원녹화기획공원녹화수행 공원녹화지도감독 공원녹화지원
		주택건설	국민주택건설사업 주택관련기획 주택관련지도감독 주택관련지원 도시주거환경정비 도시재정비 한옥보존및진흥
		지역및도시계획	도시계획관리 주변환경개선 지역개발관리
		토지	토지관련기획 토지관련지도감독 토지관련지원
	수자원	하천	하천정비기획 하천정비수행 하천정비지도감독 하천정비지원 하천환경
	산업단지	산업단지개발	산업단지기획 산업단지지도감독 산업단지지원

- 각 정책영역 별, 정책분야, 대기능, 중기능의 수와 관련 직렬을 제시한 바는 다음과 같음
 - 관련 문헌 조사 및 인터뷰 내용 등을 토대로 위에서 제시한 지방자치단체 기능에 해당하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렬(일반직 행정직군, 기술직군 직렬)들을 제시하였음

<표 3-11> 지방자치단체 기능과 해당직렬

정책영역	산업중소기업	일반공공행정	농림해양수산	사회복지	과학기술	문화체육관광
정책분야	6	2	3	8	1	4
대기능	12	7	14	26	2	9
중기능	40	32	61	73	7	36
관련직렬	행정	행정, 세무	농업, 녹지, 수의, 해양수산	사회복지	행정, 시설 등	행정, 시설 등

<표 3-11> 지방자치단체 기능과 해당직렬(표계속)

정책영역	공공질서 안전	통신	수송 및 교통	보건	환경보호	지역개발
정책분야	1	1	6	2	6	3
대기능	11	8	14	4	15	7
증기능	53	23	58	16	57	28
관련직렬	방재안전, 행정, 시설, 녹지 등	전산, 방송통신	항공, 시설, 공업	보건, 식품위생, 의료기술, 의무, 약무, 간호, 보건진료, 간호조무	환경	녹지, 시설

4. 소결

- 이상의 객관적 문헌자료 즉, 통계자료와 지방자치단체 기능분류체계(BRM) 자료를 근거로 행정수요의 변화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분석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개편 대상 직렬을 추출함
 - 10명 이하 극소수 직렬을 대상으로 직렬 폐지 검토
 - 10명 이상 500명 이하 소수 직렬 또는 급격한 인원 감소가 있었던 직렬들을 대상으로 통폐합 검토
 - 급격한 인원 감소는 행정수요의 감소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음
 - 5000명 이상 대직렬 중에서 급격한 인원 증가가 있었던 직렬 중에 업무가 세분화한 경우에 직렬 세분 검토
 - 급격한 인원 증가는 행정수요의 증가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기능이면서도 행정직렬 외 담당 직렬이 존재하지 않는 문화체육관광기능 관련 직렬이 필요함

<표 3-12> 문헌자료분석을 토대로 한 개편 대상 직렬의 추출

구분	문헌자료분석	
	대상직렬	필요성
폐지	교육행정, 항공, 조리	-10명 이하 극소수직렬 -행정수요가 감소하는 경우 -지자체의 핵심 기능이 아닌 경우
통합	숙기, 식품위생, 의무, 약무, 간호조무, 운전	-500명 이하 소수직렬 또는 최근 급격한 인원감소직렬 중에서 유사업무가 있는 경우 -행정수요가 감소하는 경우 -지자체의 핵심 기능이 아닌 경우
세분	세무, 사회복지, 사서	-5000명 이상 대직렬 또는 최근 급격한 인원증가직렬 -업무가 세분화한 경우 -업무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신설	문화재관리 직렬	-지자체의 주요 기능이면서 행정직렬의 담당 직렬이 존재하지 않음 -문화관련 업무 중에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문화재관리 업무의 전문성 요구

제3절 실태조사분석

1. 면담조사

1) 면담조사 개요

- 현행 직렬제도 운영상의 문제점과 직렬제도 개편 수요, 그리고 개편시 인사상의 문제점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대표적 지자체 소속 인사담당 공무원에 대한 심층면담 조사를 다음과 같이 설계하였음
 - 면담대상은 광역지자체 2곳(A시, B도), 기초지자체 1곳(C시)의 인사담당

자이며, 면담은 2015년 5월 18일부터 5월 26일까지 약 10일의 기간 동안 진행되었음

- 면담내용은 지방공무원 직급체계 운영 현황(직렬·직급별 현원, 채용계획 등), 직렬별 인사운영상 특이사항 등 운영현황과 직렬의 폐지·통합·세분·신설에 관한 의견, 직군·직류 조정 등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 계급 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 직렬 개편으로 인한 인사운영상 형평성 문제 및 애로사항 발생 여부 등에 관한 의견 등 개편방안에 관한 의견임

<표 3-13> 면담 조사 개요

면담대상	광역 지자체 (인사담당자)		기초 지자체 (인사담당자)
	A 시	B 도	C 시
면담일시	2015.5.18.	2015.5.22.	2015.5.26
면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공무원 직급체계 운영 현황(직렬·직급별 현원, 채용계획 등) - 직렬별 인사운영상 특이사항 ■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렬의 폐지·통합·세분·신설에 관한 의견 - 직군·직류 조정 등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 - 계급 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 등 		

2) 면담조사 내용분석

가. 직렬 운영 현황

- 채용, 보직관리, 승진, 근평 등 인사운영의 기본단위는 직류이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에 제시된 직렬과 직류들 중에서 각 지자체에 필요한 일부 직렬(직류)만을 운영하고 있음

- 각 직렬이 담당해야 하는 직무를 성문화하고 있지는 않음

나. 직렬 개편 수요

○ 개편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음

- 폐지 대상 직렬로 교육행정직렬, 항공직렬, 위생직렬, 조리직렬 등을 들고 있음
 - 지방행정과 무관하거나 행정수요 감소
- 통합 직렬로 ‘식품위생+조리’, ‘위생+시설관리’, ‘간호직렬+간호조무직렬’, ‘식품위생+조리’, ‘위생+시설관리’, ‘방호+시설관리’, ‘행정직렬+사회복지직렬’을 제시하였음
- 직렬내 직류를 통합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해양수산직렬(‘수산증식직류+수산물검사직류’, ‘일반선박직류+선박항해직류+선박기관직류’), 공업직렬 등을 제시하였음
 - 이들을 통합 직렬로 선택한 이유로는 대부분 직무의 유사성을 들고 있으며 간혹 직무의 불명확성을 이유로 드는 경우(위생, 시설관리)도 있었음
- 직렬 내 직류 세분화가 필요한 직렬로 의료기술직렬, 세무직렬을 들고 있음
 - 세무직렬이 담당하는 업무는 단순히 지방세 부과와 운영 업무 외에 회계의 전문성이 요구됨
 - 의료기술직렬이 담당하는 방사선 업무, 물리치료 업무 등 업무가 다양해졌음
- 신설 직렬로 감사직렬과 문화재운영직렬을 제시하였음
 - 최근 감사 업무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최근 수요가 상승하고 있는 박물관 운영, 문화시설 운영 등의 업무에도 전문성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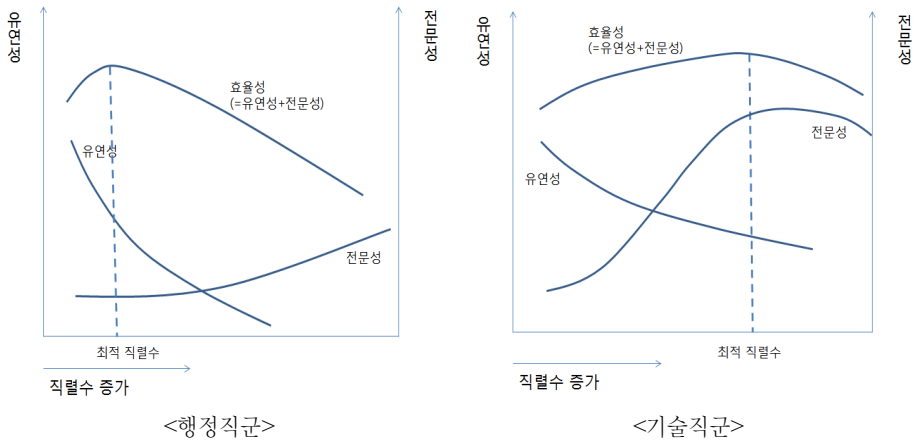
<표 3-14> 면담 조사 내용

면담대상 개편의견	광역 지자체 (인사담당자)				기초 지자체 (인사담당자)	
	A 시		B 도		C 시	
	대상직렬	필요성	대상직렬	필요성	대상직렬	필요성
폐지			위생, 조리	행정수요감소	교육행정, 항공 위생, 조리	지방행정과 무관
통합	(식품위생+ 조리), (위생+ 시설관리)	업무의 유사성	(간호직렬+ 간호조무직렬), (식품위생+ 조리), (위생+시설관리), (방호+시설관리), (행정직렬+ 사회복지직렬), 해양수산직렬 (수산중식직류+ 수산물검사직류/ 일반선박직류+ 선박항해직류+ 선박기관직류) 공업직렬 (야금직류 등 폐지)	업무의 유사성 또는 업무의 불명확성	(간호직렬+ 간호조무직렬), (식품위생+ 조리), (위생+시설관리), (방호+시설관리),	업무의 유사성
세분					의료기술직	업무다양화
					세무직렬	회계전문성 필요
신설	감사직렬				문화재운영직렬	

- 각 면담 대상자들 의견의 공통된 특징은 행정직군과 기술직군 개편 의견에 있어서 비대칭성이 존재한다는 것임
 - 대직렬인 행정직군 내 직렬들을 세분화하거나 새로운 직렬을 신설하는 것을 그리 선호하지 않았음
 - 세분화로 인한 전문성의 제고는 그리 크지 않은데 비해 인사운영상의 유연성이 제약되는 정도가 더 크다고 보기 때문임

- 반면 상대적으로 소수직렬인 기술직군의 직렬들에 대해서는 세분하거나 신설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적었는데 이는 세분화로 인한 전문성 제고의 정도가 더 큰 반면에 이미 승진 상 기회의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유연성이 제약되는 정도가 그리 커지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기 때문임
- 따라서 행정직군에서는 직렬수가 오히려 줄어드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었고, 기술직군에서는 직렬수가 늘어나도 상관없다고 보고 있었음
- 이와 같은 그들의 인식을 다음의 <그림 3-6>에서 분석할 수 있음

<그림 3-6> 행정직군과 기술직군의 최적 직렬수 판단에 대한 비대칭성



- 현행 직급체계의 적용이 맞지 않는 직렬들로 시설관리, 운전, 방호, 수의 그리고 간호직렬을 들고 있음.
 - 시설관리, 운전, 방호, 수의 직렬의 경우에는 직급 간의 직무의 난이도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임
 - 간호직렬의 경우 현행 8급부터 시작하는 것이 다른 직렬들과의 형평상 맞지 않음을 지적함

다. 직렬 개편이 인사관리에 미치는 영향

- 소수직렬 통합이 인사상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주는지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이 존재하였음
 - 소수직렬이 통합됨으로써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얻을 수도 있으나 오히려 통합된 다른 다수직렬과 경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면 기존의 기회마저도 제약당할 수 있게 됨
 - 상급자는 다수직렬 소속인 경우가 많아 근평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음

라. 기타 의견

- 지방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경력관 또는 전문직위제도 선호
 - 2~3년 동안 한 가지 업무만을 하게 하는 전문직위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직렬의 세분 또는 신설보다 더 선호함(A시, B도)
 - 전문직위 배치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수 등의 혜택을 주어 보상할 수 있으나 소수 직렬인 경우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 지자체의 조직인사운영의 자율성 요구
 - 중앙정부는 가이드라인만 정해주고 각 지자체의 조례로 조직인사운영 지침을 정해주기를 요구하였음
 - 지방의회는 견제기능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보고 있음

2. 설문조사

1) 설문조사 개요

- 현행 직렬제도 개편에 관하여 지방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다음과 같이 설계하였음

- 설문지는 선행연구 및 면담조사 등의 내용을 토대로 직렬체계 개편의 필요성과 폐지·통합·세분화·신설 등 개편방안에 관하여 구조화된 질문으로 구성되었음
- 조사대상자는 직렬제도 재조정과 직접적으로 이해 관계가 있는 지자체 공무원이며, 인사담당자와 노조, 일반공무원을 모두 포함하여 조사하였음
- 광역지자체(17개)와 기초지자체(227개)에 각각 5부씩 배포하였으나 6월 2일에서 6월 22일의 기간 동안 750부가 수거되었으며 이 중 유효한 설문지는 741부였음

<표 3-15> 설문조사의 개요

구분	내용
대상	전국 지자체 공무원(인사담당자, 노조, 일반공무원 포함)
도구	구조화된 설문
절차	작성(연구진/행자부)⇒배포/회수(행자부)⇒코딩/분석(연구진)
배포일시	2015.6.2.~6.22(약 3주간)
내용	직렬체계 개편의 필요성 및 문제점 폐지·통합·세분화·신설 등 개편대상 직렬 도출 탄력적 계급 적용 직렬 발굴

2) 설문조사 결과 분석

가. 응답자 특성

- 다음 <표 3-16>에서는 응답자의 성별·연령·학력·계급·단체종류·직위별 분포를 보여주고 있음
 - 응답자의 성별 분포는 남자가 72.5%, 여자가 26.7%임
 - 응답자의 연령별 분포는 40대가 14.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30대로 29.4%, 그 다음은 50대(14.8%), 마지막으로 20대(1.8%)임
 - 학력별 분포로는 대졸(74.9%) 포함하여 대졸 이상이 80%이고, 전문대졸

이 10.1%, 고졸 이하가 7.6%임

- 계급별 분포는 7급이 48.0%로 가장 많고, 6급이 34.3%, 8급이 14.3%, 9급이 1.3%, 5급이 1.2%임
- 단체종류별로는 기초지자체 소속 응답자가 전체의 87.6%, 광역지자체 소속이 10.3%임
- 직위별로는 인사담당자가 26.9%, 노조임원이 17.8%, 일반공무원이 52.4%를 차지하고 있음

<표 3-16> 응답자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전체합계		741	100
성별	남	537	72.5
	여	198	26.7
	무응답	6	0.8
연령	20~29세	13	1.8
	30~39세	218	29.4
	40~49세	395	53.3
	50~59세	108	14.8
	60세 이상	0	0
	무응답	7	0.9
학력	고졸이하	56	7.6
	전문대졸	75	10.1
	대졸	555	74.9
	대학원 이상	38	5.1
	무응답	17	2.3
계급	5	9	1.2
	6	254	34.3
	7	356	48.0
	8	104	14.3
	9	10	1.3
	무응답	8	1.1

<표 3-16> 응답자 특성(표계속)

구분		빈도(명)	비율(%)
단체종류	광역	76	10.3
	기초	649	87.6
	무응답	16	2.2
직위	인사담당자	199	26.9
	노조임원	132	17.8
	기타(일반공무원)	388	52.4
	무응답	22	3.0

나. 직급(직렬)체계 개선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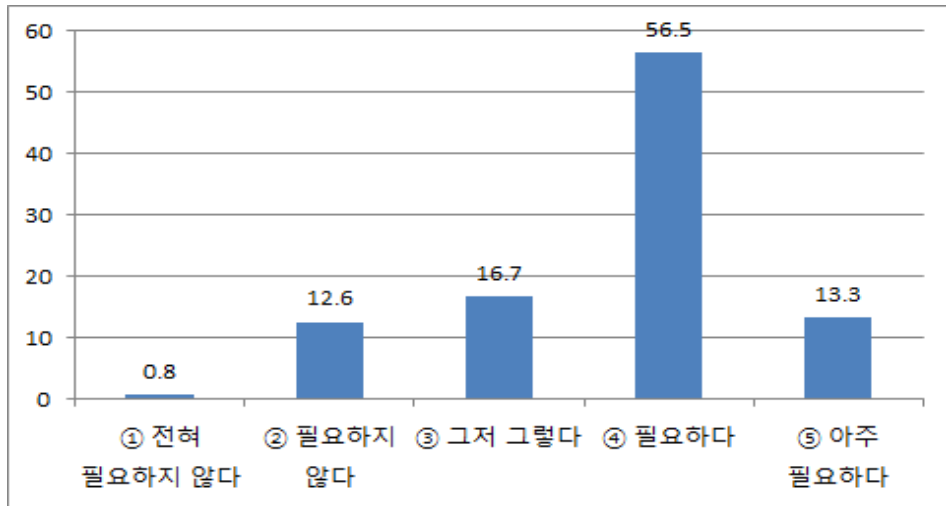
-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직급(직렬)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서 전체의 69.8%의 응답자가 ‘필요하다’ 또는 ‘아주 필요하다’고 답하여 직
급(직렬)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음
 - 광역지자체에 속한 공무원이나 기초지자체에 속한 공무원 모두 ‘필요하
다’ 또는 ‘아주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2.4%와 69.6%에 이르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는 인사담당자나 노조임원 그리고 일반공무원의 경우에도 차이가 없
어 역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0%를 넘었으며 다만
노조임원인 경우 ‘아주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9%에 달해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음

<표 3-17> 직급(직렬)체계 개선의 필요성

구분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 필요하지 않다	③ 그저 그렇다	④ 필요하다	⑤ 아주 필요하다	합계	
전체	6 (0.8%)	93 (12.6%)	123 (16.7%)	416 (56.5%)	98 (13.3%)	736 (100%)	
단체 종류	광역	0 (0%)	10 (13.2%)	11 (14.5%)	44 (57.9%)	11 (14.5%)	76 (100%)
	기초	6 (0.9%)	82 (12.7%)	109 (16.8%)	366 (56.5%)	85 (13.1%)	648 (100%)
직위	인사 담당자	3 (1.5%)	30 (15.1%)	28 (14.1%)	116 (58.3%)	22 (11.1%)	199 (100%)
	노조 임원	2 (0.2%)	12 (9.2%)	16 (12.2%)	63 (48.1%)	38 (29.0%)	131 (100%)
	기타	1 (0.3%)	49 (12.6%)	75 (19.3%)	226 (58.2%)	37 (9.5%)	388 (100%)

주: 무응답 5명; % 계산시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그림 3-7> 직급(직렬)체계 개선의 필요성



- 현 직급(직렬) 체계의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56.5%가 ‘직렬간 승진기회 차별 등 인사운영상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응답자의 39.1%가 ‘직무 내용 중복 등 직렬 체계 구분의 비일관성을 문제점’이라고 응답하였음
 - 그 다음으로는 전체 응답자의 27.6%가 ‘행정수요 변화 대처의 어려움’을 문제점으로 보고 있었으며 ‘직렬과 직무내용의 비정합성’(8.5%), ‘지방행정과 무관한 직렬 존재’(7.0%), ‘국가공무원 직렬체계와의 유사성으로 지방고유의 직렬 미비’(6.7%)의 순으로 응답자가 많았음
 - 기타 응답으로는 기능직 철폐로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함에 따른 직렬 구분의 모호성의 문제, 지방 업무의 특성상 전문성을 살리기 어려움의 문제, 광역과 기초의 직급 차이의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었음
 - 이러한 응답의 순위는 집단별-단체종류별, 직위별-로 살펴보면 1,2,3 순위까지는 차이가 없었고, 4,5,6순위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어 인사담당자는 지방행정과 무관한 직렬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을 4순위로 선택한 반면, 노조임원은 국가공무원과 직렬체계의 유사성으로 지방고유의 직렬이 미비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을 4순위로 들었음

<표 3-18> 현 직급(직렬)체계의 문제점(중복응답)

구분	전체	단체종류		직위		
		광역	기초	인사 담당자	노조 입원	기타
① 직렬간 승진기회 차별 등 인사운영상 형평성	419 (56.5%)	44 (57.9%)	368 (56.7%)	107 (53.8%)	96 (72.7%)	205 (52.8%)
② 행정수요 변화 대처의 어려움	205 (27.6%)	20 (26.3%)	182 (28.0%)	55 (27.6%)	46 (34.8%)	100 (25.8%)
③ 직무 내용 중복 등 직렬체계 구분의 비일관성	290 (39.1%)	29 (38.2%)	254 (39.1%)	69 (34.7%)	48 (36.4%)	165 (42.5%)
④ 직렬과 직무내용의 비정합성	63 (8.5%)	10 (13.2%)	52 (8.0%)	19 (9.5%)	9 (6.8%)	34 (8.8%)
⑤ 국가공무원 직렬체계와의 유사성으로 지방고유의 직렬 미비	50 (6.7%)	3 (3.9%)	47 (7.2%)	13 (6.5%)	10 (7.6%)	27 (7.0%)
⑥ 지방행정과 무관한 직렬 존재	52 (7.0%)	7 (9.2%)	43 (6.6%)	24 (12.1%)	7 (5.3%)	19 (4.9%)
⑦ 기타	24 (3.2%)	4 (5.3%)	20 (3.1%)	11 (5.5%)	4 (3.0%)	9 (2.3%)

주: %는 전체 공무원 중 응답자 비율

다. 직렬 구분 개선방안

(1) 직렬 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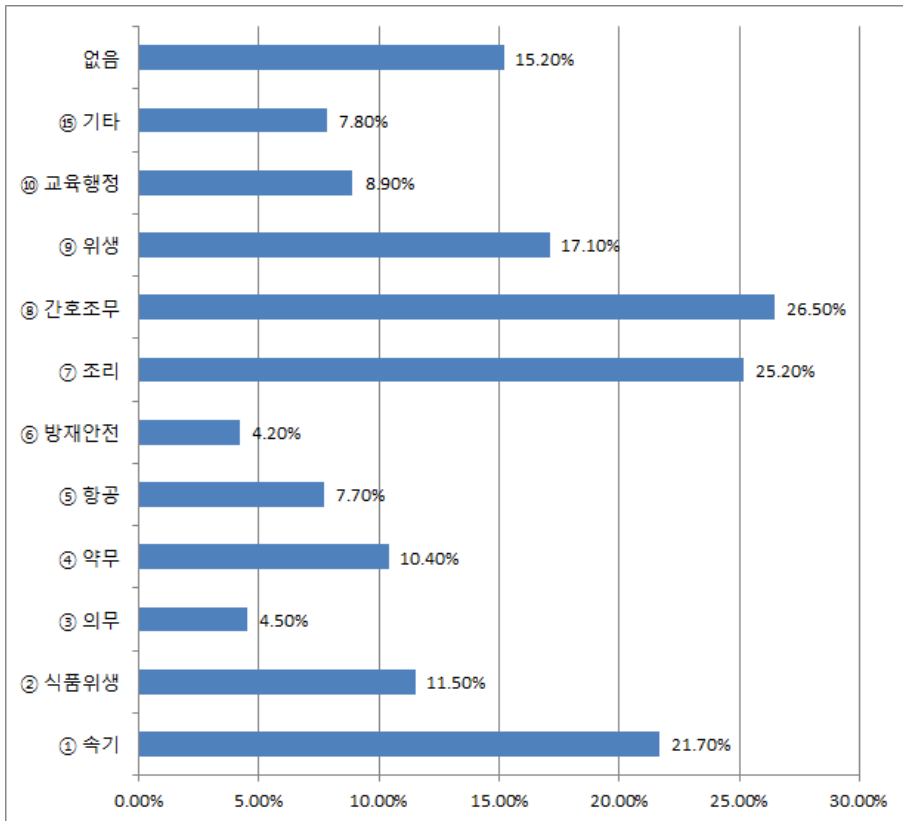
- 전체 응답자 중에서 20% 이상이 폐지 대상이라고 선택한 직렬은 속기, 조리, 간호조무직렬로 단순 직무이거나 더 이상 수요가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있음
 - 전체 응답자의 10% 이상이 폐지 대상으로 지적한 직렬은 식품위생, 위생, 약무임
 - 광역지자체 공무원은 조리와 간호조무 직렬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0%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기초지자체 공무원 역시 간호조무 직렬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6%에 달함
 - 인사담당자와 일반 공무원의 경우 간호조무(각각 36.2%, 24.5%), 조리(32.2%, 23.7%)를 폐지 대상 직렬 1,2순위로 지적하고 있으며 반면 노조

- 임원은 속기(20.5%), 조리(19.7%)를 폐지 대상 직렬 1,2순위로 보고 있음
- 기타 응답으로 방호, 운전, 사서, 시설관리, 보건진료 등을 폐지 대상 직렬로 보고 있음
- 폐지할 직렬이 없다는 응답도 15.2%에 달했고, 집단별로 보면 광역(7.9%)에 비해 기초(16.3%)지자체 공무원이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으며, 직위별로는 노조임원 25.6%가 폐지 직렬이 없다고 응답하였음

<표 3-19> 폐지 대상 직렬(중복응답)

구분	전체	단체종류		직위		
		광역	기초	인사 담당자	노조 임원	기타
① 속기	161 (21.7%)	9 (11.8%)	151 (23.3%)	38 (19.1%)	27 (20.5%)	91 (23.5%)
② 식품위생	85 (11.5%)	13 (17.1%)	70 (10.8%)	21 (10.6%)	18 (13.6%)	42 (10.8%)
③ 의무	33 (4.5%)	3 (3.9%)	29 (4.5%)	10 (5.0%)	3 (2.3%)	19 (4.9%)
④ 약무	77 (10.4%)	6 (7.9%)	70 (10.8%)	30 (15.1%)	10 (7.6%)	36 (9.3%)
⑤ 항공	57 (7.7%)	7 (9.2%)	48 (7.4%)	21 (10.6%)	8 (6.1%)	26 (6.7%)
⑥ 방재안전	31 (4.2%)	7 (9.2%)	24 (3.7%)	5 (2.5%)	7 (5.3%)	18 (4.6%)
⑦ 조리	187 (25.2%)	24 (31.5%)	160 (24.7%)	64 (32.2%)	26 (19.7%)	92 (23.7%)
⑧ 간호조무	196 (26.5%)	24 (31.5%)	168 (25.9%)	72 (36.2%)	22 (16.7%)	95 (24.5%)
⑨ 위생	127 (17.1%)	19 (25%)	104 (16.0%)	46 (23.1%)	18 (13.6%)	56 (14.4%)
⑩ 교육행정	66 (8.9%)	12 (15.8%)	53 (8.2%)	17 (8.5%)	14 (10.6%)	32 (8.2%)
⑮ 기타	58 (7.8%)	1 (1.3%)	56 (8.6%)	20 (10.1%)	11 (8.3%)	27 (7.0%)
⑯ 없음	113 (15.2%)	6 (7.9%)	106 (16.3%)	16 (8.0%)	34 (25.6%)	62 (16.0%)

<그림 3-8> 폐지 대상 직렬(중복응답)



- 직렬 폐지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34.5%가 ‘타직렬과 직무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26.5%가 ‘행정 수요 감소’를, 22.5%의 응답자가 ‘민간위탁이 더 효율적’(22.5%), 11%가 ‘소수 인원 배정’이라는 응답을 선택하였음
 - 기타 응답으로는 전문성을 살리기가 어렵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시간 선택제 또는 임기제 공무원의 채용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다수를 차지하였음

<표 3-20> 직렬 폐지 이유

구분	전체	단체종류		직위		
		광역	기초	인사 담당자	노조 임원	기타
① 소수 인원 배정	73 (11.0%)	9 (11.8%)	61 (10.7%)	25 (12.0%)	12 (12.1%)	33 (9.9%)
② 행정수요 감소	175 (26.5%)	20 (26.3%)	151 (26.4%)	59 (28.3%)	24 (24.2%)	86 (25.7%)
③ 타직렬과 직무내용 유사	228 (34.5%)	31 (40.8%)	193 (33.7%)	67 (32.2%)	39 (39.4%)	116 (34.7%)
④ 민간위탁이 더 효율적	149 (22.5%)	13 (17.1%)	134 (23.4%)	45 (21.6%)	20 (20.2%)	79 (23.6%)
⑤ 기타	36 (5.4%)	3 (3.9%)	33 (23.4%)	12 (5.8%)	4 (4.0%)	20 (6.0%)
합계	661 (100%)	76 (100%)	572 (5.8%)	208 (100%)	99 (100%)	334 (100%)

- 직렬 폐지 없음을 선택한 이유로는 전체 응답자의 65.3%가 전문성으로 인해 대체가 불가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집단별로 차이가 없이 모두 이를 1순위로 선택하였음
 - 향후 행정수요 발생 예상이라는 응답과 폐지시 인사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각각 17.3%, 16.0%에 달했음
 - 기타 응답으로는 ‘공무원으로서 전문성확보를 위해 직렬은 존치하되 승진기준에 직렬별 정원이 아닌 직급별로 인사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있었음

<표 3-21> 직렬 폐지 없음 선택 이유

구분	전체	단체종류		직위		
		광역	기초	인사 담당자	노조 임원	기타
① 향후 행정수요 발생 예상	25 (17.3%)	3 (30%)	22 (16.5%)	3 (13.6%)	5 (12.8%)	17 (20.7%)
② 전문성으로 인해 대체 불가	94 (65.3%)	6 (60%)	87 (65.4%)	16 (72.7%)	27 (69.2%)	51 (62.2%)
③ 폐지시 인사형평성 문제 발생	23 (16.0%)	1 (10%)	22 (16.5%)	3 (13.6%)	5 (12.8%)	14 (17.1%)
④ 기타	2 (1.4%)	0 (0%)	2 (1.5%)	0 (0%)	2 (5.1%)	0 (0%)
합계	144 (100%)	10 (100%)	133 (100%)	22 (100%)	39 (100%)	82 (100%)

(2) 직렬 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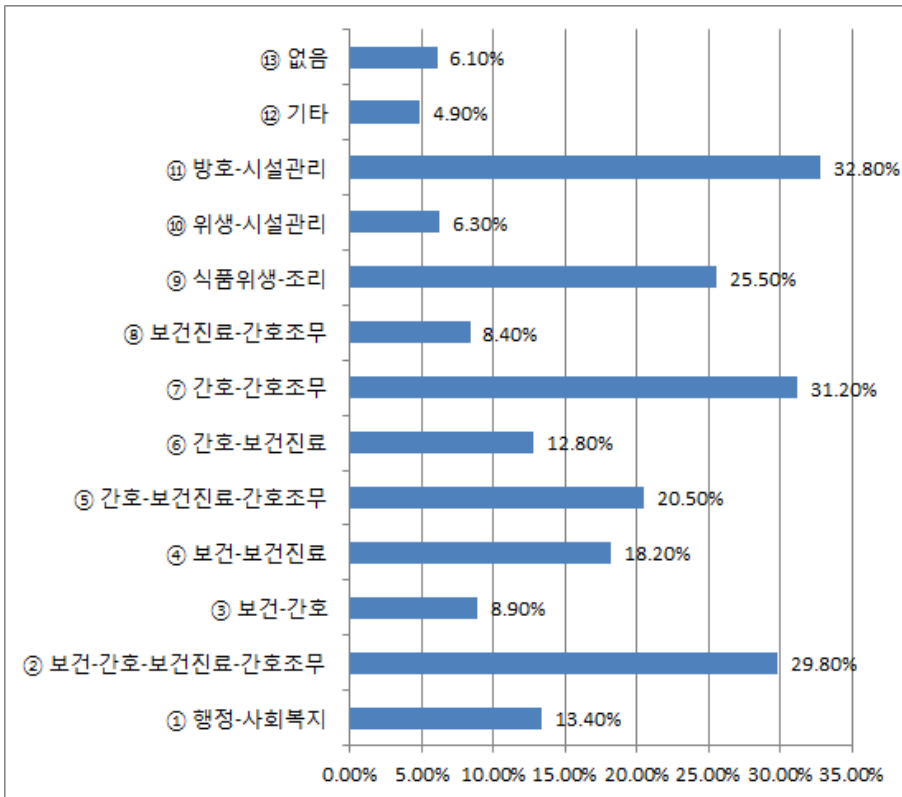
○ 통합해야 할 직렬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방호-시설관리’라고 응답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아 32.8%에 달했고, ‘간호-간호조무’, ‘보건-간호, 보건진료-간호조무’, ‘식품위생-조리’, ‘간호-보건진료-간호조무’를 선택한 비율도 각각 31.2%, 29.8%, 25.5%, 20.5%로 나타나고 있어 보건관련 직렬들의 통합에 대한 응답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었음

- 기타 응답으로는 ‘행정-세무’, ‘행정-전산’, ‘환경-화공’, ‘보건-식품위생’ 등이 있었음

<표 3-22> 통합 대상 직렬(중복응답)

구분	전체	단체종류		직위		
		광역	기초	인사 담당자	노조 임원	기타
① 행정-사회복지	99 (13.4%)	17 (22.4%)	82 (12.6%)	35 (17.6%)	18 (13.6%)	46 (11.9%)
② 보건-간호-보건진료-간호조무	221 (29.8%)	19 (25%)	201 (31.0%)	55 (27.6%)	46 (34.8%)	115 (29.6%)
③ 보건-간호	66 (8.9%)	5 (6.6%)	58 (8.9%)	13 (6.5%)	16 (12.1%)	34 (8.8%)
④ 보건-보건진료	135 (18.2%)	20 (26.3%)	110 (16.9%)	36 (18.1%)	20 (15.2%)	73 (18.8%)
⑤ 간호-보건진료-간호조무	152 (20.5%)	18 (23.7%)	132 (20.3%)	49 (24.6%)	23 (17.4%)	78 (20.1%)
⑥ 간호-보건진료	95 (12.8%)	13 (17.1%)	80 (12.3%)	27 (13.6%)	16 (12.1%)	50 (12.9%)
⑦ 간호-간호조무	231 (31.2%)	30 (39.5%)	195 (30.0%)	71 (35.7%)	34 (25.8%)	118 (30.4%)
⑧ 보건진료-간호조무	62 (8.4%)	5 (6.6%)	56 (8.6%)	12 (6.0%)	12 (9.1%)	37 (9.5%)
⑨ 식품위생-조리	189 (25.5%)	21 (27.6%)	166 (25.6%)	48 (24.1%)	33 (25%)	105 (27.1%)
⑩ 위생-시설관리	47 (6.3%)	9 (11.8%)	36 (5.5%)	19 (9.5%)	3 (2.3%)	21 (5.4%)
⑪ 방호-시설관리	243 (32.8%)	21 (27.6%)	218 (33.6%)	64 (32.2%)	40 (30.3%)	132 (34%)
⑫ 기타	36 (4.9%)	3 (3.9%)	31 (4.8%)	9 (4.5%)	8 (6.1%)	17 (4.4%)
⑬ 없음	45 (6.1%)	4 (5.3%)	40 (6.2%)	10 (5.0%)	16 (12.1%)	18 (4.6%)

<그림 3-9> 통합 대상 직렬(중복응답)



○ 직렬 통합 이유로 90%에 가까운 응답자가 ‘직무 유사성’을 들고 있으며 ‘인사운영의 효율성’은 9.1%로 나타나고 있음

- 기타 응답으로는 소수직렬인 경우에는 종합행정 수행기회가 결여됨으로 인해 승진시 중간관리자 역할 수행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의견과 보건직렬의 경우에는 오지를 제외하고는 행정수요가 감소하는 추세라는 의견이 있었음

<표 3-23> 직렬 통합 이유

구분	전체	단체종류		직위		
		광역	기초	인사 담당자	노조 임원	기타
① 직무 유사성	615 (88.5%)	61 (83.6%)	544 (89.1%)	168 (89.4%)	96 (82.1%)	336 (89.3%)
② 인사운영의 효율성	63 (9.1%)	10 (13.7%)	52 (8.5%)	16 (8.5%)	20 (17.1%)	27 (7.2%)
③ 통합요구 빈번	7 (1.0%)	0 (0%)	6 (1.0%)	2 (1.1%)	0 (0%)	4 (1.1%)
④ 기타	10 (1.4%)	2 (2.7%)	8 (1.3%)	2 (1.1%)	1 (0.9%)	7 (1.9%)
합계	695 (100%)	73 (100%)	610 (100%)	188 (100%)	117 (100%)	374 (100%)

- 통합 직렬이 없다고 선택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를 ‘직무 대체 불가능성’(37.3%), ‘인사 형평성 문제 발생’(35.8%), ‘직렬간 업무수행 능력 차이 현격’(22.4%) 하기 때문으로 보았음

<표 3-24> 통합 직렬 없음 선택 이유

구분	전체	단체종류		직위		
		광역	기초	인사 담당자	노조 임원	기타
① 직무 대체 불가능성	25 (37.3%)	2 (40%)	22 (36.1%)	6 (35.3%)	9 (45%)	9 (31%)
② 인사 형평성 문제 발생	24 (35.8%)	2 (40%)	22 (36.1%)	5 (29.4%)	4 (20%)	15 (51.7%)
③ 직렬간 업무수행 능력 차이 현격	15 (22.4%)	0 (0%)	15 (24.6%)	5 (29.4%)	6 (30%)	4 (13.8%)
④ 기타	3 (4.5%)	1 (20%)	2 (3.3%)	1 (5.9%)	1 (5%)	1 (3.4%)

- 직렬내 직류 통합과 재분류에 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서의 응답 결과는 ‘없다’는 의견이 39.9%로 가장 많았고, 행정, 공업, 시설, 해양수산의 순으로 응답하였음
- 행정 직렬 내 직류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23.8%가 동의하였고, 공업 직렬의 직류를 통합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17.0%의 응답자가 동의하였으며, 해양수산 직렬의 직류를 통합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13.4%가 찬성하였고, 시설 직렬 내 직류 통합안에 대한 찬성 의견은 15.0%로 나타났음
 - 기타 의견으로는 ‘방송통신(통신기술-전자통신기술)’, ‘해양수산(일반해양-일반수산)’, ‘시설(도시계획-토목)’ 등을 제시하고 있었음
 - 행정직렬을 ‘일반행정(법무, 노동, 문화홍보, 감사 등) - 기업행정(재경, 국제통상, 기업행정 등)’로 재분류하는 안에 대해서는 32.7%가 동의하였고, 공업직렬을 ‘기계(농업기계, 기계운전, 조선 등) - 전기(전자 등) - 화공(금속, 섬유, 가스, 자원 등)’으로 재분류하자는 안에 대해서는 22.9%가 동의하였음
 - 해양수산직렬을 ‘해양 - 수산(수산제조, 수산증식 등) - 선박(선박항해, 선박기관 등)’으로 재분류하자는 안에 대해서는 19.7%가, 시설직렬을 ‘도시계획 - 토목(농업토목, 수도토목 등) - 건축 - 지적(축지 등) - 교통(교통시설, 교통설계 등)’으로 재분류하자는 안에 대해서는 22.7%가 동의하였음
 - 이와 같은 응답은 집단별-단체종류, 직위-로 큰 차이가 없었음

<표 3-25> 통합 대상 직류가 포함된 직렬(중복응답)

구분	전체	단체종류		직위		
		광역	기초	인사 담당자	노조 임원	기타
① 행정	176 (23.8%)	20 (26.3%)	153 (23.6%)	55 (27.6%)	31 (23.5%)	87 (22.4%)
② 공업	126 (17.0%)	13 (17.1%)	110 (16.9%)	40 (20.1%)	19 (14.4%)	63 (16.2%)
③ 해양수산	99 (13.4%)	13 (17.1%)	83 (12.8%)	35 (17.6%)	11 (8.3%)	49 (12.6%)
④ 시설	111 (15.0%)	16 (21.1%)	92 (14.2%)	35 (17.6%)	18 (13.6%)	54 (13.9%)
⑤ 기타	21 (2.8%)	3 (3.9%)	18 (2.8%)	6 (3.0%)	3 (2.3%)	12 (3.1%)
⑥ 없음	296 (39.9%)	27 (35.5%)	265 (40.8%)	66 (33.2%)	59 (44.7%)	164 (42.3%)

<표 3-26> 직렬 내 직류 재분류(중복응답)

구분	전체	단체종류		직위		
		광역	기초	인사 담당자	노조 임원	기타
① 행정 : 일반행정(법무, 노동, 문화홍보, 감사 등) - 기업행정(재경, 국제통상, 기업행정 등)	177 (32.7%)	21 (30.1%)	152 (33.3%)	48 (29.8%)	34 (37.4%)	92 (33.5%)
② 공업 : 기계(농업기계, 기계운전, 조선 등) - 전기(전자 등) - 화공(금속, 섬유, 가스, 자원 등)	124 (22.9%)	15 (21.1%)	106 (23.2%)	38 (23.6%)	21 (23.1%)	63 (22.9%)
③ 해양수산 : 해양 - 수산(수산제조, 수산증식 등) - 선박(선박항해, 선박기관 등)	107 (19.7%)	16 (22.5%)	87 (19.0%)	32 (19.9%)	15 (16.5%)	55 (20%)
④ 시설 : 도시계획 - 토목(농업토목, 수도 토목 등) - 건축 - 지적(측지 등) - 교통(교통시설, 교통설계 등)	123 (22.7%)	17 (23.9%)	103 (22.5%)	37 (23.1%)	20 (22.1%)	61 (22.2%)
⑤ 기타	11 (2.0%)	2 (2.8%)	9 (2.0%)	6 (3.7%)	1 (1.1%)	4 (1.5%)
합계	542 (100%)	71 (100%)	457 (100%)	161 (100%)	91 (100%)	275 (100%)

(3) 직렬 세분화

- 직렬내 직렬 세분화안을 묻는 질문에서 ‘없음’으로 응답한 의견이 47.6%로 가장 많았고, 의료기술직렬, 사회복지직렬, 세무직렬, 전산직렬 순으로 세분화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전산직렬 내 ‘전산개발 직류, 정보보호 직류 등 신설’안에 대해서는 5.7%가 동의하였고, 사회복지직렬 내 ‘아동직류, 노인직류, 상담직류 등 신설’안에 대해서는 14.3%가 동의하였으며, 의료기술직렬 내 ‘방사선직류, 임상병리직류, 물리치료직류, 치과위생사직류 등 신설’안에 대해서는 21.7%가 동의하였음
 - 집단별 응답 결과는 큰 차이가 없으나 노조임원인 경우에는 의료기술직렬보다 사회복지직렬에 대한 세분화안에 찬성하는 비율이 더 높았음

<표 3-27> 세분화 대상 직렬(중복응답)

구분	전체	단체종류		직위		
		광역	기초	인사 담당자	노조 임원	기타
① 전산직렬 (전산개발 직류, 정보보호 직류 등 신설)	42 (5.7%)	1 (1.3%)	40 (6.2%)	4 (2.0%)	8 (6.1%)	28 (7.2%)
② 사회복지직렬 (아동직류, 노인직류, 상담직류 등 신설)	106 (14.3%)	8 (10.5%)	98 (15.1%)	18 (9.0%)	31 (23.5%)	57 (14.7%)
③ 의료기술직렬 (방사선직류, 임상병리직류, 물리치료직류, 치과위생사직류 등 신설)	161 (21.7%)	18 (23.7%)	140 (21.6%)	62 (31.2%)	21 (15.9%)	76 (19.6%)
④ 세무직렬 (지방세직류, 회계직류 등 신설)	48 (6.5%)	4 (5.3%)	42 (6.5%)	8 (4.0%)	13 (9.8%)	25 (6.4%)
⑤ 기타	14 (1.9%)	2 (2.6%)	12 (1.8%)	5 (2.5%)	2 (1.5%)	7 (1.8%)
⑥ 없음	353 (47.6%)	42 (55.3%)	304 (46.8%)	97 (48.7%)	57 (43.2%)	188 (48.5%)

- 직렬 세분화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는 ‘직무 다양성으로 전문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84.3%를 차지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고, ‘행정수요 증가 예상’이 12.1%, ‘공무원 수가 많아 직렬별 인사관리 필요’하다는 응답은 3.3%로 나타나고 있음
 - 이와 같은 응답은 집단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았음

<표 3-28> 직렬 세분화 이유

구분	전체	단체종류		직위		
		광역	기초	인사 담당자	노조 임원	기타
① 직무 다양성으로 전문화 필요	279 (84.3%)	26 (81.3%)	249 (84.4%)	73 (88.0%)	55 (84.6%)	147 (82.1%)
② 공무원 수가 많아 직렬별 인사관리 필요	11 (3.3%)	2 (6.3%)	9 (3.1%)	3 (3.6%)	2 (3.1%)	6 (3.4%)
③ 행정수요 증가 예상	40 (12.1%)	3 (9.4%)	37 (12.5%)	7 (12.3%)	8 (12.3%)	25 (14.0%)
④ 기타	1 (0.3%)	1 (3.1%)	0 (0%)	0 (0%)	0 (0%)	1 (0.6%)

(4) 직렬 신설

- 신설 직렬과 신설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음
 - 행정직군에서는 감사직렬, 법무직렬, 관광직렬, 통번역(외국어)직렬 등을 제안하였음
 - 기술직군에서는 환경직렬에 생태보호직류, 문화재 관리 등을 제안하였음
 - 이들 신설 이유는 대부분 행정수요가 예상되며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 이라고 응답하였음

<표 3-29> 신설 직렬과 신설 이유

신설직렬		신설 이유
행정직군	감사직렬(22)	업무의 전문화 필요, 감사의 독립성과 안전성, 신분 보장으로 감사 감찰 신속 정확한 활동 보장, 업무의 연속성 및 독립적인 기구 필요
	법무직렬(4)	전문성 요구,
	관광직렬(4)	관광에 대한 기본 마인드 및 외국어 구사 능력 등 전문성 육성에 장기간 소요, 관광산업은 중앙 지방을 불문한 미래 중점 사업, 관광자원 관리, 발굴, 보전 등 전문인력 필요
	통번역(외국어)직렬(1)	해외 자매 도시 교류 및 판촉행사, 외자유치 등의 업무가 증가하면서 외국어 전문인력의 필요성인 높아짐
	비서직렬(1)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별도 직렬이 필요
	평생교육직렬(2)	평생학습시대 도래에 따른 전문 인력 필요
	정책기획(개발)직렬(2)	부서간 정책 연계성 필요, 난개발 중복투자 재정부담가중 방지
	인사직렬(4)	인사업무 전문화, 최근 정부 동향, 인사혁신처 기초
	회계직렬(8)	계약 등 전문지식 요구
	사회복지 노인직류(1)	행정수요 증가 예상
	아동청소년직렬(2)	아동보호, 청소년 취업진로상담 제도적 지원 필요
	국제통상직렬(2)	외국어전문 해외교류 국제 업무
	상담(민원)직렬(2)	주민들의 기대심리 상향에 따른 민원해결
	전산직렬 정보보호직류(5)	해킹을 대비한 보안의 중요성 증가
	재경직렬 신설(1)	재경-세무직류를 재경직렬로 전환해 세무 회계 예산 직류로 구분
홍보직렬(1)	전문홍보전문가의 정책수립필요	
기술직군	환경직렬 생태보호직류(2)	일반환경직과 다른 전문성이 요구됨
	문화재관리(1)	문화재관리의 전문성이 요구됨
	도시계획직렬(1)	관리계획 등 전문지식 필요
	교통직렬(1)	지속가능한도시형성을 위해 도시지역에서는 대중교통중심 도시구조화 형태로 변화되고 있고 공간구조 또한 변화되고 있으므로 자빙자치단체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교통전문직 신설
	전기직렬(1)	전기는 공업직에 포함될 것이 아니고 특수성을 감안해 별도 직렬

주: ()은 제안자 수

(5) 직렬 명칭 변경

- 현행 직렬 중에서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음
 - 위생직렬, 시설직렬, 시설관리직렬에 대해서는 업무 특성이 불명확하거나 업무 특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유를 제시하였음
 - 폐기물직류나 전산직렬에 대해서는 용어의 어감이 부정적이거나 구시대적이어서 ‘재생관리’ 또는 ‘정보화’라는 명칭으로 변경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세무직렬에 대해서는 재경직렬로의 변경을 제안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업무의 확대과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음

<표 3-30> 명칭 변경 직렬과 변경 이유

명칭변경 직렬	이유
세무직렬	세무직렬 대신 재경직렬로의 변경으로 인력 운용의 폭을 넓힐 수 있음
위생직렬	직무의 특성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보건, 식품위생과도 구별구분이 모호함
시설직렬	분야별 업무 특수성에 따라 명칭 변경 필요
시설관리직렬	직무 특성 불명확
폐기물직류	폐기물을 매립 소각 등 처리 개념에서 재활용, 재생관리로 변화됨에 따라 변경이 필요
전산직렬	전산이라는 용어는 구시대적 단어, 정보화 직렬로 표현해야

3. 소결

- 면담조사, 설문조사 내용을 근거로 개편 대상 직렬을 추출함
 - 면담조사는 도시 및 농촌 유형별 광역/기초 지자체를 방문하여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이들이 제안한 내용을 개편 대상 직렬에 포함

-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경우에는 다수의 지지를 받은 경우(예, 복수응답에서 20%이상 지지)에 한정함
- 폐지 대상 직렬로 위생, 조리, 교육행정, 항공, 야금직류를 추출함
 - 설문조사에서는 간호조무를 폐지 대상으로 선택한 응답자의 비율이 26.5%에 달했으나, 이는 다른 문항과 비교 분석하면 유사 직렬과 통폐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폐지 대상 직렬에서는 제외함
- 통합 대상 직렬로 행정직군에서는 (행정직렬+사회복지직렬), 기술직군에서는 (식품위생+조리), (간호+간호조무/ 간호+간호조무+보건진료 / 간호+간호조무+보건+보건진료), (위생+시설관리), 기타 (방호+시설관리)를 추출함
- 직렬 내 직류 재분류 필요가 있는 직렬로서 행정, 해양수산 직렬을 추출함
 - 행정직렬의 경우, 일반행정(법무+노동+문화+홍보+감사 등), 기업행정(재경, 국제통상, 기업행정 등)으로 재분류
 - 해양수산직렬의 경우, 수산(수산제조직류+수산증식직류+수산물검사직류 등)/ 선박(일반선박직류+선박항해직류+선박기관직류 등)으로 재분류
 - 공업직렬의 경우, 기계(농업기계, 기계운전, 조상 등)/ 전기(전자 등)/ 화학(금속, 섬유, 가스, 자원 등)으로 재분류
- 세분될 필요가 있는 직렬로 의료기술직렬과 세무직렬을 추출함
 - 의료기술직렬은 직렬 내 다양한 업무 공존하여 각각의 업무에 걸맞는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세분될 필요가 있음
- 신설 직렬로 면담조사에서 제시한 안과 설문조사에서 5명 이상이 제시한 안을 추출함
 - 문화재관리직렬, 감사직렬, 의회직렬을 제안함

<표 3-31> 실태조사를 근거로 한 개편 대상 직렬의 추출

구분	실태조사분석	
	대상직렬	필요성
폐지	위생, 조리, 속기 아급직류	-행정수요 감소 -민간위탁이 더 효율적
	교육행정, 항공	-지방행정과 무관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렬 간 통합 (간호직렬+간호조무직렬), (식품위생+조리), (위생+시설관리), (방호+시설관리), (행정직렬+사회복지직렬), 	-직무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행정수요 감소 등을 고려한 통합의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렬 내 직류 통합 행정: 일반행정(법무+노동+문화+홍보+감사 등), 기업행정(재경, 국제통상, 기업행정 등) 해양수산: 수산(수산제조직류+수산증식직류+수산물검사직류 등)/ 선박(일반선박직류+선박항해직류+선박기관직류 등) 공업: 기계(농업기계, 기계운전, 조상 등)/ 전기(전자 등)/ 화공(금속, 섬유, 가스, 자원 등) 	
세분	의료기술(방사선직류, 임상병리직류, 물리치료직류, 치과위생사직류)	-직렬 내 다양한 업무 공존
	세무직렬(회계직류신설)	-전문성 요구
	전산직렬(정보보안직류신설)	-전문성 요구
신설	감사직렬	-전문성 요구
	문화재관리직렬	-전문성 요구

제4절 개편 대상 직렬의 추출

- 통계자료분석, BRM 자료 분석 등 문헌자료분석(객관적 자료 분석)에서 제시한 개편 대상 직렬들과 면담조사분석, 설문조사분석 등 실태조사자료 분석(주관적 자료 분석)에서 제시한 개편 대상 직렬들을 모두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표 3-32> 개편 대상 직렬의 추출

구분	문헌자료분석		실태조사분석	
	대상직렬	개편이유	대상직렬	개편이유
폐지	교육행정, 항공, 조리	-10명 이하 극소 수직렬	숙기, 위생, 조리 교육행정, 항공	-행정수요 감소 -민간위탁이 효율적 -지방행정과 무관
통합	숙기, 식품위생, 간호조무, 의무, 약무, 운전	-500명 이하 소수 직렬 또는 최근 급격한 인원감소 직렬 중에서 유사 업무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핵심기능이 아닌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렬 간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호직렬+간호조무 직렬), -(식품위생+조리), -(위생+시설관리), -(방호+시설관리), -(행정직렬+사회복지 직렬), 직렬 내 직류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 : 일반행정(법무+노동+문화+홍보+감사 등), 기업행정(재경, 국제 통상, 기업행정 등) -해양수산 : 수산(수산제조직류+수산증식직류+수산물 검사직류 등) 선박(일반선박직류+선박항해 직류+선박기관직류 등) -공업 : 기계(농업기계, 기계 	-직무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행정수요 감소 등을 고려한 통합의 필요

<표 3-32> 개편 대상 직렬의 추출(표계속)

구분	문헌자료분석		실태조사분석	
	대상직렬	개편이유	대상직렬	개편이유
			운전, 조상 등/ 전기(전자 등)/ 화공(금속, 섬유, 가스, 자원 등)	
세분	세무, 사회복지, 사서	-5000명 이상 대 직렬 또는 최근 급격한 인원증가 직렬 중에서 단일 직류 직렬인 경우	의료기술직(방사선직류, 임상병리직류, 물리치료직류, 치과위생사직류 신설)	-직렬 내 다양한 업무 공존
			세무직렬(회계직류신설)	-전문성 요구
			전산직렬(정보보호직류신설)	-전문성 요구
신설	문화재관리 직렬	-지자체의 주요 기능이면서 행정직렬 외 담당 직렬이 존재하지 않음 -문화관련업무 중 전문성이 요구됨	감사직렬	-전문성 요구
			문화재관리직렬	-전문성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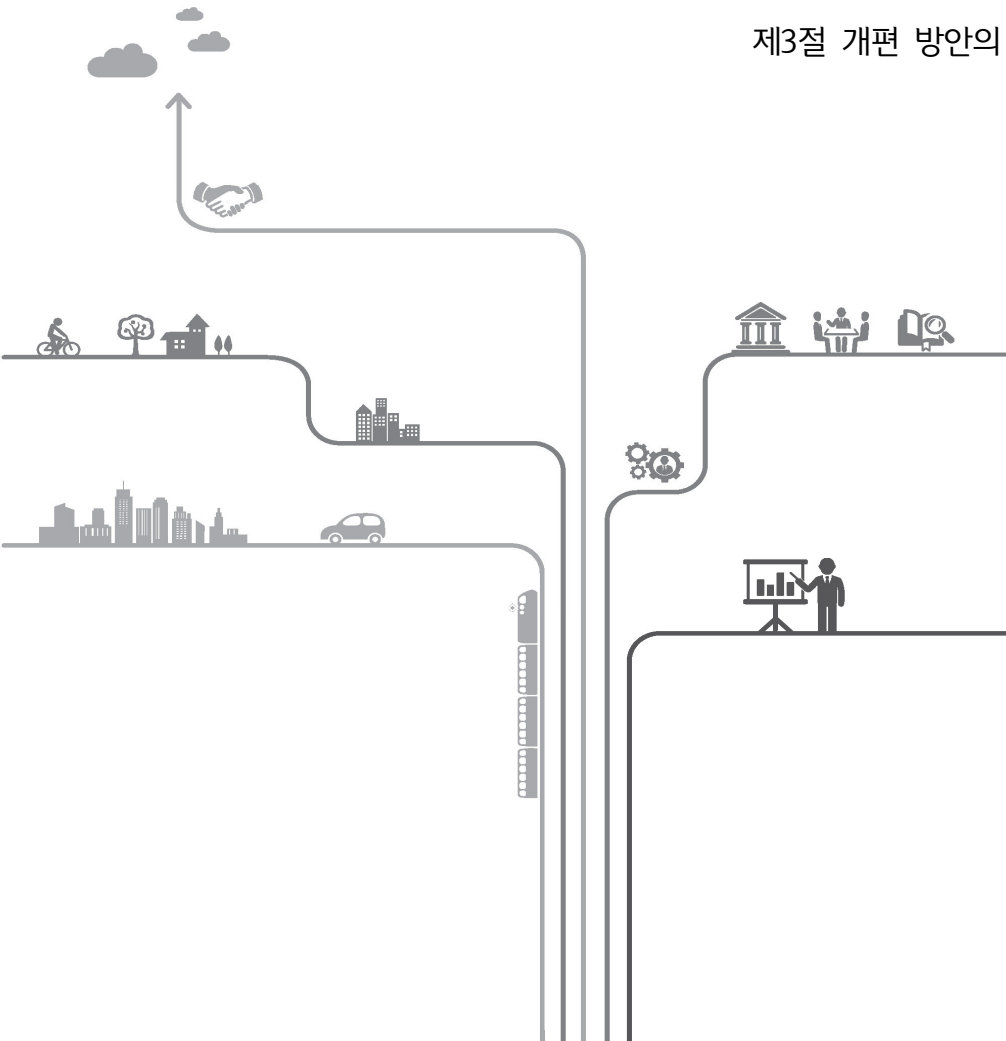
제4장

지방공무원 직렬체계 개선방안 도출

제1절 개요

제2절 직렬 개편 방안의 도출

제3절 개편 방안의 타당성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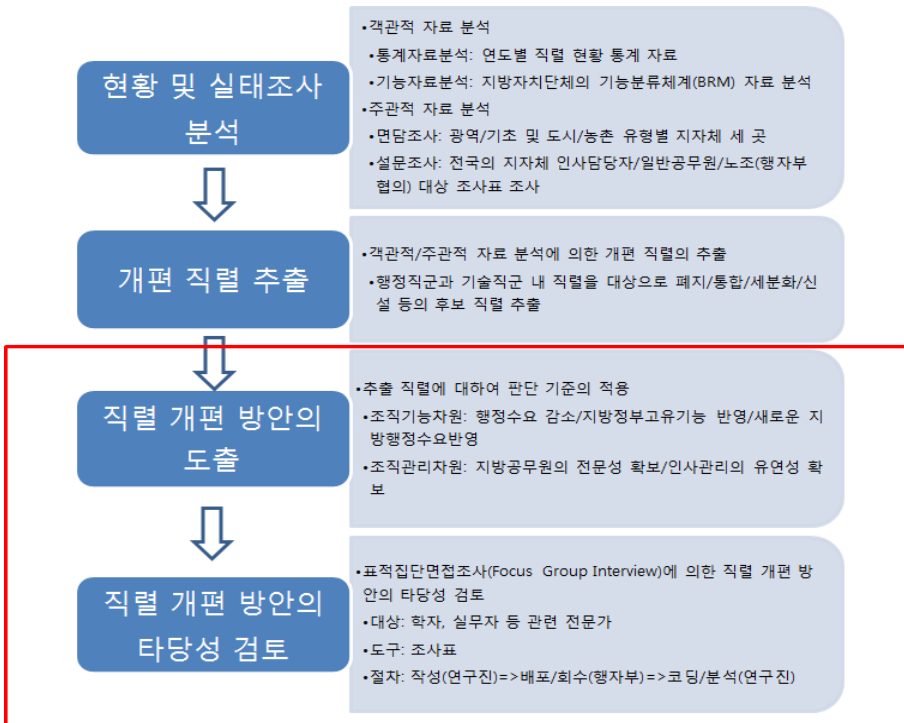
제4장

지방공무원 직렬체계 개선방안 도출

제1절 개요

- 앞 장에서 객관적·주관적 자료 등을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본 장에서는 판단 기준을 적용하여 직렬 개편 방안을 도출하고, 이에 대해 표적집단면접조사(FGI)를 통하여 개편 방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함(아래 분석모형에서 하위 두 단계에 해당)

<그림 4-1> 직렬 조정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분석 모형



제2절 직렬 개편 방안의 도출

1. 판단기준의 적용

- 이상에서 도출된 직렬을 대상으로 제2장에서 도출한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일반직종 내 행정직군과 기술직군을 대상으로 하는 직렬 개편 방안을 다음과 같이 도출함

<표 4-1> 직렬 개편안 검토

직렬	추출개편안 ¹⁾	검토내용	검토 결과	
행정 직군	행정 직렬내 직류통합	-일반행정 업무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직류가 세분화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직류가 적으므로 직류통합을 통해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일반 행정(법무, 노동, 문화홍보, 통계)-기업행정(재경, 국제통상, 기업행정) -감사직류는 직렬로 신설 검토(이후) -운수직류는 지자체의 주요 기능이라기 보다는관리 업무로서 운전직렬과 유사 업무를 담당하므로 운전직렬 또는 시설관리직렬과 통합	직류 통합	
	세무	회계직류 신설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 강화 요구에 부응	직류 신설
	사회 복지	직류 세분화 (아동청소년, 여성가족, 사회복지일반)	-지자체의 다양한 사회복지업무를 반영하여 직류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직류 세분화
		행정직렬과 통합		
	교육 행정	폐지	-일반 지자체가 아닌 교육청의 업무를 담당하며 수요가 많고, 전문성이 요구됨	개편 제외
전산	명칭 변경 정보보호직류신설	-전산 직렬은 전문성이 높은 정보화 업무 담당하므로 전문성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 필요(예, 지식정보관리직렬) -정보보호에 대한 수요가 크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무이므로 직류 신설	명칭변경 직류신설	

<표 4-1> 직렬 개편안 검토(표계속)

직렬	추출개편안 ¹⁾	검토내용	검토 결과	
	사서	세분	-행정수요는 많으나 업무가 세분화될만큼 다양성이 크지 않으므로 개편 제외	개편제외
	속기	폐지	-지자체의 주요기능라기 보기 어려운 단순 업무로서 행정수요가 크지 않으므로 정보관리 차원에서 유사업무라 볼 수 있는 전산직과 통합하여 직렬(지식정보관리직렬) 내 직류로 신설	통합
	방호	시설관리와 통폐합	-방호 업무는 행정직군에 분류되기에 적합하지 않으며 주된 업무가 청사관리로 시설관리직렬의 업무와 유사하므로 시설관리직렬내 직류로 통폐합	통합
기술 직군	위생	시설관리와 통폐합	-위생 직렬이 담당하는 주된 업무는 청사관리 업무로 지자체의 주요 기능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관리상의 수요가 있으므로 유사 직렬인 시설관리 내 직류로 통폐합	통합
	조리	폐지	-소수직렬로서 담당 업무가 지자체의 주요 기능이라고 볼 수 없으며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업무분야이므로 폐지	폐지
	공업	직렬내 통폐합	-더 이상 행정 수요가 없는 직류들을 폐지하고 유사 직류들을 통폐합 -야금직류 폐지, -기계(농업기계, 기계운전, 조선)-전자(일반전기, 전자)-화공(원자력, 금속, 섬유, 가스, 자원)	직류 통합
	항공	폐지	-지방공무원 항공직렬이 운용되는 조직이 거의 없음. 즉 행정수요가 거의 없음	폐지
	해양수산	직렬내 직류 통합	-직렬 내 유사 직류 간 통폐합 필요 -일반해양-수산(일반수산, 수산제조, 수산증식, 어로, 수산물검사)-선박(선박항해, 일반선박)	직류 통합
	보건	보건진료, 간호와 통합	-보건직렬의 직무는 보건행정 및 공중위생으로서 지자체의 주요 기능에 해당 -보건진료와 유사 명칭이나 직무내용상의 차이가 있으므로 개편 제외	개편제외
	보건진료	보건진료, 간호와 통합	-보건진료 직렬은 근무장소(보건진료원)의 차이점만 있을 뿐 직무 내용 및 전문성의 수준이 간호직렬과 유사하므로 ²⁾ 간호직렬과 통합 -다만 일반 보건소에서 간호직렬의 업무보다는 보건진료소에서 특수 업무가 요구되므로 직렬내 직류로 신설	통합

<표 4-1> 직렬 개편안 검토(표계속)

직렬	추출개편안 ¹⁾	검토내용	검토결과	
의료 기술	직류 세분화 (물리치료, 방사선, 임상병리, 치과위생)	-보건소 내에 다양한 과 설치 경향 등 다양한 전문 업무 분야를 반영한 직류 설치	세분화	
간호 조무	간호직렬 내 직류로 통폐합	-간호조무 직렬이 담당하는 업무는 간호직렬과 업무의 유사성은 높으나 난이도상 차이가 있으므로 간호직렬 내 직류로 통폐합	통합	
의무	통합	행정수요가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지자체의 주요 기능에 해당하므로 개편제외	개편제외	
약무	통합	행정수요가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지자체의 주요 기능에 해당하므로 개편제외	개편제외	
운전	시설관리와 통폐합 (시설관리 내 운전직류)	-운전 직렬의 업무는 지자체의 주요 기능이 아니나 관리 차원의 수요가 있으므로 시설관리내 직류로 통폐합	통합	
신설 직렬	문화재 관리	신설	-문화재 보수 관리의 중요성에 따른 지자체 공무원의 문화재 관리감독 전문성 요구	신설
	감사	직류를 직렬로 개편	-지자체 감사 업무는 내외부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문성이 요구됨	신설

주: 1) 추출 개편안은 앞에서 문헌자료분석과 실태조사분석에서 추출한 개편안을 의미함; 2)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서 '기타법령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요건'을 보면 보건진료직렬과 간호직렬의 자격증은 동일하게 조산사와 간호사임

2. 개편 방안별 정리

○ 위의 내용을 개편방안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4-2> 직렬 개편 방안

개편방안	해당직렬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리직렬 • 항공직렬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호직렬+간호조무직렬+보건진료직렬 • 위생+시설관리 • 방호+시설관리 • 운전+시설관리 • 운수(직류)+시설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직렬: 일반 행정(법무, 노동, 문화홍보, 통계)-기업행정(재경, 국제통상, 기업행정) • 공업직렬: 기계(농업기계, 기계운전, 조선)-전자(일반전기, 전자)-화학(원자력, 금속, 섬유, 가스, 자원) • 해양수산직렬: 일반해양-수산(일반수산, 수산제조, 수산증식, 어로, 수산물검사)-선박(선박항해, 일반선박)
세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직렬(회계직류 신설), • 의료기술직렬(방사선직류, 임상병리직류, 물리치료직류 신설) • 사회복지직렬(아동청소년, 여성가족, 사회복지일반) • 전산직렬 내 정보보호직류, 속기직류 신설 • 간호직렬 내 간호조무직류, 보건진료직류 신설 • 시설관리 직렬 내 운전직류, 위생직류 신설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직렬, • 문화재관리직렬
명칭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산직렬 --> 지식정보관리직렬

제3절 | 개편 방안의 타당성 검토

1. 개요

- 이상에서 도출한 직렬 개편 방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표적 집단 면접(Focus Group Interview)을 실시함
 - 학자, 실무자 등 관련 전문가(7명)를 대상으로 각 개편 방안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음
 - 각 개편 방안 도출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조사표와 함께 보고서를 제시하였음

<표 4-3> 표적집단면접(FGI) 조사의 개요

구분	내용
대상	학자, 실무자 등 관련 전문가
도구	조사표
절차	작성(연구진)⇒배포/회수(연구진)⇒코딩/분석(연구진)
내용	개편 방안의 타당성 검토

2. 개편 방안의 타당성 검토

- 직렬 개편 방안에 대하여 각 전문가들이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가장 논란이 많은 방안은 ‘문화재관리직렬 신설’로 7명 중 3명이 비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그 이유로는 업무의 내용이 협소하고 관리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보고 있었음
 - ‘위생과 시설관리 직렬 통합’, ‘행정직렬 내 직류 통합’, ‘사회복지직렬 세분화’ 방안에 대해서는 7명 중 2명이 비타당하다고 보고 있었음
 - 위생과 시설관리 직렬 통합 방안에 대해서는 위생은 조리실 위생관리

업무로 시설관리와 업무가 다르다고 보았음

- 행정직렬 내 직류 통합 방안에 대해서는 각각의 직류에 해당하는 전문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았음
- 사회복지 직렬 세분화 방안에 대해서는 업무 구분의 실익이 없으며 각각의 업무가 연계된다고 보았음
- ‘공업직렬 내 직류 통합’, ‘해양수산직렬 내 직류 통합’, ‘세무직렬 내 회계직렬 신설’, ‘의료기술직렬 내 직류 세분화’ 방안에 대해서는 6명 중 한 명만이 비타당하다고 보았음
- 공업직렬 내 직류 통합, 해양수산직렬 내 직류 통합 방안에 대해서는 행정수요가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보았음
- 의료기술직렬 내 직류 세분화 방안에 대해서는 동일 직렬 내에서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보았음
- ‘조리직렬 폐지’, ‘간호직렬과 간호조무직렬 통합’, ‘방호직렬과 시설관리직렬 통합’, ‘감사직렬 신설’에 대해서는 모두 타당하다고 보았음

<표 4-4> 표적집단면접(FGI) 조사의 결과

개편 방안	해당직렬	타당성 여부	A	B	C	D	E	F	G
폐지	조리직렬	타당	○	○	○	○	○	○	○
		비타당							
통합	간호직렬+간호조무직렬	타당	○	○	○	○	○	○	○
		비타당							
	위생+시설관리	타당	○	○		○		○	○
		비타당			○ ⁴⁾		○		
	방호+시설관리	타당	○	○	○	○	○	○	○
		비타당							
	행정직렬: 일반행정(법무, 노동, 문화홍보, 통계)-기업행정(재경, 국제통상, 기업행정)	타당	○		○	○	○		○
		비타당		○ ¹⁾				○ ⁶⁾	

<표 4-4> 표적집단면접(FGI) 조사의 결과(표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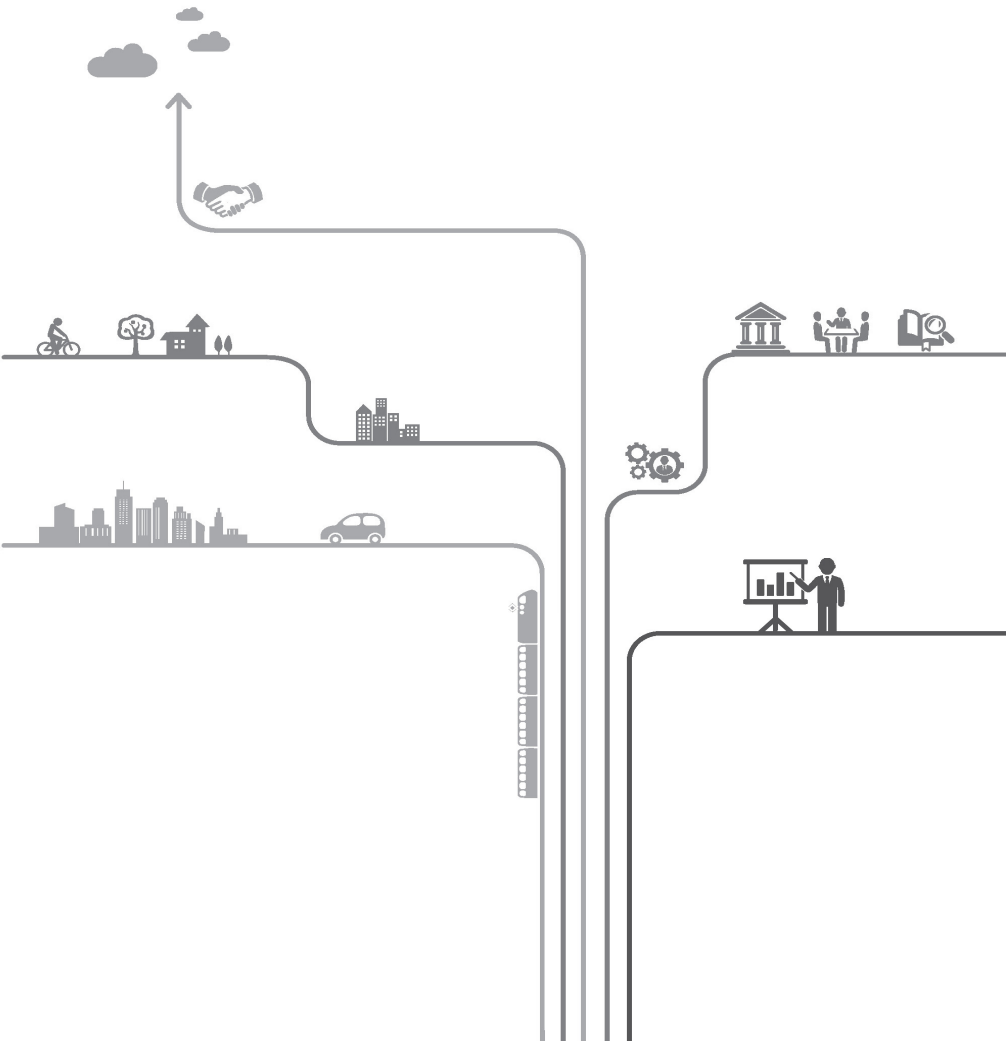
개편 방안	해당직렬	타당성 여부	A	B	C	D	E	F	G
	공업직렬: 기계 (농업기계, 기계운전, 조선)-전자(일반전기, 전자)-화학(원자력, 금속, 섬유, 가스, 자원)	타당	○	○	○	○	○		○
		비타당						○ ⁷⁾	
	해양수산직렬: 일반해양-수산 (일반수산, 수산제조, 수산증식, 어로, 수산물검사)-선박 (선박항해, 일반선박)	타당	○	○	○	○	○		○
		비타당						○ ⁸⁾	
세분	세무직렬 (회계직류 신설)	타당	○	○	○	○		○	○
		비타당					○		
	의료기술직렬 (방사선직류, 임상병리직류, 물리치료직류 신설)	타당	○	○	○	○	○		○
		비타당						○ ⁹⁾	
	사회복지직렬 (아동청소년, 여성가족, 사회복지일반)	타당	○			○	○	○	○
		비타당		○ ²⁾	○ ⁵⁾				
신설	감사직렬	타당	○	○	○	○	○	○	○
		비타당							
	문화재관리직렬	타당	○		○	○			○
		비타당		○ ³⁾			○	○ ¹⁰⁾	

- 주: 1) 법무, 노동, 통계, 문화홍보의 경우 각각 전문성이 요구됨
 2) 영역 구분의 실익이 없음
 3) 직렬로 신설하여 직류를 세분화할만큼 업무의 광범위하다고 보기 어려움
 4) '위생'은 조리, 조리실 위생관리, 조리실 청소 등의 업무로 시설관리와는 상이
 5) 인력활용의 효율성 저하. 사회복지지는 생애적 차원에서 관리되어지는 만큼, 대상에 대한 연계적 이해 중요
 6) 기능의 전문성, 행정수요의 증가 등을 고려
 7) 기능의 전문성, 행정수요의 증가 등을 고려
 8) 기능의 전문성, 행정수요의 증가 등을 고려
 9) 동일 직렬내에서 업무수행 가능
 10) 행정관리적인 측면이 강함

- 가장 논란이 되는 문화재관리직렬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행정직렬 내 직류 신설을 제안하고자 함
 - 문화재관리업무는 지자체의 주요 업무이면서 전문성이 요구되나 현재 학예연구직 또는 행정직렬의 공무원이 담당하여 전문성 결여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전문성이 요구됨
 - 또한 문화재보존정책은 거의 모든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는 기능으로서 박물관 운영 및 전통사찰관리 등의 업무를 포함하므로 업무의 범위가 협소하지 않음

제5장 결론

제1절 요약
제2절 연구의 한계



제5장

결론

제1절 요약

1.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최근의 행정환경 변화와 지역 특성에 맞는 직렬체계 개편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임
 - 현행 지방공무원 직렬체계는 국가공무원과 사실상 동일한 직렬로 구성되어 지방정부 고유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부적합함
 - 또한 현재의 직렬체계는 일관적인 기준으로 분류되지 않아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음
 - 전문성 등 직무 특성에 있어 기타 직렬과 명확한 차이를 보이는 직렬의 경우에도 동일한 계급체계를 적용하는 등 경직적 운영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공무원 직렬별 직무 수행의 현황조사 및 인터뷰 등 결과를 반영하고, 외국 지방공무원 공직분류체계 및 주요 민간 기업 직위분류체계를 검토하여 자치역량의 제고와 원활한 지방자치사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직렬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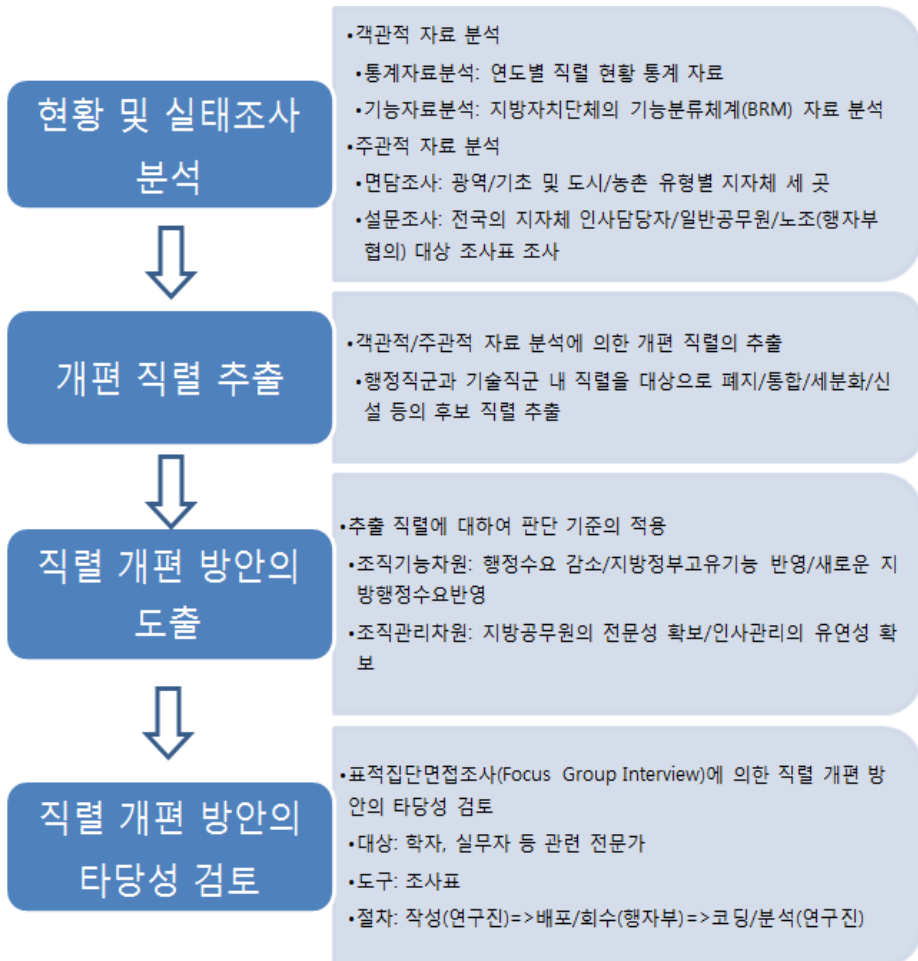
2. 연구 방법

- 본 연구에서서 직렬 개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음
 - 이론적 검토를 통해 개편 방안에 대한 판단기준을 도출(제2장)
 - 직렬 운영 현황에 관한 통계자료 등 문헌 자료 분석, 면담조사와 설문조

사 분석에 근거하여 개편의 대상이 되는 직렬 추출(제3장)

- 추출한 직렬들을 대상으로 제2장에서 도출한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직렬 개편 방안을 도출하고 도출된 개편 방안에 대한 타당성을 표적 집단 면접(Focus Group interview)을 실시하여 검토한 후 최종 개편 방안 확정(제4장)

<그림 5-1> 직렬 개편 방안 도출을 위한 분석 모형



3. 연구 결과

○ 본 연구 결과 제시하는 직렬 개편 방안은 다음과 같음

<표 5-1> 직렬 개편 방안

직렬	개편 근거	개편방안
행정직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행정 업무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직류가 세분화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직류가 적으므로 직류 통폐합을 통해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일반 행정(법무, 노동, 문화홍보, 통계)-기업행정(재경, 국제통상, 기업행정) 	직류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수직류는 지자체의 주요 기능이라기 보다는관리 업무로서 운전직렬과 유사 업무를 담당하므로 운전직렬 또는 시설관리직렬과 통합 	직류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 보수 관리의 중요성에 따른 지자체 공무원의 문화재 관리감독 전문성 요구 -문화재 관리 직류 신설 	직류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 강화 요구에 부응 -회계직류 신설 	직류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의 다양한 사회복지업무를 반영하여 직류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사회복지직렬(아동청소년, 여성가족, 사회복지일반) 	직류 세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산 직렬은 전문성이 높은 정보화 업무 담당하므로 전문성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 필요(예, 지식정보관리직렬) -정보보호에 대한 수요가 크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무이므로 직류 신설 	명칭변경 직류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의 주요 기능이라고 보기 어려운 단순 업무로서 행정수요가 크지 않으므로 정보관리 차원에서 유사업무라 볼 수 있는 직렬과 통합 -전산직과 통합하여 직렬(지식정보관리직렬) 내 직류로 신설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호 업무는 행정직군에 분류되기에 적합하지 않으며 주된 업무가 청사관리로 시설관리직렬의 업무와 유사함 -시설관리직렬내 직류로 통폐합 	통합

<표 5-1> 직렬 개편 방안(표계속)

직렬		개편 근거	개편방안
기술직군	위생	-위생 직렬이 담당하는 주된 업무는 청사관리 업무로 지자체의 주요 기능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관리상의 수요가 있으므로 유사 직렬인 시설관리 내 직류로 통폐합	통합
	조리	-소수직렬로서 담당 업무가 지자체의 주요 기능이라고 볼 수 없으며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업무분야이므로 폐지	폐지
	공업	-더 이상 행정 수요가 없는 직류들을 폐지하고 유사 직류들을 통폐합 -야금직류 폐지, -기계(농업기계, 기계운전, 조선)-전자(일반전기, 전자)-화공(원자력, 금속, 섬유, 가스, 자원)	직류 통합
	항공	-지방공무원 항공직렬이 운용되는 조직이 거의 없음. 즉 행정수요가 거의 없음	폐지
	해양수산	-직렬 내 유사 직류 간 통폐합 필요 -일반해양-수산(일반수산, 수산제조, 수산증식, 어로, 수산물검사)-선박(선박항해, 일반선박)	직류 통합
	보건진료	-보건진료 직렬은 근무장소(보건진료원)의 차이점만 있을 뿐 직무 내용 및 전문성의 수준이 간호직렬과 유사하므로 간호직렬과 통합 -다만 일반 보건소에서의 간호직렬의 업무보다는 보건진료소에서 특수 업무가 요구되므로 직렬내 직류로 신설	통합
	의료기술	-보건소 내에 다양한 과 설치 경향 등 다양한 전문 업무 분야를 반영한 직류 설치 -의료기술(물리치료, 방사선, 임상병리, 치과위생)	세분화
	간호조무	-간호조무 직렬이 담당하는 업무는 간호직렬과 업무의 유사성은 높으나 난이도상 차이가 있으므로 간호직렬 내 직류로 통폐합	통합
	운전	-운전 직렬의 업무는 지자체의 주요 기능이 아니나 관리 차원의 수요가 있으므로 시설관리내 직류로 통폐합	통합
신설직렬	감사	-지자체 감사 업무는 내외부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문성이 요구됨	신설

<표 5-2> 방안별 직렬 개편 방안

개편방안	해당직렬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리직렬 • 항공직렬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호직렬+간호조무직렬+보건진료직렬 • 위생+시설관리 • 방호+시설관리 • 운전+시설관리 • 운수(직류)+시설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직렬: 일반 행정(법무, 노동, 문화홍보, 통계)-기업행정(재경, 국제통상, 기업행정) • 공업직렬: 기계(농업기계, 기계운전, 조선)-전자(일반전기, 전자)-화학(원자력, 금속, 섬유, 가스, 자원) • 해양수산업직렬: 일반해양-수산(일반수산, 수산제조, 수산증식, 어로, 수산물검사)-선박(선박항해, 일반선박)
세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직렬(문화재관리직류 신설) • 세무직렬(회계직류 신설), • 의료기술직렬(방사선직류, 임상병리직류, 물리치료직류 신설) • 사회복지직렬(아동청소년, 여성가족, 사회복지일반) • 전산직렬 내 정보보호직류 속기 직류 신설 • 간호직렬 내 간호조무직류, 보건진료직류 신설 • 시설관리 직렬 내 운전직류, 위생직류 신설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직렬
명칭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산직렬 --> 지식정보관리직렬

제2절 연구의 한계

1. 연구 방법상의 한계

- 본 연구는 지방공무원 일반직 공무원의 직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 이와 같은 주제의 선행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다양한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연구 내용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음
 - 일반직 공무원의 행정직군과 기술직군에 포함된 모든 직렬을 대상으로 하므로 관련된 자료가 충실히 확보되어야 하나 자료획득의 곤란성과 기존 연구의 부재로 인하여 분석이 제약되는 측면이 존재함
 -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에 관한 자료가 BRM 자료에 한정되어 분석에 한계가 있었음
 - 설문 조사에 응답한 자들이 행정직군에 치중에 있어 공평한 의견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음
 - 지방공무원 일반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조직이나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에 한정되지 않으나 본 연구에서는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으므로 한계가 있을 수 있음

2. 연구 내용상의 한계

-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깊이 다루지 않았던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에 관한 분석을 포함하여 분석의 범위를 확장시켰다는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음
 - 직렬과 직류를 대상으로 한 개편방안-폐지, 통합, 세분, 신설 등-에 한정되어 직군 개편에 관한 내용을 다루지 않았음
 - 업무의 범위, 전문성의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직무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참고문헌】

- 강성철(2004), 「지방자치단체 인사관리 시스템 개선방안」, 한국행정연구원.
- 김명식(2003), 우리나라 공직분류 체계의 개편방안,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 김영우(2005), 한국 공직 분류체계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안, 「한국행정연구」, 14(3): 273-294.
- 김택·유종해(2006), 「공무원 인적자원관리론」, 한국학술정보.
- 김판석·권경득(1999),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제도 개혁, 「한국행정학보」, 33(1): 99-118.
- 김필두·금창호(1999), 「지방자치단체의 공직분류체계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박충훈 외(2008), 「공무원조직의 효율적인 직급체제(정원모형)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 박충훈·강항선·남승하·우수정(2008), 「공무원조직의 효율적인 직급체제(정원모형)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 안전행정부(2014),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안전행정부.
- 안형기, 김종수(2007), 소용돌이의 장과 지방행정조직의 대응전략, 「한국정책과학회회보」, 11(3): 109-125.
- 유민봉(2002), 「한국인사행정론」, 서울: 박영사.
- _____ (2005),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정부의 민사제도와 운영의 특성, 「한국행정연구」, 14(4): 243-264.
- 이선우 외(2012), 「고품격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찰 직급구조 개선 방안」, 한국행정학회.
- 이선우·김영미·문명재·진종순(2012), 「효율적 인사관리를 위한 공무원 직군·직

- 렬 개편방안 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
- 이창길·문명재·이근주(2007), 「직무분석의 다양한 활용방안과 분석기법의 개발 연구」, 한국조직학회.
- 임승빈(1997), 「지방공무원 직렬재조정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2004), 「공직분류체계 개편 TF 보고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조경호·주효진(2004), 「공무원 직종, 직군, 직렬체계 정비방안」, 한국행정연구원.
- 조경호·주효진(2005), 공직구조 재설계 방안 연구 : 직종 직렬체계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43(1): 99-129.
- 조성대(2003), 국가 발전을 위한 인사행정의 개혁방안, 「한국정책과학학회보」, 7(1): 151-180.
- 주삼식(1999), 우리나라 공무원의 공직분류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성결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 최병대·송석취·금재덕(1999), 서울시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방안 - 전문보직경로제 도입방안 및 직렬/직류 재설정 방안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 하미승·권용수·이재은(2007), 공무원 직종·직급체계의 합리적 개편방안 연구: 공무원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6(2): 163-194.
- 하태권 외(1999), 「공직분류체계 개선방안」, 한국행정학회.
- 한영수·김필두(2004), 지방공무원 계급체계 개선방안, 「한국정책과학학회보」, 8(3): 250-275.
- 황상원·권용수(2009), 경찰 계급체계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보」, 8(2): 115-147.
- Boyne, G. A. (2003), "Sources of public service improvement: A critical review and research agenda,"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 Theory*, 13(3): 367-394.
- Bryson, J. M. (2011), *Strategic planning for public and nonprofit organizations: A guide to strengthening and sustaining organizational achievement*, Wiley: New York.
- Kim, S. (2002), "Participative management and job satisfaction: Lessons for management leadership,"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2(2): 231-241.
- Meier, K. J. and L. J. O'Toole (2002), "Public management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e effect of managerial quality,"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21(4): 629-643.
- O'Toole, L. J. and Meier, K. J. (2011), *Public Management: Organization, Governance, and Performa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Pynes, J. E. (2008), *Human resources management for public and nonprofit organizations: A strategic approach*, Wiley: New York.
- Rainey, H. G. (2003), *Understanding and Managing Public Organizations*, Jossey-Bass: San Francisco.

부록

1.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1)

<표 A-1>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제3조제1항 관련)

직군	직렬	직류	계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 행정	행정	일반행정	지방 관리관	지방 이사관	지방부 이사관	지방 서기관	지방행정 사무관	지방행정 주사	지방행정 주사보	지방행정 서기	지방행정 서기보	
		법무행정										
		재경										
		국제통상										
		노동										
		문화홍보										
		감사										
		통계										
	기업행정											
	운수											
	세무	지방세						지방세무 주사	지방세무 주사보	지방세무 서기	지방세무 서기보	
	전산	전산						지방전산 주사	지방전산 주사보	지방전산 서기	지방전산 서기보	
	교육 행정	교육행정						지방 교육행정 사무관	지방 교육행정 주사	지방 교육행정 주사보	지방 교육행정 서기	지방 교육행정 서기보
	사회 복지	사회복지						지방 사회복지 사무관	지방 사회복지 주사	지방 사회복지 주사보	지방 사회복지 서기	지방 사회복지 서기보
	사서	사서						지방사서 사무관	지방사서 주사	지방사서 주사보	지방사서 서기	지방사서 서기보
	속기	속기						지방속기 사무관	지방속기 주사	지방속기 주사보	지방속기 서기	지방속기 서기보
방호	방호						지방방호 사무관	지방방호 주사	지방방호 주사보	지방방호 서기	지방방호 서기보	
	경비											
2. 기술	공업	일반기계	지방 관리관	지방 이사관	지방부 이사관	지방 기술 서기관	지방공업 사무관	지방공업 주사	지방공업 주사보	지방공업 서기	지방공업 서기보	
		농업기계										
		기계운전										
		조선										
		일반전기										
		전자										
		원자력										
		금속										
야금												

직군	직렬	직류	계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섬유											
		일반화공											
		가스											
		자원											
	농업	일반농업						지방농업 사무관	지방농업 주사	지방농업 주사보	지방농업 서기	지방농업 서기보	
		잡업											
		식물검역											
		농화학											
		축산											
		생명유전											
	녹지	산림자원						지방녹지 사무관	지방녹지 주사	지방녹지 주사보	지방녹지 서기	지방녹지 서기보	
		산림보호											
		산림이용											
		조경											
	수의	수의						지방수의 사무관	지방수의 주사	지방수의 주사보			
	해양 수산	일반해양											
		일반수산											
		수산제조											
		수산증식											
		어 로											
		수산물 검사						지방 해양수산사 무관	지방 해양수산 주사	지방 해양수산 주사보	지방 해양수산 서기	지방 해양수산 서기보	
		일반선박											
		선박항해											
		선박기관											
	해양교통 시설												
	보건	보건						지방보건 사무관	지방보건 주사	지방보건 주사보	지방보건 서기	지방보건 서기보	
	식품 위생	식품위생						지방 식품위생 사무관	지방 식품위생 주사	지방 식품위생 주사보	지방 식품위생 서기	지방 식품위생 서기보	
	의료 기술	의료기술						지방 의료기술사 무관	지방 의료기술 주사	지방 의료기술 주사보	지방 의료기술 서기	지방 의료기술 서기보	
	의무	일반의무						지방의무 사무관					
		치 무											
	약무	약 무						지방약무 사무관	지방약무 주사	지방약무 주사보			
		약 제											
	간호	간호						지방간호사 무관	지방간호 주사	지방간호 주사보	지방간호 서기		

직군	직렬	직류	계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보건	보건진료					지방보건진료사무관	지방보건진료주사	지방보건진료주사보	지방보건진료서기	
	환경	일반환경					지방환경사무관	지방환경주사	지방환경주사보	지방환경서기	지방환경서기보
		수질									
		대기									
	항공	폐기물					지방항공사무관	지방항공주사	지방항공주사보	지방항공서기	지방항공서기보
		일반항공									
		조종									
	시설	정비					지방시설사무관	지방시설주사	지방시설주사보	지방시설서기	지방시설서기보
		도시계획									
		일반토목									
		농업토목									
		수도토목									
		건축									
		지적									
		측지									
	방재안전	교통시설					지방방재안전사무관	지방방재안전주사	지방방재안전주사보	지방방재안전서기	지방방재안전서기보
		도시교통설계									
	방송통신	디자인					지방방송통신사무관	지방방송통신주사	지방방송통신주사보	지방방송통신서기	지방방송통신서기보
		방재안전									
		통신사	통신사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기술											
위생	위생					지방위생사무관	지방위생주사	지방위생주사보	지방위생서기	지방위생서기보	
	사역										
조리	조리					지방조리사무관	지방조리주사	지방조리주사보	지방조리서기	지방조리서기보	
간호조무	간호조무					지방간호조무사무관	지방간호조무주사	지방간호조무주사보	지방간호조무서기	지방간호조무서기보	
시설관리	시설관리					지방시설관리사무관	지방시설관리주사	지방시설관리주사보	지방시설관리서기	지방시설관리서기보	
운전	운전					지방운전사무관	지방운전주사	지방운전주사보	지방운전서기	지방운전서기보	
3. 관리운영	토목운영	토목운영					지방토목운영주사	지방토목운영주사보	지방토목운영서기	지방토목운영서기보	

직군	직렬	직류	계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건축 운영	건축운영							지방건축 운영주사	지방건축 운영주사보	지방건축 운영서기	지방건축 운영서기보
		배관운영										
	통신 운영	통신 운영							지방통신 운영주사	지방통신 운영주사보	지방통신 운영서기	지방통신 운영서기보
	전화 상담 운영	전화상담 운영							지방 전화상담 운영주사	지방 전화상담 운영주사보	지방 전화상담 운영서기	지방 전화상담 운영서기보
	전기 운영	전기 운영							지방전기 운영주사	지방전기 운영주사보	지방전기 운영서기	지방전기 운영서기보
	기계 운영	기계운영							지방기계 운영주사	지방기계 운영주사보	지방기계 운영서기	지방기계 운영서기보
		영사운영										
	열관리 운영	열관리 운영							지방 열관리 운영주사	지방 열관리 운영주사보	지방 열관리 운영서기	지방 열관리 운영서기보
	화공 운영	화공 운영							지방화공 운영주사	지방화공 운영주사보	지방화공 운영서기	지방화공 운영서기보
	가스 운영	가스 운영							지방가스 운영주사	지방가스 운영주사보	지방가스 운영서기	지방가스 운영서기보
	기후 환경 운영	기후환경 운영							지방 기후환경 운영주사	지방 기후환경 운영주사보	지방 기후환경 운영서기	지방 기후환경 운영서기보
	선박 항해 운영	선박항해 운영							지방 선박항해 운영주사	지방 선박항해 운영주사보	지방 선박항해 운영서기	지방 선박항해 운영서기보
	선박 기관 운영	선박기관 운영							지방 선박기관 운영주사	지방 선박기관 운영주사보	지방 선박기관 운영서기	지방 선박기관 운영서기보
	농림 운영	영림운영							지방농림 운영주사	지방농림 운영주사보	지방농림 운영서기	지방농림 운영서기보
		원예운영										
	사육 운영	사육 운영							지방사육 운영주사	지방사육 운영주사보	지방사육 운영서기	지방사육 운영서기보
	보건 운영	보건 운영							지방보건 운영주사	지방보건 운영주사보	지방보건 운영서기	지방보건 운영서기보
	사무 운영	워드운영										
		필기운영							지방사무 운영주사	지방사무 운영주사보	지방사무 운영서기	지방사무 운영서기보
계리운영												
사서운영												
	전산운영											

2. 설문조사표

지방공무원 직렬체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서

저희들은 행정자치부의 정책과제인 「지방공무원 직렬체계 개선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의 목적은 현행 지방공무원의 직군·직렬체계 등 직급체계의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의견은 공직분류체계를 개선하고 재설계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본 조사의 결과는 연구를 위한 통계처리에만 사용되고, 절대로 다른 목적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시더라도 우리나라 지방 인사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책임자: 강영주(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공동연구자: 금창호(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화: 02-3488-7336 팩스: 02-3488-7304

E-mail: kyj77@krila.re.kr

2015.5.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 다음의 <표 1>을 참고하여 아래의 물음에 답하시오

<표 1> 일반직 직군·직렬 구분의 예

직군	직렬(직류)
행정	행정(일반행정, 법무행정, 재경, 국제통상, 노동, 문화홍보, 감사, 통계, 기업행정, 운수), 세무(지방세), 전산(전산), 교육행정(교육행정), 사회복지(사회복지), 사서(사서), 속기(속기), 방호(방호, 경비)
기술	공업(일반기계, 농업기계, 기계운전, 조선, 일반전기, 전자, 원자력, 금속, 야금, 섬유, 일반화학, 가스, 자원), 농업(일반농업, 잠업, 식물검역, 농화학, 축산, 생명유전), 녹지(산림자원, 산림보호, 산림이용, 조경), 수의(수의), 해양수산(일반해양, 일반수산, 수산제조, 수산증식, 어로, 수산물검사, 일반선박, 선박항해, 선박기관, 해양교통시설), 보건(보건), 식품위생(식품위생), 의료기술(의료기술), 의무(일반의무, 치무), 약무(약무, 약제), 간호(간호), 보건진료(보건진료), 환경(일반환경, 수질, 대기, 폐기물), 항공(일반항공, 조종, 경비), 시설(도시계획, 일반토목, 농업토목 수도토목, 건축, 지적, 측지, 교통시설, 도시교통설계, 디자인), 방재안전(방재안전), 방송통신(통신사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기술), 위생(위생, 사역), 조리(조리), 간호조무(간호조무), 시설관리(시설관리), 운전(운전)

A. 지방공무원 직급(직렬)체계 전반에 관한 질문

- 현재 지방공무원 직급체계 전반(직렬구분·계급구분)에 대하여 개선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 필요하지 않다 ③ 그저 그렇다 ④ 필요하다 ⑤ 아주 필요하다
- 지방공무원 직급(직렬)체계의 문제점이 있다면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복 선택가능)
 ① 각 직렬간 승진기회 등 인사운영상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② 현재의 직급체계로는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가 어려우므로
 ③ 현행 직렬체계의 구분기준이 일관적이지 않아 각 직렬 간 담당 직무의 내용이 중복되는 등 배타적인 구분이 되지 않으므로
 ④ 각 직렬의 담당 직무의 예측이 어려우므로
 ⑤ 국가직 공무원의 직렬체계와 유사하여 지방고유의 기능이 반영된 직렬이 미흡하므로
 ⑥ 지방 행정과 관련 없는 직렬이 존재하므로
 ⑦ 기타(이유 기재: _____)

B. 직렬 구분에 관한 질문

1. 다음의 직렬 중 폐지하여야 할 직렬(또는 직류)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중복선택가능)

- ① 속기 ② 식품위생 ③ 의무 ④ 약무 ⑤ 항공 ⑥ 방재안전 ⑦ 조리 ⑧ 간호조무
- ⑨ 위생 ⑩ 교육행정 ⑪ 야금 ⑫ 일반회공 ⑬ 가스운영 ⑭ 기후환경운영
- ⑮ 기타(폐지직렬기재: _____) ⑯ 없음(☞ 1-2번으로 가시오)

1-1. 해당 직렬을 폐지해야 한다고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해당 직렬에 인원이 없어서
- ② 앞으로 행정수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 ③ 다른 직렬과 업무가 유사해서(업무내용이 유사한 다른 직렬명 기재 : _____)
- ④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보다 민간위탁 등이 효율적이므로
- ⑤ 기타 (세부내용 기재: _____)

☞ 2번으로 가시오

1-2. 폐지해야 할 직렬이 없다고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현재 수요는 없지만 향후 행정수요 발생이 예상되므로
- ② 전문적인 직무를 담당하여 다른 직렬이 대체할 수 없으므로
- ③ 폐지하여 다른 직렬과 통합할 경우 채용기준, 승진소요기간 등의 차이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므로
- ④ 기타 (세부내용 기재: _____)

2. 다음 직렬 중 통합해야 할 직렬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중복선택가능)

- ① 행정-사회복지 ② 보건-간호-보건진료-간호조무 ③ 보건-간호 ④ 보건-보건진료
- ⑤ 간호-보건진료-간호조무 ⑥ 간호-보건진료 ⑦ 간호-간호조무 ⑧ 보건진료-간호조무
- ⑨ 식품위생-조리 ⑩ 위생-시설관리 ⑪ 방호-시설관리
- ⑫ 기타(통합직렬기재: _____) ⑬ 없음(☞ 2-2번으로 가시오)

2-1. 해당 직렬 간 통합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해당직렬이 담당하는 직무가 유사하므로
- ② 승진, 전보 등 인사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 ③ 해당 직렬의 통합요구가 빈번하여
- ④ 기타 (세부내용 기재: _____)

☞ 3번으로 가시오

2-2. 통합할 직렬이 없다고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각 직렬별로 전문적인 직무를 담당하여 대체가 불가능하므로
- ② 각 직렬마다 채용조건, 승진기간 등의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 ③ 각 직렬간 업무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능력의 차이가 현격하므로
- ④ 기타 (세부내용 기재: _____)

3. 다음 직렬 중 직렬내 직류를 통합해야 하는 직렬은 무엇입니까? (중복선택가능)

- ① 행정 ② 공업 ③ 해양수산 ④ 시설 ⑤ 기타 ⑥ 없음(☞ 4번으로 가시오)

3-1. 직렬내 직류를 통합할 경우 어떻게 재분류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복선택가능)

- ① 행정 : 일반행정(법무, 노동, 문화홍보, 감사 등)* - 기업행정(재경, 국제통상, 기업행정 등)
- ② 공업 : 기계(농업기계, 기계운전, 조선 등) - 전기(전자 등) - 화공(금속, 섬유, 가스, 자원 등)
- ③ 해양수산 : 해양 - 수산(수산제조, 수산증식 등) - 선박(선박항해, 선박기관 등)
- ④ 시설 : 도시계획 - 토목(농업토목, 수도토목 등) - 건축 - 지적(측지 등) - 교통(교통시설, 교통설계 등)
- ⑤ 기타 : (세부 분류기준 기재 : _____)

* 일반행정 직류안에 법무, 노동, 문화홍보 등을 통합함을 뜻함

4. 현재 직렬들 중 직류를 세분화 할 필요성이 있는 직렬은 무엇입니까?

- ① 전산직렬(전산개발 직류, 정보보호 직류 등 신설)
- ② 사회복지직렬(아동직류, 노인직류, 상담직류 등 신설)

- ③ 의료기술직렬(방사선직류, 임상병리직류, 물리치료직류, 최과위생사직류 등 신설)
- ④ 세무직렬(지방세직류, 회계직류 등 신설)
- ⑤ 기타(세부 분류기준 기재: _____)
- ⑥ 없음(☞ 5번으로 가시오)

4-1. 직류를 세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해당직렬의 업무가 다양하여 세분화하여 전문화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 ② 해당직렬의 공무원 수가 많아 직류별 인사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 ③ 향후 특정분야의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예: 정보보호관련 행정수요 증가 예상)
- ④ 기타 (직류신설 이유 기재: _____)

5. 현재 직렬들 외에 새롭게 신설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직렬(직류)가 있다면 그 직렬과 이유를 써 주십시오.

	신설직렬	신설 이유
행정직군	예)감사직렬	
기술직군		

C. 기타 질문

1. 직렬들 중에서 현행 계급체계의 적용이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 직렬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수의, 계급에 따른 업무상 난이도의 차별이 없다)

2. 직렬들 중에서 명칭 변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직렬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시설관리, 직무의 특성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음)

3. 현재 지방공무원 계급체계에 대하여 개선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 필요하지 않다 ③ 그저 그렇다 ④ 필요하다 ⑤ 아주 필요하다

4. 현행 지방공무원 계급체계의 문제점이 있다면 다음 중 무엇입니까? 모두 고르시오.

- ① 승진에 대한 지나친 관심으로 업무 생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② 새로운 행정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가 어렵다
- ③ 지방과 중앙, 광역과 기초 사이에 균형이 잘 맞지 않다
- ④ 기타(이유 _____)

5. 현행 계급체계를 개선한다면, 어떤 것이 바람직하십니까?

- ① 현행 9등급 체계를 확대(예: 보수등급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② 현행 9등급 체계를 축소(예: 기획계급-관리계급-실무계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③ 모르겠다(☞ D-1번으로 가시오)
- ④ 기타(_____)

5-1. 현행 일반직 계급체계를 개선한다면 그 이유(필요성)는 무엇입니까?

☞ 이유 또는 필요성

D. 인구통계학적 질문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연령은? ① 20-29세 ② 30-39세 ③ 40-49세 ④ 50-59세 ⑤ 60세 이상
3. 귀하가 공직생활을 시작한 연도는? (_____연도)
4. 현직급과 임용 직급은? ① 현 직급(_____급) ② 임용시 직급(_____급)
5. 최종학력은?
① 고졸이하 ② 전문대졸 ③ 대졸 ④ 석사(전공:_____) ⑤ 박사(전공:_____)
6. 귀하가 근무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종류는?
① 특별시 ② 광역시 ③ 도 ④ 시 ⑤ 군 ⑥ 자치구
7. 현재 귀하가 속한 직렬(또는 직류)은 무엇입니까? (_____)
8. 다음 중 귀하에게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① 인사담당자 ② 노조 임원 ③ ①, ② 모두 해당사항 없음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